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6. 6.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목 차

1. 인사청문대상 ·····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 1

가. 임명동의안 제출 ····· 1

나. 임명동의안 회부 ····· 1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기간 ····· 3

다. 회의경과 ····· 3

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7

마.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7

바. 서면질의 제출 ····· 10

사.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11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12

가. 위원장(백혜련) 인사말씀 ····· 12

나. 국무총리(한성숙) 모두발언 ····· 13

다.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7

라. 국무총리(한성숙) 마무리 발언 ····· 42

마. 위원장(백혜련) 마무리 말씀 ····· 43

5. 심사결과 요약 ····· 44
가.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사항 ····· 44
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 ····· 45
다. 본인 및 가족 등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 51
6. 종합의견 ····· 53
7. 첨부자료 ····· 55
<참고자료 1> 국무총리(한성숙) 이력서 ····· 56
<참고자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59
<참고자료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 60
<참고자료 4> 국무총리(한성숙) 서면질의 답변서 ····· 65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인사청문대상

국무총리(한성숙)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6. 6. 10.(대통령)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6. 6. 11.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6. 6. 18.) 임명동의안 상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요구
제2차 위원회(2026. 6. 25.)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26. 6. 26.) 인사청문회
제4차 위원회(2026. 6. 29.) 경과보고서 상정
제5차 위원회(2026. 6. 30.) 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 2026년 6월 10일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정수: 13인)가 자동 구성됨.

○ 2026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선임 통지가 있었음.

○ 2026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사·보임 통지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봉·전용기 위원 사임, 박선원·백승아 위원 보임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7인)	김동아 위원	김한규 위원	박균택 위원
	박선원 위원	백승아 위원	백혜련 위원
	이소영 위원		
국민의힘(5인)	강승규 위원	김선교 위원	김희정 위원
	유영하 위원	조정훈 위원	
무소속(1인)	최혁진 위원		

○ 2026년 6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백혜련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김한규위원(더불어민주당)
  강승규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기간: 2026. 6. 10. ~ 2026. 6. 30.(21일간)

○ 임명동의안 제출 및 「인사청문회법」상 특위 구성: 2026. 6. 10.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6. 6. 10. ~ 2026. 6. 17.(8일간)

- 제1차 위원회(2026. 6. 18.)

○ 인사청문회 실시: 2026. 6. 25. ~ 6. 26.(2일간)

- 제2차 위원회(2026. 6. 25.)

- 제3차 위원회(2026. 6. 26.)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6. 6. 30.

- 제5차 위원회(2026. 6. 30.)

다. 회의경과

○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가 개회됨.

- 그 중 제2차 위원회(2026. 6. 25.) 및 제3차 위원회(2026. 6. 26.)는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임.

○ 2026년 6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함.

-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함.

○ 2026년 6월 25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인사청문회 개의선포, 위원장 인사말씀, 국무총리(한성숙) 선서, 모두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별 주질의 및 제1차 보충질의는 각 7분, 제2차 보충질의는 10분, 제3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였음.

○ 2026년 6월 26일 제3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별 주질의 및 제1차 보충질의는 각 7분, 제2차 보충질의는 10분, 제3차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였음.

○ 2026년 6월 29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함.

○ 2026년 6월 30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사 경 과	비 고
1	<제1차> 2026.6.18.(목) (15: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선임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 -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자료제출요구의 건 의결	* 장 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2	<제2차> 2026.6.25.(목) (10: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국무총리(한성숙) - 선 서 - 모두발언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질의·답변 - 주질의(위원별 각 7분) - 제1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7분) - 제2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10분) - 제3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5분)	* 장 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3	<제3차> 2026.6.26.(금) (10: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질의·답변(계속) - 주질의(위원별 각 7분) - 제1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7분) - 제2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10분) - 제3차 보충질의(위원별 각 5분)	* 장 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차수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사 경 과	비 고
4	**<제4차>** 2026.6.29.(월) (16: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	* 장 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5	**<제5차>** 2026.6.30.(화) (11: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 장 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실)

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해당 없음

마.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1) 교섭단체별 요구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1,424	216	1,208	0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단위: 건)

기관	요구	제출	미제출	
			건수	사유
TBT파트너스	6	5	1	영업비밀
감사원	11	8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강남구청	1	1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4	0	
경기도청	15	15	0	
경찰청	55	31	24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고용노동부	33	32	1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공무원연금공단	4	4	0	
공정거래위원회	9	9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6	0	
관세청	34	13	21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비소관사항
교육부	25	20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국가보훈부	3	3	0	
국가인권위원회	8	4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449	364	85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미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26	16	10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국민권익위원회	11	2	9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국민연금공단	20	16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미보유

기관	요구	제출	미제출	
			건수	사유
국세청	116	63	53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미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국토교통부	52	41	11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비소관사항
국회사무처	1	1	0	
근로복지공단	2	2	0	
금융감독원	36	1	35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	3	0	3	미보유
기획예산처	3	2	1	내부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8	6	2	기업의 영업상 이익침해우려
네이버	34	18	16	영업비밀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2	0	2	미보유
농림축산식품부	7	3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미보유
대법원(법원행정처)	51	35	16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형사소송법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대통령비서실	5	1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미보유
대한적십자사	8	0	8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더불어민주당	2	0	2	미응답
마스턴67호강남원피에프브이 주식회사	12	12	0	
문화체육관광부	1	1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5	0	
법무부	40	19	2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병무청	2	2	0	
보건복지부	6	6	0	
서울특별시청	5	5	0	
성남시청	7	6	1	미보유(수사 관련 검찰 제출 사항)
수림재	5	0	5	미응답
숙명여자대학교	2	0	2	미응답
신한은행	3	0	3	계약관계에 따름
신한캐피탈	1	1	0	
양주시청	11	5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기관	요구	제출	미제출	
			건수	사유
양평군청	12	12	0	
외교부	9	6	3	미보유
의정부세무서	1	0	1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인사혁신처	6	6	0	
재외동포청	2	2	0	
재정경제부	3	3	0	
종로구청	21	2	19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에스앤디파트너즈	9	4	5	회사 내부규정(개인정보보호 등)
중소벤처기업부	98	97	1	미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	37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지식재산처	2	2	0	
한국고용정보원	1	1	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2	0	
한국면세점협회	5	0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한국산업은행	4	4	0	
한국연구재단	3	3	0	
한국은행	18	0	18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행정안전부	37	18	19	개인정보 이용제공 미동의, 비소관
홈앤쇼핑	1	1	0	
계	1,424	988	436	

바. 서면질의 제출

o 서면질의 건수: 총 987건

교섭단체	위원명	건수
위원장	백 혜 련	23
더불어민주당	김 한 규	20
	김 동 아	15
	박 균 택	51
	박 선 원	0
	백 승 아	52
	이 소 영	0
국민의힘	강 승 규	60
	김 선 교	175
	김 희 정	290
	유 영 하	88
	조 정 훈	183
비교섭단체(무소속)	최 혁 진	30
합 계		**987**

o **국무총리(한성숙)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4>

사.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o 구두질의요지서 건수: 총 102건

교섭단체	위원명	건수
위원장	백 혜 련	1
더불어민주당	김 한 규	9
	김 동 아	14
	박 균 택	19
	박 선 원	6
	백 승 아	12
	이 소 영	0
국민의힘	강 승 규	8
	김 선 교	14
	김 희 정	5
	유 영 하	14
	조 정 훈	0
비교섭단체(무소속)	최 혁 진	0
합 계		102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백혜련) 인사말씀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직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국정통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로 기대합니다.

한성숙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 국무총리(한성숙) 모두발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큰 성과를 이끌어 내신 김민석 총리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소중한 토대 위에서 민생 안정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했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은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 교육과 의료 등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구글 딥마인드의 CEO는 범용인공지능이 5년 내 도래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앞으로의 몇 년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게는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한 제조역량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연결하여 더 큰 기회와 성장을 도모하고,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더 넓은 지역이 성장의 공간이 되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나아가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살아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대한민국의 도약이 시작되던 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창업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세상에 도전했고, 그렇게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바꾸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혁신 기술이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과 직업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항상 작고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아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기술과 사람을 잇고, 아이디어와 시장을 연결하며, 시장과 정부가 협력할 때 혁신의 힘은 배가 되고, 포용성도 넓어졌습니다. 저는 30년 현장에서 체득한 이 경험과 철학을 국정운영에도 쏟아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어,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서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울타리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전반에 속도감 있는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과감한 공개와 연계를 통해 정부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AI 대전환의 결실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AI 전환과 수출 호황을 통해 축적된 과실은 차세대 첨단 산업, 미래 원천기술, 그리고 창업과 혁신 생태계 확충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잠재성장률 곡선을 반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의 자립, 지방주도 성장,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세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나 담대하게 도전하고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세대가 각자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경험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외의 그늘이 커집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을 위해 대전환의 과실을 사회안전망 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약자를 보듬는 두터운 배려는 더 크게, 더 오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혁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넘게 지방 도시의 건설 공무원이셨습니다. 비가 와도, 해가 너무 쨍해도, 눈이 많이 와도 항상 비상 출근하셔서, 아버지를 집에서 뵈었던 날이 많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와 공직이 갖는 책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창업을 통해 나름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려 했던 젊은 시절의 저에게 아버지는 '사람은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하지만 무거웠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삶의 이정표이자 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일만 하는 총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

하여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국정의 수많은 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현장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가슴에 새기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국무총리(한성숙)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와 후보자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가 민생과 중소벤처 기업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음. 디지털 시대 초기에 남들보다 앞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임.
○ 최초의 기업가 출신 총리 후보인데, 기술기업을 이끌던 혁신 기업가를 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IT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국가에 적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살려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AI 기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봄.
○ 현(現)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국정업무 중 특별히 관심갖고 승계·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現) 총리가 전 분야에 걸쳐 토대를 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함. 그 중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프로젝트를 잘 이어받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AI 허브 관련된 부분은 중요성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공적 영역은 모두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적 자리가 갖는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고 임하겠음.
○ 2020년 네이버 대표이사 당시, 네이버 입점 소상공인 보호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에 반대했는데, 이는 공적 관점에서는 부적절함. 공과 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적인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2020년 당시 입장은 네이버라는 회사의 대표로서의 입장이었음.
○ 후보자는 네이버 CEO 출신으로 IT 플랫폼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국토금융, 재정, 복지 등 다른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 경험은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와 다른 조직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닥터나우금지법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복지부 간 이견이 있었는데, 엄격한 사후 규제입법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국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고, 통합된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회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경제 논리, 예산의 논리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사업도 많고, 자살예방정책(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기술탈취(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부처이기주의로 다수 부처에 중복하여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로서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을 설득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신지?	○ 따로 해야 할 부분은 따로 하고,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함께 모여서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음.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국무조정실 역할도 강화하겠음.
○ 현(現) 총리가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였던 것처럼 후보자도 여·야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국회의원은 각 지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음.
○ 후보자는 정치협상 등 정치 현장 경험이 부족한데, 앞으로 야당 의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생각함.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중국이 국가주도로 기술혁신 속도를 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 장관으로서 성과는 인정되지만, 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가적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사례들이 정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정부 내 인적·물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국무총리는 사회적 갈등 조정 시에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임. 네이버 출신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그 입점 소상공인 간의 갈등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길 바람.	○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은 제재할 필요성 있음.
○ 역대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한도 있는데, 인사검증 기준에 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 총리에게는 인사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지는 않겠으나, 살펴보겠음.
○ 최근,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폐합, 후방경계 민간위탁, 북한 군사분계선 작업, 포천 예비군 사망사고 등 안보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인사권자 영역이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해임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문제임에도 관계부처간 이견, 관료적 접근 등으로 진행이 더딘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우리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길 바람. ○ 정책 철학의 일관성 문제, 정책 조정 역량의 문제,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가족 간의 거래, 증여세 납부 등에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후보자의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사회 변화에 긍정적 변화만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후보자가 맡을 역할들에 대해 우려가 존재함.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으며, 국민 심기에 적합한 국무총리 후보자인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총리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함.	○ 속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조정 및 소통 역할에도 노력하겠음.

(2)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제·재정·조세 분야]	
○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수출 둔화・내수 침체・자영업자 폐업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음.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총리로서 어떠한 거시경제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 소상공인 어려운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당면하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금융 관련하여 이자부담 조정할 것인지, 폐업위기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가깝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미중 무역갈등 심화, 수출 둔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 반도체를 위시한 조선・방산 등 대기업 중심 구조는 잘 성장되어 있다고 생각함.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국이 입지로 선호되는 이유는 싼 전기요금 외에도 제조 능력과 자원, 인력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중소기업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고환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환율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동의하는지?	○ 중동전쟁 영향,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수익 실현 등이 있었다고 생각함. 고환율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수출 단계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모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고물가 문제에 대한 의견은?	○ 중동전쟁 이후 모든 국가의 물가가 올랐고, 석유가격 관리 등 국가적 관리 노력을 해왔는데, 물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출생률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한 통화가 부동산 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철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반적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양극화 우려가 있고, 기업 간, 노동자 간, 세대 간 사회적 양극화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도 있는데, 사회 통합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 경제 부문의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청년층에게는 기회 부족의 문제가 있음. 중소기업에게는 환경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반도체 산업은 호황이지만,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은 고통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의 생태계 강화는 무척 중요하고, 대기업 또한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음.
○ 저가형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필수품이므로, 공급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 챙겨보겠음.
○ AI 대전환이 가져올 위기를 고려할 때, 경제정책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AI를 통하여 창출되는 부가 기본사회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줄 것	○ 공정한 분배와 거래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겠음.
○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인지?	○ 모태펀드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장 단계에서도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의 연계가 잘 된다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R&D,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에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장관 시절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고, 대미 관세협상과 중동 전쟁 등에 대한 신속 대응, K뷰티 수출 및 온라인 수출 등에 중점 지원했음.
○ 제조업, 전통산업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 중소기업 변화의 새로운 흐름은 가벼운 소비재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하고 있음. 전통 제조라고 하는 뿌리기업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제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한 공장 환경 구축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통시장의 수수료 문제, 대출 문제, 소비둔화 문제가 있고, 도미노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전반적인 내수를 높이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 대중소 협력체계, 은행과의 협력체계도 만들어 가고 있음.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계의 기대가 큼. 국무총리가 되면 규제개혁과 관련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람.	○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신산업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함. 앞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배달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집단 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발전 공기업 통합과 관련하여 총리실의 역할이 필요	○ 잘 살펴보겠음.
○ 여타 정부 사업과 달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참여자의 참여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고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서, 전 정부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관련 부처들이 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정부의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구상한 것임.
○ 창업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아이디어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원본증명(아이디어 등록제) 외에 거래 가격이나 거래 원칙 등을 정비하면 실제로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탈취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징벌적인 수준으로 제재 강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 등 법적인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술탈취 근절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추진해 왔음. 소송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적인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기술이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과 관련 규제가 미흡한 수준이고, 여전히 데이터 수집을 위한 테스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기술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긴 함. 중요한 과제로 살펴보겠음.
○ 테슬라 차량 등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자율주행 차량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 국내 산업 보호가 중요한지 소비자의 삶의 증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그 부분은 살펴보겠음.
○ 청년미래적금의 연령 상한 상향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함. 이제 시작인 만큼 사업 내용과 예산 등을 함께 살펴보겠음.
○ 청년미래적금 신청에 인원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형ISA는 청	○ 좋은 조건의 상품이고,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큰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봄. 청년미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허용 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제도가 설계된 것인지 의구심이 듦.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적금은 돈을 적립하는 적금형 상품이고, 청년형ISA는 투자 관련된 부분들까지 가능하게 하는 상품임. 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음.
○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부담을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전력수요를 유발하는 데이터센터 운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 AI는 미래산업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력수요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후보자의 이력은 IT 플랫폼과 벤처·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 현장과의 접점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데, 농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함. 농업 발전과 관련해서 IT 분야와 연결은 스마트 농업 부분 또는 스마트팜 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최근 제주 노선의 항공좌석이 크게 감소하여 국민의 이동권과 후생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해법이 있을지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부동산 정책 분야]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동의하는지?	○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함.
○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음. 또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 대신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을 차별화해 적용해야 함. 후보자의 견해는?	○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명확히 갖고 있지 못함.
○ 실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	○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다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지방균형발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거주자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일방통행 정책을 바로잡을 필요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주제로 보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주택 공급을 전폭적으로 빠르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사금융제도로 오늘날의 시장환경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전세 축소를 현 정부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선적인 해석이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전세제도의 한계와 대안 마련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음.	○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겠으나, 투기 문제 등 여러 이견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대체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의 소지가 있으며, 집권기간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 및 해외 주요 도시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정책 방향에 동의하나, 모든 정책이 잘 작동한다는 의미는 아님.
○ 현 정부의 임기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기를 원하는지,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상승하기를 원하는지 등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임.
○ 재건축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답변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월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지?	○ 1년 차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함. 정책적으로 청년 등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전세 지원 정책은 더 강화해 가고 있으며, 투기적 수요 관련된 부분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음.
○ 부동산과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 그간 저보다 오래 고민해 온 분들의 의견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미치는 사안은 대통령의 견해를 따르기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잘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음.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아니므로 많은 고민을 해 온 대통령의 의견에 나름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토론할 것임.
○ 전월세로 살아보거나,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 집이 없을 당시에는 전세, 월세로 살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적은 없음.
○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죄라고 보는가? 대출은 민간 금융의 역할인데, 시장의 원칙을 정부가 강제로 조율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함.	○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실거주 위주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가격 상승은 금융 규제 외에도 누적된 공급 부족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유동성 확대 원인도 있다고 봄.
○ 최근의 대출규제는 현금 보유자에게만 유리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와 같은 대출규제로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현행 대출규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정책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비슷하게 생각함.
○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내 전세자금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측면은 없는지?	○ 특정 기업의 복지제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그린벨트 해제,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 강제 이주, 대규모 공사로 인한 거주 환경 악화, 안전사고, 입주 후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단계적으로 발생함. 공급대책을 진행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	○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 때 집도 필요하지만 주거 인프라가 같이 설계되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음.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사회 분야]	
○ AI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학교	○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이 중요함.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정형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교육 간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된 답을 하는 응시자보다, 다른 답변, 다양한 답변을 하는 인재, 문제 해결 경험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함.
○ 이공계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일본처럼 파격적 처우와 자율적 연구 환경 보장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총리로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람.	○ 기술 인재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보상체계 개선과 정부 내 이공계 인력 비율 제고 등에 대해 검토하겠음.
○ 유보통합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수많은 기관이 관여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과제임. 이처럼 부처 간 이견·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생각인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들이 많이 엮여 있는 일이고, 중앙부처가 정하는 정책과 지방정부가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우선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함.
○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시민으로서의 관련된 권리와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함.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 사항들을 챙겨보겠음.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큰 학교 선호현상과 자퇴율 급증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므로 개선안이 필요함. 교사와 학부모의 역학관계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람.	○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겠음.
○ 교사들의 교권 위축, 학생들의 교내 활동 위축 지적이 있는데, 최근 수학여행, 소풍, 운동회 등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해당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으나, 최근 교권의 현 상황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그동안 교육청 등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 교육부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 과도한 민원 제기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부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잘 살펴보겠음.
○ 초중고 학생 자해·자살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가가 개입했을 때 자살률이 감	○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소한다는 해외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가 생애주기별·위험군별로 개입하여야 함. 후보자의 견해는?	
○ 청소년 SNS 과의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일상생활이나 정신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부분의 10대가 매일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청소년의 SNS 체류 시간을 늘리는 알고리즘 설계나, 중독을 유발하는 유도 장치가 문제임.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을 전면 금지하였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으나,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토론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겠음. 특히, 10대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10대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봄.
○ 대학가 주변에 부동산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주거에 관해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심각성을 후보자께서도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	○ 현재 서울 주변 땅값이 올라가면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함. 청년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음.
○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총리실에 20대부터 30대 중반의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정책 기획단 또는 청년정책 집행감시단 등을 조직하여 청년정책을 확실히 추진했으면 함.	○ 지금보다는 좀 더 전 부처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총리 후보자 지명 후 첫 공개 일정이 청년들과의 식사인데, 이유가 있는지? 총리가 되면 청년부의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 총리실에서 일하는 청년 공직자들과 만났는데,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청년의 일자리이고, 다음은 청년 주택 및 자산 형성, 소외된 청년에 대한 부분임.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 현재 80%, 100% 정도 중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음.
○ 청년층의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하락 중임. 청년층 고용 문제는 단순히 경기 변동이나 개인 구직자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AI전환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함. 후보자의 견해는?	○ 청년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올해 정부의 청년정책 예산규모는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니나, 청년층의 체감도는 낮아 보임. 이는 부처간 칸막이 문제와 청년정책에 청년층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최근 청년정책전담기구로서 청년처 신설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의 핵심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라고 봄. 후보자의 견해는?	○ 청년이 정책 수립 주체로 들어와야 하고, 청년정책의 통합·조정 필요성에 동의함.
○ 비경제활동 청년 증가 등의 청년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후보자의 견해는?	○ 청년층 일자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임. 정부에서 범부처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과거 정책의 단순 반복에 머물러 있어 성과가 부진한 상황임.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자살문제를 챙겨주시기 바람.	○ 정부가 집중해서 살펴볼 문제라 생각함.
○ 중소기업 등의 육아환경 개선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공백 해소, 대체 인력, 육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관련해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100만원 미만의 직역연금을 받음에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달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직역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겠음.
○ 국민연금 고갈, 건강보험 재정적자 누적, 노인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재정 문제가 있음. 복지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 국민연금은 최근 주식시장으로 나아졌으나, 건강보험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임. 연금 관련 부분은 복지부 등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탈모 치료보다는 중증 질환에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게 맞지 아니한가?	
○ 지역 의료문제, 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백 문제를 메꾸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	○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별 편차가 달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했음. 해당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 제도를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비대면 진료, 간호사의 진료 허용도 검토되고 있음.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만으로는 무의촌 문제, 필수의료분야의 지망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료인력 확보는 기본 권리인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음.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축구협회 등의 카르텔 문제를 조사하고 구조개혁이 필요함.	○ 축구협회의 문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문제이므로, 잘 해결될 거라 봄.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실행력 부족 문제(타 부처 파견 인력이 없고, 부처의 미온적 대응 등)와 다부처 협력사업인 통합돌봄 사업을 국무총리가 챙겨볼 필요성 있음.	○ 살펴보겠음.
○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 조정이 필요한데, 총리 후보자는 외국인 정책 기조 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보임. 외국인정책은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이 아니며 범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민청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람.	○ 외국인정책에 대한 논의 시기가 되었다고 봄. 관련 내용 살펴보겠음.
○ 윤석열 정부 당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억제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음. 살펴보겠음.
○ 총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는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침해하는 모욕, 혐오, 차별,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치테러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겠음.
○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상황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음.
○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	○ 유가족을 뵙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을 정하여 그 기한 안에 처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 절차나 결과의 투명한 공개, 관련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보상금 선지급, 취임 시 유족 대표와 만남 등이 필요	다고 생각함.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살펴보고,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교육·복지·돌봄·노동·지역사회 정책 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회분야에서 교육이나 보건복지, 문화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국무총리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금의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의 부담 경감은 미래 산업계의 부담, 미래세대의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람.	○ 충분히 공감하고, 세대간 의견이 다르므로, 여러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 보겠음.
[방송·통신 분야]	
○ 정부의 디지털 정부 지향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가?	○ 각 부처에 디지털 업무 시스템 등을 빠르게 보급하고,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로 바꾸는 것에 우선 집중할 계획임.
○ 후보자 재임 당시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언론사 제휴, 댓글 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네이버 댓글 정책,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 네이버 메인화면 알고리즘 논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언론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는지?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경우 네이버가 직접 뉴스제휴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여야,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였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미디어·언론 정책 전반을 충분히 협의하겠음.
○ 디지털플랫폼의 불법유해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 여러 불법유해정보 중 음란물 관련해서는 방미통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도 여성 측면에서 보아야 할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서면답변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만을 강조하였는데, 본인의 소신이 맞는지?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함. 1차적으로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2차적으로 방미통위의 제재가 필요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근 딥페이크 관련하여, 방미심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버차단을 지시하였으나 차단하지 못한 비율이 89.4%로,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임.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관련된 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 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민간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함.
○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처리도 많이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포털이 콘텐츠 제공자 등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함.
○ 레거시 미디어 신문이나 TV·라디오 등의 주수입은 광고 수입인데, 광고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있음에 따라 광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레거시 미디어 광고에도 유튜브나 OTT와 같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음.
○ 글로벌 AI 허브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현재 없는 국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예산 확보, 기구 설립, 유치지역 선정 등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AI 관련하여 글로벌한 기구가 없음. AI 관련된 규범, 실증,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보건, 사회, 복지 분야 등에 걸쳐서 규범을 만드는 국제기구임. 과기부에 전담 TF가 있음.
[외교·국방·통일 분야]	
○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주적인가? 일반적인 주적의 개념과 국방백서상 전략적인 주적의 개념이 다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적이라고 생각함.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인 지위임.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노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일된 정부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이후에도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간통제선이 북상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유사시 완충지대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목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여러 우려에 대해 명심하겠음.
○ 중국 서해에 불법 구조물(선란2호) 설치, 중국 해경의 온누리호 선원 위협 등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 살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대응이 미온적인바,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잘 대응해줄 것을 바람.	
○ 후보자는 외교안보 이력이 없었는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부처 업무에 관여한 바 있는지?	○ 국무회의에 참여한 바가 있고, 최근 신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신안보' 프로젝트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바 있음.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주무부처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은 구분될 것이라 생각함.
○ 전시 작전권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환 조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전환이 될 필요가 있음.	
○ 총리실이 중심을 잡고 외교부와 예산부처 등을 융합하여 ODA 혁신을 이루어주길 당부	○ 잘 살펴보겠음.
[행정·사법 분야]	
○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은 신속한 기소가 쉽지 않은데,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할 총리의 역할이 중요	○ 명백한 범죄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였음.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데, 향후에도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 현 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발표하였고, 대통령은 일관되게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일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건송치제도(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검토해 다시 재수사하는 제도)임. 국무총리로 취임하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살펴보겠음.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국회에서 잘 설계하시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음.
○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	○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지?	할 부분은 해소하고 밝혀야 할 부분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함.
○ 특검법 대상 12개 사건 중 8개 사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모두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지?	○ 규명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함.
○ 그 중 하나가 성남FC 제3자뇌물죄 사건이고, 이는 네이버가 뇌물을 공여하고,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기소내용임.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는 뇌물 공여의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반대하였으나 다른 임원들이 찬성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서비스 총괄이사였던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는지?	○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전혀 관여한 바도 없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영치금 및 변호사 접견 과잉 문제 등과 관련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영치금 및 접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있음. 또한, 내란 동조 공직자에 대한 조사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	○ 영치금 및 접견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음. 내란 관련 기록 공개는 징계·수사 절차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 효과, 국비-지방비 예산의 배분 비율 등을 알고 있는지? 지방비 60% 매칭사업인데,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국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농어촌에 머물면서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 큰 도시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 창업도 증가하는 효과도 있음. 지방비 부담 부분은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함.
○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대통령의 철학이 확고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함.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 농어촌 기본소득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함. 농어촌 햇빛소득, 스마트한 농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이 있음.
○ 정치권 일각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기업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반도체 팹은 안보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분산 배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 이전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전이 있는 지역이 유리함. 지방의 성장은 일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분산 배치하는 반도체 팹의 입지는 전력 공급, 용수, 인력 투입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입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주길 바람.	
○ 제2클러스터 후보지를 평가하면서 산업용수 확보, 전력공급 능력, 기존 클러스터와의 거리, 공급망 연계성, 물류망 등을 정량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 만나고 나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량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검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이고,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므로, 정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정하지 않고 기업경쟁력 입장에서 결정하게 될 것임.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이전 얘기가 있는데, 정치적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 국가미래산업전략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언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	○ 용인클러스터 관련된 이전이나 중단은 없다고 알고 있음.
○ 미래차국가산단 후보지로 광주가 선정되었는데, 환경부는 일부 개발제한구역 개발허가를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의 대체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지역적 특수성, 자율주행산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융통성이 발휘될 필요	○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살펴보겠음.
○ 인천 부평 국가산단은 사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나,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 진입이 막혀있어 산업재배치에서 소외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출한도 규제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중소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사업전환을 하고 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음.
○ 부평 지역이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대기업이 수도권 규제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잘 살펴보겠음.
○ 첨단 핵심 기업의 주축을 인천에 유치할 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도록 지원 바람. ○ 국토부 철도망 계획에 서해 철도 연장 및 광주 산업선 연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 살펴보겠음.
[기타]	
○ ‘모두의 창업’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	○ AI솔루션 업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갔고,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정보 등의 유출이 발생하였음.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피해 확인 및 아이디어 보호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음.
○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 원본증명(아이디어 등록제)을 통해 도용이 되더라도 아이디어가 원본임을 정부가 보증하고, 기술임치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 변호사의 지원도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모두의 창업’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확보한 문제, 심사과정의 부실 문제, 협력사인 신한은행과 홈페이지 제작업체 간 계약시기 및 해당 업체와 후보자 간 관계, 계약에서 창업진흥원의 불명확한 지위 등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사업 예산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등 관련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음. 홈페이지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IT 분야에 네이버 출신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음.
○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두의 창업’ 사업이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를 했다고 봄.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고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문제해결능력 함양, 도전 기회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보안 시스템, 심사과정, 재도전 기회 확대 등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임.
○ 서울 강남-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가 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음. 강북의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 가점도 없는 등 제도적 문제가 있음.	○ 말씀주신 부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 관련 합리적인 방안 모색해보겠음.
○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로 인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대답하기 어려움.

(3) 후보자 등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음.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한 입장은? 무주택 서민의 무력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 민간과 달리, 공직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공직자로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매매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임하겠음.
○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총리 후보자 지명은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여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바는 없음.
○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총리로서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장관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로 청문회 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 맞음.
○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차단하고,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원칙을 실천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 맞음. 집 매각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함. 정부 관료가 된 이상 그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음.
○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비거주 주택을 처분한 것이 맞는지? 차익의 일부는 기부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후보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를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예상하고 투기의 개념으로 구입한 것 같지는 않음.	○ 그렇게 생각하나, 다주택은 송구스럽게 생각함.
○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공직자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인지?	○ 하지 않을 것임.
○ 후보자가 부동산을 살 때 적절한 수익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 마지막 오피스텔 하나의 경우 퇴직 이후에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각각의 용도가 있었음.
○ 종로구 소재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신속하	○ 종로구 소재 건축물은 구청과 협의 후 철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게 문제 시정하겠다는 장관 청문회 당시 약속 미이행, 구청의 자진시정명령 미이행,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지의 관상수, 정자 등 불법 건축물 방치 및 지연 철거 등은 사익추구행위 아닌가?	하였으나, 철거 지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평군 농지 내 정자 등은 매입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데, 최근 매입자 요청에 따라 철거했음.
○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종로구 연건동 소재 2개 건물 간 연결통로는 임차인인 후보자의 동생이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고 답변했는데, 임대차 계약 전에 전면 보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 이미 연결통로가 설치되었음.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당시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건동 카페 공사 세부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음.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수익은 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을 임대인인 후보자가 부담했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음.	
○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소유 주택을 동생에게 임차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하게 증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함.	○ 미흡한 부분 다시 챙겨보겠음.
○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농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양평군청에서 2025년도 7월 28일 원상회복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통보함. 종로 거주지의 가족이 받은 것은 아닌지?	○ 수령은 하지 못했음
○ 그렇다면 작성한 공무원이 거짓말한 것인지?	○ 양평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한 번 더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서류들은 오지 않았음.
○ 2010년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 양평군의 농지를 취득한 것은 의문임.	○ 연고는 없지만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했음.
○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 70%, 일부 고용 30%’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작년 장관청문회에서 대리인의 실수였다고 했는데, 과연 책임 있는 태도라 생각	○ 경영계획서의 일부분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것 같음. 송구스럽게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지?	
○ 양평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보냈다고 함. 농지법 위반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 농지법 위반은 아니고, 몰랐음. 죄송하게 생각함.
○ 재산목록 작성 시 주택에 딸린 마당 또는 전(田) 중 어느 것으로 작성하였는지? 전(田)이라고 작성했다면, 1년 전에도 알았고 이번에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거짓 답변임.	○ 두 번 다 전(田)이라고 작성하였고, 거짓 답변은 아님.
○ 농업 경영 계획서는 몇 번 제출해 보셨는지?	○ 2009년과 2010년 2번에 걸쳐서 제출함.
○ 땅을 여러 번 샀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여러 번 낸 바 있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하는 설명, 본인 이름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농지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은지?	○ 몰랐다고 말씀드린건 아니고, 양평군청에서 서류가 한 번 왔음.
○ 정자 철거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철거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는데, 매수자에게 불법인지 적시하였는지? 관상수와 잔디도 다 처리해야 된다는 점이 설명되었는지? 법 위반 사실을 설명하였는지?	○ 농지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설명하였고, 매수자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함. 관상수 부분은 매수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그 부분이 전(田)이라고 설명을 드림.
○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사후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또한, 농지에 잔디를 식재한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적 인식이 부족해 보임.	○ 겸허히 수용하겠음.
○ 양평 전원주택과 관련하여 원상복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못 받은 것이 맞는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의 우체국 등기 기록이 없으며, 정자 철거는 농지 처분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 통지서는 못 받았고, 보지 못했음. 정자 철거는 매수자의 요구에 맞춰 정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에 맞게 처리함.
○ 양평군청의 「농지법」 위반 통지와 관련하여, 공적문서의 송달여부는 보낸 기관이 증명해야 하나,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공적 기록(우체국 내용증명, 양평군청 송달대장)에는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 문서를 받지 못하였음.
○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송파구 아파트가 지적이 되었고, 당시 주식을 매각하여 어머니	○ 죄송하게도 아버지 땅 상속세를 내야 돼서 주식매각대금으로 아버지 땅 상속세를 내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발언하였는데, 세금을 냈는지?	되었음.
○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 앞에서 내기로 약속했던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지?	○ 죄송하게 생각함. 다만, 상속세도 내야할 세금이었음.
○ 잠실 아파트 모친 증여세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증여'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사안은 주택 소유권 증여가 아니지 않은지?	○ 월세 관련임.
○ 후보자 모친이 후보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이 있느냐는 세법상 쟁점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생활 상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납세 의무도 후보자가 아닌 모친에게 있음.	
○ 후보자가 아파트에 모친과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해외근무 이후에도 모친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어머니께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음.
○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세무 전문가와 잘 검토하여 세법상의 문제는 성실하게 해결할 필요	○ 잘 알겠음.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님에도 삼청동 주택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사용허가 없이 무단 점유한 사례이므로 원상 회복할 필요성이 있음.	○ 원상복구 하겠음.
○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재임 당시 네이버(990억원), 퇴임 후 후보자 개인(1억원), 플랫폼 업계 주요 인사 등이 투자한 티비티(TBT) 펀드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직전 후보자 개인 1억원의 펀드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누구에게 양도하였고 조합원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양수인이 해당 투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물인지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 해당 펀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펀드로, 스테이폴리오에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펀드 지분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음. 다만 양수인의 신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관련하여, 지인에게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기간, 월세 납부일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실제 월세 납부일도 일정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지 의구심이 있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 처음에 시세대로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임차가 되지 않았음. 현 임차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에 임차인에게 매도한 것이고,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 원장과의 거래였을뿐,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수림재에 투자출자를 하였는데, 수림재는 어떠한 기업인지?	○ 가족들이 아버지 상속을 받고 나서, 관리가 어려워 자녀들 5명이 600만원씩 출자하여 만든 가족법인임. 중기부장관 청문회 이후 해산하였음.
○ 가족상속법인이라고 하였는데, 등기상에는 목적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컨설팅 등으로 되어 있고, 네이버 재직 중 이러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임.	○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 총리 후보 지명 후 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있거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 대신 자신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한 태도인지?	○ 해당 사건은 2005년에 인터넷포털들이 YWCA로부터 고발당하였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터넷 포털들이 관련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든 계기가 되었음. 직접 게시하지 않은 건 사실임.
○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은 회사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처벌 받은 것이므로 직접 올린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라 사과와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여성 총리 후보자라는 점, AI 관련 전문가라는 점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태도와 향후 비전 2가지 모두 미흡한 것을 지적하는 것임. 다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과를 드렸고,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그 이후로 규정과 내용들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렸음.
○ 엠파스 본부장 재직 당시, 음란물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은 후보자가 직접 이를 제작하거나 게시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진 것 아닌가?	○ 그러함.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후 관련 기준을 엄격히 만들고 관리했음.
○ 엠파스 검색 서비스 본부장 재직시 음란물	○ 엠파스 재직 시절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포에 따른 벌금, 네이버 재직 시절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의 극단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모두의 창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후보자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음. 공직사회를 아우르는 공직자로서 절제, 균형감, 책임의식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대응하고, 네이버 관련 사건은 유족에게 죄송스러운 사건이라 생각하여 대표직에서 사직하는 등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직 시절에도 유출사건 발생 시 대변인을 통한 사과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2015년 성남FC와 네이버 간의 광고계약이 체결될 당시 후보자는 광고계약 체결과 무관한 직위에 있지 않았는지?	○ 당시 서비스 총괄이었으며, 광고계약과 관계없는 직위에 있었음.
○ 성남FC와 관련된 사항은 후보자와 무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소환되지 않은 점은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뿐만 아니라, 광고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관계인데, 이를 비리나 범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라. 국무총리(한성숙)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저를 검증해 주시고, 국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가르침을 들려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긴 시간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군가의 시간을 받았을 때 참 많이 감동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를 돌아보는 동시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지닌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신 고견은 소중한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에게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민생이 어려운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현장의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륜스님께서 유퀴즈에 나와 말씀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뇌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도가니 사리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저도 몸 사리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그 길에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위원장(백혜련) 마무리 말씀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무총리상이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사권자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말 좋은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문회 중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경청의 자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워낙 질문들이 방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시는 부분도 경청의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국무총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시는 것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심사결과 요약

가.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지명된 이유와 강점에 관하여,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가 민생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시대를 앞서 겪으며 혜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민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소중한 기회를 두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답변함.

닥터나우법 사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규제, 수도권 규제 등 국무총리로서 부처간 이견이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부처 간 소통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통합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기후위기대응 정책, 청년 정책, 유보통합 등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총리의 역할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래세대의 입장 등을 여러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국회와의 소통 능력과 정치 현장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기업가 출신으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에 대하여, 과거 기업의 대표로서 취했던 입장과 달리, 공적인 영역에서는 국민 모두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적 자리가 갖는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고 임하겠다고 답변함.

엠파스 본부장 당시 형사처벌 사건, 네이버 재직 당시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직장내 괴롭힘 사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인정보 유출 등 후보자가 거쳐 온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사건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 왔다고 답변함.

나. 분야별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

[경제·재정·조세 분야]

전반적인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양극화 우려, 기업 간, 노동자 간, 세대 간 사회적 양극화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경제부문의 성과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층,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비용 상승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가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자영업자 폐업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금융 지원, 폐업 위기 극복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고, 국내산업 보호라는 가치와 소비자편익 증진이라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 허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 시대에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함.

경력이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현장에 대한 접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스마트팜 등 IT와 접

목하여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변함.

AI 대전환을 통해 창출되는 부의 재분배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한 분배와 거래환경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부담의 전기요금 전가 금지, 원인자부담 원칙 제도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력수요 등 예상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함.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권 이전 주장에 대하여, 기업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본다고 답변함. 반도체클러스터의 남부권 분산 배치는 필수적이고, 전력 및 용수 공급, 인재 투입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청년미래적금의 연령 상한 상향, 청년형 ISA 계좌의 중복가입 불가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함.

[부동산 정책 분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정책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전세 품귀 현상, 월세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주택가격 상승은 금융 규제 외에도 누적된 공급 부족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 여러 원인이 있으나, 실거주 중심의 접근과 투기 수요 억제 등의 정책 방향은 맞는 접근 방향이라고 답변함.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수요자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하여, 대출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언급하기는 부족함이 있고, 현

재 청년 등 주거 지원 강화 및 투기 수요 차단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변함.

주거 사다리에서 중요하고도 독특한 형태로 정착된 전세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는 없겠으나, 투기 문제 등 다양한 이견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대체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부동산 정책처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과도 토론하고 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객관적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토론할 것이라고 답변함.

[사회 분야]

청년층의 주거비 문제, 청년 고용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이 심각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청년층 또한 정책수립 단계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AI 시대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학교 교육 간 간극을 줄일 방안에 대하여, 정형화된 답변을 하는 인재보다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 인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교권 위축, 학생들의 교내활동 위축 문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큰 학교 선호현상, 자퇴율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세부

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초중고 학생의 자살률이 심각하므로 국가가 생애주기별·위험군별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가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10대 청소년이 참여하는 토론도 필요하다고 답변함.

네이버 재직 당시 알고리즘 조작 논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언론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하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을 다양화해 왔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디어·언론 정책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1차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중요하고, 2차적으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포털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관리 책임과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 투명한 공개, 보상금 선지급, 유족 면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외국인 정책은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만이 아닌 범정부 정책이므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이민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변함.

국민연금 고갈, 건강보험 적자 누적, 노인돌봄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주식시장 호황으로 국민연금 사정은 나아졌으나,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좋지 않

은 상황이며, 관련 부처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함.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스마트 농업 전환 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긍정적 취지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외교·국방·통일 분야]

대한민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적이라고 답변하고,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답변함. 이에 대해 일반적인 주적의 개념과 국방백서상 전략적 주적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청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음.

외교안보와 관련한 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여러 보고를 들은 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신안보 프로젝트를 협업하여 수행한 바도 있으며, 주무부처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은 구분될 것이라고 답변함.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통제선이 북상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사시 완충지대 감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평화 공존의 목표는 중요한 공통의 가치이고, 여러 우려를 잘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대북정책에 대한 국방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노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된 정부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함.

[행정·사법 분야]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명백한 범죄수익은 적극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현(現) 총리가 이미 발표하였고, 대통령 또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고 답변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함.

공소취소 특검법안(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는지, 특검 대상이 되는 사건이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기타]

‘모두의 창업’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 확인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함.

‘모두의 창업’ 사업은 예산 전용, 심사과정 부실,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후보자 간 관계, 창업진흥원의 불명확한 지위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고, 업체와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다고 답변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보안시스템, 심사과정, 재도전 기회 확대 등을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다. 본인 및 가족 등의 신상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후보자 재산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변모한 것에 대한 진정성, 도덕적 정당성 등의 지적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공직자로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함.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총리 후보자 지명이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바는 없다고 답변함.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은 부동산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원칙을 실천하라는 취지라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종로구 소재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장관 청문회 당시의 신속한 시정 약속 미이행, 구청의 자진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사익추구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철거하였으나, 철거 지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답변함.

종로구 연건동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임차인인 후보자의 동생이 부담해야 하나, 임대인인 후보자가 부담했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다고 답변함.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청동 소재 주택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무단 점유이므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의 조치였으나 원상복구 하겠다고 답변함.

양평군 소재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 70% 투입” 기재, 농지에 잔디 식재 및 정자 설치 등 농지법 위반 지적에 대하여, 경영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자 등은 매입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최근 매매 후 매입자의 요청에 따라 철거하였다고 답변함.

양평군 소재 농지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양평군청에서 보냈다고 하는 원상회복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질의에 대해, 통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함.

후보자 소유의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상 증여라는 청문위원의 문제제기와, 모친에게 무상 사용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쟁점사항이며 일반인의 생활상식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모친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는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음.

[기타 사항]

성남FC 제3자뇌물죄 사건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시 광고 계약과 관련 없는 직위에 있었고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함. 이에 대하여 후보자와 무관한 문제를 논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후보자의 직접적인 제작·게시 행위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기 보다 사과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 서비스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드렸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관련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변함.

6. 종합의견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후보자(한성숙)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임명동의안과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서면 및 구두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기초로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통할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며,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자질 및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경제 양극화 우려 해소와 사회 통합, AI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 정책현안에 관한 인식,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IT 기업가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실용적인 업무능력,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등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연한 소통 능력과 경청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반면, IT 단일 분야에 치중된 경력만으로는 경제, 교육, 복지, 외교·안보, 농업, 청년정책 등 다방면의 국정 분야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IT 기업 경력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작 논란, 뉴스제휴평가의 공정성 논란 등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해법 제시 미흡 등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일부 청문위원은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불법 증개축 시설에 대한 신속한 시정 약속 미이행 및 구청의 자진철거명령 불응 및 지연, 타인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증여 문제, 농지법 위반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준법성, 도덕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공직이 갖는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주택 해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사익을 추구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 국정 조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사회갈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여러 청문위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당부가 있었음.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자질과 역량,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나, 국무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향후 총리 인준이 된다면 인사청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들의 우려가 있었음을 참고하고,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무총리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각종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7. 첨부자료

<참고자료 1> 국무총리(한성숙) 이력서

<참고자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참고자료 3> 국무총리(한성숙)에 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참고자료 4> 국무총리(한성숙)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국무총리(한성숙) 이력서

성　　명 : 한 성 숙 (韓 聖 淑)

생년월일 : 1967년 6월 2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x길 xx, xxxx호
(내수동, xxxxxxxxxxxx)

직　　업

2025. 7.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학　　력

1985. 2.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2.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경 력

1989. 5. ~ 1995. 1.	(주)민컴 기자
1995. 1. ~ 1996. 3.	(주)나눔기술 마케팅팀장
1996. 3. ~ 1997. 2.	한경피씨라인 기자
1997. 4. ~ 2007. 2.	(주)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2007. 5. ~ 2012. 5.	네이버(주)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2012. 6. ~ 2014. 12.	네이버(주) 서비스1본부장
2015. 1. ~ 2017. 3.	네이버(주) 서비스총괄이사
2017. 3. ~ 2021. 3.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12대, 13대)
2017. 3 ~ 2022. 3.	네이버(주) 대표이사
2022. 3. ~ 2025. 3.	네이버(주) 유럽사업개발 대표
2025. 4. ~ 2025. 7.	네이버(주) 고문
2025. 7.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병 역

해당사항 없음

상 훈

2017. 12.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로상

참고자료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위 원 명 단 >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 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강승규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박균택, 박선원, 백승아, 이소영
	국민의힘	김선교, 김희정, 유영하, 조정훈
	비교섭단체(무소속)	최혁진

< 직 원 명 단 >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김정연
입법조사관	조만수, 박민호, 이종민, 윤동한, 홍정, 이명자, 이중석, 한경석, 이지연, 민경욱, 김혜진, 황명숙
행정관 등	선우경, 오승희, 손지화, 염혜윤, 장윤명, 김소연, 이소영, 김유준, 기자영, 채지희

참고자료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기 간

2026. 6. 25.(목) ~ 6. 26.(금)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의사일정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의사일정은 [붙임 1]과 같음.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나.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주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7분, 재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한다. 추가 재보충질의 실시여부·질의시간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마. 그 밖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서면질의서 및 구두질의요지서

가. 서면질의서

○ 위원은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

○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두질의요지서

○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

8.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9.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붙임 2」와 같이 공고한다.

나. 인사청문회 방송중계

○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영상자료 상영신청

○ 위원의 발언 등을 보충하기 위해 영상자료 등을 상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상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음성·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양해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 일반방청

○ 일반인 방청은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와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붙임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회의 6. 18.(목) 15:00	1. 위원장 선임의 건 (사회: 연장자)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상정)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 건	장소: 본관 245호
제2차 회의 6. 25.(목) 10: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o 국무총리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o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제3차 회의 6. 26.(금) 10: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o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계속) o 국무총리후보자 마무리발언	
제4차 회의 6. 29.(월) 11:00	1.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6년 6월 25일(목) 10:00 / 6월 26일(금)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2026년 6월 19일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백 혜 련

참고자료 4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백혜련 위원 강승규 위원
김선교 위원 김희정 위원
유영하 위원 조정훈 위원
김동아 위원 김한규 위원
박균택 위원 백승아 위원
최혁진 위원

2026. 6.

국무총리후보자 한성숙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1. 후보자는 국무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총리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하고 제언할 수 있는 국무총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2. 후보자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국회·언론 등 그 누구와도 적극 소통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전반을 조정·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 국가의 주인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4. 후보자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떠한 원칙으로 이를 조정할 것인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자의 시각차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5.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속가능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장기 비전인「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도 연도 내에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AI 독자모델 개발, GPU 26만장 확보, AI기본법·데이터센터특별법 제정 등

□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과 국민 일상생활 등에 AI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적용·확산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외적으로는 ILO 등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AI허브를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AI 규범과 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AI, 반도체, 바이오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이 제조·교육·공공서비스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신약 개발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 하며,

○ 이러한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와 인재 양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후보자는 첨단 산업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벤처기업·지역경제까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며 발전하고,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생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중기부 장관 재직시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26.1.21.),

○ ①대기업 성과의 직접 공유 및 확산, ②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과 환류, ③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 등으로 상생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특히, 방산 5대 대기업이 6천억원 이상의 상생협력 투자 계획을 이행하여 첨단 방산 분야의 성장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에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국무총리 취임 시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첨단산업 성장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9. 후보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납품대금 산정 및 정산, 플랫폼 수수료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구제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과 상생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과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핵심 첨단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I 대전환'을 위해 AI 모델 및 인프라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바이오, 방산 등 차세대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투자해야 합니다.

11. 후보자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중동전쟁 등으로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과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 수급관리 등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청년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후보자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적 문제로 범정부 총력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국무총리 주재)」 체계를 마련하였고,

○ 성장엔진·기업투자·인재양성·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부처 간 주요 과제를 총괄·조정하고 기업 및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챙기겠습니다.

13. 후보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범부처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26.6.9. 공포, '26.9.10. 시행)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인구전략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출산·양육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 고령화 문제 또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소득보장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후보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일자리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구직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일경험 등 지원 : ▲K-뉴딜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3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1만명) 등

15. 후보자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보완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외교활동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정상외교로 거둔 성과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국가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제질서의 변화와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굳건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 주요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17. 후보자는 국민 누구도 위기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사회안전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만큼,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기본적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 몰라서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임기간 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6.3만여명을 기록했습니다.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최대이며,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동행축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은 '25년 1,200억 달러, '26년 1분기 298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K-뷰티 수출은 21.8억 달러로 '26.1분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동행축제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50% 감축 등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여,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 건을 발송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9.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기간 중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상생협력법 개정('26.2)

○ 6개 부처 합동 '범부처 기술탈취 대응단' 출범('26.1)을 주도하여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 1호 협업과제로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개설('26.3)하였습니다.

* 신문고 개설 이후 36건 접수(6.18 기준)

□ 향후, 기술탈취 과징금(최대 50억원), 기술보호 특별사법경찰 증원(지재처) 등 조치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기간 중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이를 통해, '25년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34%, 품질이 44% 개선되었습니다.

□ 또한,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미 상호관세 충격에 대응하여 3차례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였습니다.

○ 그 결과 '25년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 달러로 연간 역대 최대, '26년 1분기에도 298억 달러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 취임 직후 미 상호관세 충격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신속하게 3차례 수출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美상호관세 시행 中企지원방안('25.9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25.11월),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25.11월)

** '25년 중소기업 수출 1,200억불 달성

□ 올해에는 중동전쟁에 대응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긴급경안자금·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298억불을 달성했습니다.

22.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기간 중 벤처기업 기반 마련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법정기금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모태펀드 기반으로 13.5조원 규모의 AI·딥테크 분야를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30)하였습니다.

* 스타트업 → 스케일업 → 유니콘 기업 등 단계별 지원

□ 또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지방정부 공모를 통해 5개 조성지역을 선정하였고, 4,5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수도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 한국벤처투자 투자센터를 확충하여 부족한 투자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23. 후보자는 AI·플랫폼·디지털 산업 분야의 경험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네이버 대표이사로서, ‘성과와 효율, 소통’ 중심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 만 여명의 임직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거대 민간조직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관행이나 칸막이로 인해 AI 대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중기부 장관으로서, 스타트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위원

1. 검찰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여당과 법조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의 과제로 보는지,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와 직결된 제도 문제로 보는지? 양자택일이 어렵다면, 두 관점이 충돌할 경우 후보자가 우선 적용할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두 가지 관점 모두 균형있게 고려하여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기업인 출신인 후보자는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할 계획인지? 전문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자문체계를 가동하실 계획이며, 그 자문단의 정치적 중립성·균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국가 범죄대응역량 유실 방지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부작용 방지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 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핵심쟁점으로 포함될 전망임. 만약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변호사 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할 것인지?

□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그 취지를 감안해 자문위원회,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 통제장치가 약화되고 ▲피해자권리 구제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죄율·재기소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부작용 발생 시 대체 통제 장치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국가 범죄대응역량 유실 방지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부작용 방지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경의 권한 배분을 넘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헌법적 문제임. 후보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법조계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 만약 대통령·여당 입장이 헌법적가치나 국제인권기준과 충돌한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자는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 할 것인지?

□ 국민 삶과 밀접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인 만큼,

○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적 가치와 국제 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적극 지원해 관련 입법 등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최근 환율폭등 및 거시경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를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실기로 평가하는지,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충격으로 보는지? 총리 취임시 이를 타개할 복안은?

□ 최근 거시경제 불안정은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부는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민생부담 완화, 산업활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란간 종전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대란 등 서민주거안정성이 크게 혼란. 정책적 실패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누적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감소되도록 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8. 부동산 임대사업자 후보자로서, 종부세,임대소득 과세 등에 관한 정책결정시 이해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여권 일각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성공의 비용” 혹은 “도약의 마찰음” 이라고 표현한 바 있음. 매월 생활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서민·청년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후보자도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지?

□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매월 생활비를 걱정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서민, 청년층의 고통과 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성과급 배분 ▲경영상 판단 ▲원·하청 관계 등 본래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까지 파업의 무기로 활용되어 기업 활동에 광범위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원·하청 간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노사 간 원활하고 책임 있는 교섭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노란봉투법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노사 대화 촉진’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노사 간의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고,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보완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 노조와의 단체 교섭, 산재 관련 직원 사망 사건 등을 경험한 후보자로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 균형에 관한 본인의 구체적 철학은?

□ 회사의 이익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로 얻어지는 것으로,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기업의 이윤을 환수해 국민배당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국민 배당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향후 반도체 업계 호황 등으로 발생되는 국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의 논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적으로 환수하거나 배분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입법부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소위 의회 독재 상황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총리 후보자의 평가와 견해는?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시킨 이번 참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번 사태는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 재발방지를 위해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으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6.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은?

□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공소취소 특검이 사법부의 권한과 형사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이번 특검법 발의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극소수 사령관급 만이 사전 인지한 채 발생한 계엄 사태 당시, 갑작스런 지휘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장성 등 다수 간부들이 해임·전역조치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장은?

□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의 역할, 인지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 당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 두 적대국가중 핵을 어느 한쪽만 갖고 있다면 양국간의 군사력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핵이 엄존하고 있고, 핵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의지를 공언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주권 논리에 매몰되어 여건과 능력 구비라는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는 아랑곳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현정부의 사실상의 안보자해 정책에 대한 입장은?

□ 한미 양국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시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건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
조건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건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한미는 확장억제를 포함하여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대통령을 필두로 자꾸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는데 , 전세계 다른나라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군사비를 쓰는 미국조차 자주 국방을 떠들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토,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과 같은 집단 안보체제를 지향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것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주국방을 공언하는 건, 자칫 대한민국이 나홀로 국방·독자국방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로 몰릴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인기성 구호를 남발하는 이 정부의 `기승전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자주국방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주권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2022년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국가원수의 집무실 상공을 지나가는 도발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복성 군사작전을 기획·실행않는 국군이 있다면 이를 국군이랄 수 있나? 북한에서 이 대남 무인기 침투작전을 실행한 책임자가 이적죄로 처벌 받았을리 만무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이를 이적죄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 국방 장관, 안보사령관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존중은 논외로 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다만, 개별 사건의 형사책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국무 총리와 여당대표 등이, 난데없고 황당한 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등 다수의 관련자가 모두가 수감되고, 정권을 잃었으며, 그 결과로 자신들이 집권한지 1년이 다 되가는데도, 입만 열면 내란척결을 외치다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도대체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무슨 내란 조짐과 세력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내란·내란인가? 민생 경제 살리기 등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12.3 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국가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 기반을 토대로 2년차부터는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 혁신에 더욱 집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 이재명 정부가 다행히도 망국적 탈원전 행보를 포기하고,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어제 신규 원전지부가 확정됐음.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확정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대형원전 1기 추가 건설을 포기하는 등 후퇴된 안임. 또, AI 시대 석유로 지칭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수요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현재 계획된 대형원전·SMR설립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수이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2040년 전력 수요가 대형 원전 최대6기를 추가로 지어야 할 만큼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이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과 SMR 추가건설 수립에 대한 입장은?

※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서 보완하겠다는 답변 불가

□ 급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가장 큰 문제는 송전망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하남갑 국회의원 시절, 하남시와 함께 이미 확정된 송전 선로 공사 계획을 방해하는 등 국가 송전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하남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계획이 더이상 지연될 시 용인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없음. 이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입장은?

□ 동서울변환소 등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동서울변환소 관련 현안이 기후부, 지방정부,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 호르무즈 사태 이후 자원 부국들의 석유무기화는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이지만,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도 계속 짓고 있음. 이는,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우리 역시 호르무즈 사태 동안 석탄화력 발전량을 일시적으로 대폭 늘린 바 있음.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목표로 급속한 전환을 하다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임. 이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현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 했을때 석유 수급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전력 발전 계획에 대해 (현재 발전설비에 근거해) 답변?

□ 우리나라가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고려하여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6. 작년 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일부 민주당 예결소위원회 위원들이 30년 후에는 석탄,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며 해외자원 시추 융자 예산을 전액삭감 시도한 적이 있음. 한편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는 인류에게 앞으로도 가장 많이 쓰일 에너지원이라고 한바 있음. 앞으로도 민주당 위원들이 석유 시추예산 등 삭감하려 할 때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무총리 후보자 입장은?

□ 석유 시추 사업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경제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동해시추 사업에 대해 엄청난 매도와 함께, 26년도 본예산에서 석유공사의 동해석유·가스 시추예산을 전액 삭감했음. 그러나 최근 세계 최고 에너지 기업중 하나인 영국의 BP사가 동해석유 시추사업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음. 이 상황에서 석유공사와 BP가 동해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할 시 적정 규모 지분 확보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민주당의 매국적 자원 시추 매도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이번 중동 전쟁은 에너지 안보 강화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석유 시추 사업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경제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한국과 일본의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인 7광구는 일본의 의도적인 시추지연으로 JDZ협정 종료를 유도해 독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인근에 중국이 이미 22개의 시추공을 박아놓은 상황으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시추행위로 해역수호를 위한 비군사적 주권 행위를 해야할 필요성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 역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7광구 개발은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한 시추노력 이외에 우리 영해 인방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상주권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 해당 광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원 확보 등을 위해 공동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JDZ협정에 따라 공동개발구역 내 일방적인 자원 조사·탐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측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29. 국무총리에게는 국민통합의 의무가 있음. 현재 정치 양극화가 극심하며, 젠지·엠지 세대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상임. 또,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무너졌음에도 생애 주기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를 증식해온 4050세대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과 국민연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불공정' 관점에서 불신, 국민통합은커녕 종으로 횡으로 다층적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후보자의 이에 대한 국민통합 해결 방법은?

□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국회에는 관습법이 존재하며, 이를 광의의 국회법이라고 통칭해 왔음. 국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상임위배분, 상임위원장 배정, 국회추천 각종 인사 등이 그것임. 그리고 이는 여야간 최소한의 협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야당이라는 이유로,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으로 야당몫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협치대상에서 계속해서 배제해 오고 있음.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당 몫 이었으나,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로 밀어 붙여 차지했고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당연하다는 듯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음. 국회 의석수대로 모든 국회 운영방식을 결정한다면 국회 존재이유가 없음. 국회의 존재이유는 각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최대한 많은 정책수혜의 대상이 되게끔 협의정치를 그 근간에 두고 있음. 국회에서의 각 당은 그 당의 국회의원의 총합이기 전에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임.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 바람

□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1.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잠실 올림픽 공원에 청년들이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음. 평범한 청년들의 요구는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 박탈에 대한 정의 책임있는 대응임. 또, 선거일로 부터 현재까지 전국 대학생들이 공식 성명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여당 인사들은 이에 대해 청년의 극우화 혹은 일베화를 주장하며 청년의 민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 국무총리 후보자는 잠실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을 만나볼 계획이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건지?

□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학생 시국선언 등 청년들의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 총리께서도 대학생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을 계속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대학생 간담회(6.7)」,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6.21)」 진행

□ 총리가 된다면 청년을 포함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중국의 국내 전기차시장 침투력이 무서운 속도와 기세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부의 입장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시장경쟁력을 통해 극복할 문제이지, 별다른 제재방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관세장벽을 세우기에는 한중FTA와 배치됨. 현재 첨단기술들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로봇 등 국가 핵심기술이 어느 한 산업분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닌 연결성이 강화하고 있음.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잃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총리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 전기차시장 보호를 위한 '보조금 차등지급'이나, 국내생산 촉진제 등 '한국판 IRA법'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답변 바람.

□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전기차 국내 생산기반 강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 국내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재경부·산업부·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3. 올해 형법98조2 개정을 통해 일명 간첩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통과 됐음. 이는 간첩의 범위를 북한뿐만 아닌 외국,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임. 그러나 현재 국가대항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첨단기술 전쟁은 단순히 기술의 직접 탈취를 넘어서 인지전(영향력 공작)으로 다변화 되고있는 추세임. 실제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들이 우리나라 전기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악플을 달아 놓은 정황들이 보고된 적도 있음. 후보자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추가 형법개정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총리에 취임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 18일자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 됐으며, 이에 따라 대미투자공사가 출범했음.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정책금융이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갖춘 대기업 위주로 배분될 경우, 국내 기반의 중소, 내수형 기업들이 금융접근성에서 제약받을 가능성이 큼. 한정된 정책 재원이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돼 국내 설비투자 지원 여력이 위축 될 수 있는 것임. 이에 대해 벤처기업 출신이자 중기부장관 출신으로서 입장 답변 바람

□ 대미 전략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핵심 마중물입니다.

* 한미전략투자공사: 3,500억달러 규모의 對美투자 전담 기관

○ 대미 투자의 결실이 선순환되어 국내 중소·벤처 생태계에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기반의 중소·내수 기업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핵심설계, 고급 연구인력이 미국현지 거점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혁신, 첨단산업생태계의 네크워크 밀도가 낮아지고 인적자본 축적이 미약해 진다는 것임. 총리후보자가 생각하는 전략 기술 및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 인재 유출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 첨단 생태계가 우수한 연구 인력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국내 연구환경의 처우와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첨단 분야 인재들이 국내에 잔류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36. 미의회 일각에서 한국 등의 투자금이 미국 정치실세의 사적 비즈니스에 유용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미국 측의 자의적인 자금운용을 견제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 우리의 대미 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며,

○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정부내에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한미전략투자공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국가대항전 체제로 가고 있음. 유럽은 도덕적규범을 이유로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노골적인 각종 법안 발의를 통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산업을 무분별 지원 중임. 메모리 반도체분야 역시 중국이 곧 따라잡거나,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그러나 우리는 기업을 지원하기는 커녕 불법파업 조장법을 통과시켜 노조 이슈를 만들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공산전체주의 국가처럼 국가가 탈취하려는 논의를 시작하려고 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노사 뿐만 아니라 주주,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여가 있고,

○ 산업경쟁력 및 투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균형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 지난 20여년 간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이른바 인권교육이 교권을 밑바닥으로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공교육 본질인 국가 기초학력수준 미달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에, 넷플릭스 <참교육> 시리즈가 억눌린 교육계 PC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많은 공감을 사고 있음. 한편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좌파식 교육정책에 편승해온 여당 인사들이 교육감이 되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국을 현실에서 구현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1) 청소년 기초학력 증진방안, 2) 교권 회복 방안, 3) 학폭위원회 폐해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입장은?

□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기본으로,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 국세와 연동한 교육교부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초중등 교육은 교부금이 넘쳐나 교사의 업무폰 지원 등 타 국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과 더불어 각 지방의회의 각급 교육청에 대한 비리 행위의 온상이 된지 오래임. 한편,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주요대학의 세계 경쟁력 순위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지방교육단체로 연동한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ㅇ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교부금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미국의 이민자탄압 정책으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유수대학의 외국인교수들이 추방당하고 있음. 국내 첨단두뇌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재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영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음. 이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 바람

□ 첨단 분야 국내 인재 육성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범부처 차원에서 비자·주거·처우 등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인재유치가 일회성 초빙이 아닌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1. 탈모급여화가 중증환자와 필수의료보다 우선 할순 없음. 탈모급여화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정부가 저출생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환경은 기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인력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업무공백과 조직문화 부담으로 인해 '눈치육아'가 이어지고 있음. 중소기업 재직자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육아휴직 관련 업무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에서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정부는 기업이 재직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 홍보와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3. G7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 선언문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음. 사실상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금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관한 정상 선언문'(6.17)에는 핵심광물에 대한 자의적 수출통제를 비롯한 非시장적 관행 등에 대한 우려, G7 및 파트너 국가 이외의 단일 공급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선언문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 국가들의 공동 의지를 표명한 문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44. 창업 준비기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금성지원에 대한 입장은? 찬성 반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 청년들이 취·창업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창업준비 활동(시장조사,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 등)을 구직활동으로 인정, 창업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 다만, 소득 보전을 위한 별도 현금성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 역량과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구상은?

□ 코넥스 시장이 그 취지에 비해 유동성, 참여자, 정보 부족 등으로 운영이 아직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취임시 초기 벤처·혁신기업들과 소통하며 코넥스 시장이 성장 사다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6. 코스피와 코스닥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구상은?

□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급 대책을 넘어, '투자자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시장'으로 체질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 임명시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계·부실기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하면서도,

-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좋은 기업은 더 우대받는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더불어, 산업·금융정책(예: 국민성장펀드)을 통해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 모두의 창업은 국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업임. 정책의 대상이 예비창업자로 동일하단 사유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헌법에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단 의견에 대한 견해는?

□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가 육성이라는 기존 예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한 정책패키지로서,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사업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한 사업목적, 지원대상, 비목,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 중입니다.

* '스타트업 열풍' 관계부처 논의('26.1.5) → '26년 가용예산 활용안 요구(1.23, 중기부→기획처) → 기획예산처 동의(1.26)

48.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3가지는?

□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므로, 보호와 성장을 꼼꼼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❶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성장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❸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스톱 재기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9.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간부문의 위축된 경제심리와 소비를 다시 살리고 소상공인 피해를 경감하는 등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직접 배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향후 반도체 업계 호황 등으로 발생되는 국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의 논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적으로 환수하거나 배분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 6월 15일 16시 모두의 창업 사업 담당자들은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함. 개인정보유출 사고 다음 날인 1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당사자인 진출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대식에 참석함. 해당 자리에 한성숙 총리 지명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참석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정부를 믿고 도전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2.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규모가 적절한 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쿠팡은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을 감안,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번 처분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보안 투자 확대 등 사전예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3. 모두의창업 진출자 선정 과정에서 1인의 멘토가 지원자들의 명운을 갈랐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서류심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1인 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모두의 창업 2기부터는 멘토 3인 공동심사를 도입하고, 운영기관 및 멘토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4. 모두의창업 멘토로 참여하고있는 일부자들은 타 플랫폼을 통한 강의판매, 수백만원의 고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모두의 창업’에 참여하는 멘토들이 자신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외부 활동으로 인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자 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부당행위 유형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 필요성에 동의하며,

○ 부당개입 정의를 신설하고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개정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이 부당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통해 부당개입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6. 모두의창업 사업에서 1인멘토가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있음. 이의제기의 경우 사업운영위 개최를 통해서 얼마든 가능한 사안임. 이의제기를 금지해 참여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모두의 창업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5천명이 참가하는 지역 예선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 다만 1차 서류 탈락자 전원(5.8만명)에게 평가의견과 보완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 향후 재도전 멘토링 등을 통해 탈락자들이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57. 모두의창업 사업 진출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AI솔루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다수가 사용하는 클로드, 제미나이 등 유명 AI솔루션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유명 AI 솔루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을 가진 국내 AI 벤처·스타트업들에게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모두의창업 사업에선 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선발했는데, 정작 진출자들의 실제 거주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음. 일부 진출자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지원했음. 사업자를 내는 것이 추후 협약 체결 이후이기 때문에 최초 선발과정에서 지역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시는지?

□ '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역에서 도전하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발 단계에서 지역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 또한, 도전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운영기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59. 모두의창업 AI솔루션 공급기업 선정이후 수요자에게 매칭을 위한 직간접 사전홍보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는데, '수요자 매칭을 위한 직간접 사전 홍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 ‘수요자 매칭을 위한 직간접 사전 홍보’란 공식적인 매칭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특정한 수요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홍보하거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모두의 창업 1기 선정자라는 특정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AI솔루션 직간접 사전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상담 정보를 받아 상담하거나,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솔루션 시연과 홍보를 하는 행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AI 솔루션 설명회는 일반적인 기업의 홍보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영업권 보장,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앞으로 프로젝트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1.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국무총리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총리의 역할은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를 지속 성장시키고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총리의 성과 역시 각 부처를 효과적으로 통할하여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안 5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행정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과감한 AI 혁신을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 또한,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총리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중 가장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모든 정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 만큼, 총리 후보자가 역대 정부의 공과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5.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며,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

□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며 ①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고, ②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보다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③AI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나갔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 다만,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 후보자는 ICT·플랫폼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농어업·지방소멸·재난안전·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다만, 총리의 책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넘어 행정 각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난 1년여 국무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선거관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선관위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후보자 모친의 양평 농지 관련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양평에는 후보자 모친 소유의 농지가 없습니다.

□ 양주시에 있는 후보자 모친 농지 위의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위한 소송 제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철거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9.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역임한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최근 통신사, 대형 플랫폼 등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지난 6.11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6,246억 8,100만원)을 부과한 것처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 불편 야기에 대해 확실한 제재로 사후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아울러, AI·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처리 규모·복잡성이 증대되고 유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통한 사고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능동적 예방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수준에 기반한 차등적 관리·점검 등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무엇인가?

□ 부모님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방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도와 어머님이 젖소 목장 등을 하시며 대학 학비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당시, 대학을 많이 가지 못하던 시절이라 제게 더욱 특별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모교인 숙명여대에 기부시 장학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명명 하였습니다.

11. 국무총리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2.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하는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산시켜야 하는 정부 출범 2년 차에 지명된 만큼, 국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함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 국정운영 중 가장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난 1년의 노력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4. 국무총리로 취임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5. 국무총리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 국정과제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123대 과제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내부혁신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는 김혜경 여사와 대학동문으로 알려져있는데, 언제 처음 알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업무상 교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교류 내용은 무엇인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8.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여되므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일반 공직자보다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19. 고위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모든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여되므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권한과 지위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일반 공직자보다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20.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가족의 취업·사업 등을 위해 업무유관 기관, 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2. 본인,직계존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직계존속 관련 사항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4. 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5.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6.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8.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9. 해외여행 중 해당 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0.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는가?

□ 해외 부동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바, 주요 업무 및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6.3만여명을 기록했습니다.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최대이며,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동행축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은 '25년 1,200억 달러, '26년 1분기 298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K-뷰티 수출은 21.8억 달러로 '26.1분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동행축제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50% 감축 등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여,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 건을 발송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2. 후보자는 네이버 부사장 및 대표 재직 당시 회사와 관련된 성남FC후원 의혹 및 재판 내용에 대해 '알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회사 최고경영자로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책임회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당시 서비스총괄이사로 소관업무가 아니었습니다.

33.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문회당시 지적받은 불법증축 건물에 관련하여,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철거를 논의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25.12.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6.23. 완료 예정)입니다.

□ 이유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4. 후보자가 공직에 재임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 모든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사적인 인연이 공적 업무 처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늘 경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 네이버 대표 출신인 후보자가 AI·플랫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편향 또는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전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 말씀하신 바와 같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됩니다.

□ 정부는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으로,

○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 전력수요가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도권으로의 전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간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산업분야 △24.3%)를 차질없이 달성하면서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면서,

○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고부가·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38.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로 취임할 경우 추진될 최우선 민생 안전 대책은 무엇인가?

□ 농축수산물·에너지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주요 서민물가 품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수급 관리, 할당 관세 등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 후보자가 생각하는 야당과의 협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협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공통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40.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과 입장은 무엇인가?

□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현행 고위공직자 공직윤리제도 상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장, 자치단체장 및 공직유관단체장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가능(재산등록의무자만 해당)

41. 후보자는 불법 증축건물 관련 해명 과정에서 사실 관계와 다른 설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25. 12.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이유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42.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경제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전략은 무엇인가?

□ 미·중 간 전략경쟁 하에서 현 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굳건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과는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우리 외교영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인식과 안보 태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어떠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와 억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북한은 우리에게 큰 안보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4. 후보자는 북극항로 개척이 국가물류경쟁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북극항로 개척은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체항로 확보는 물론 조선·해운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범정부추진체계(북극항로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전문인력 양성, 항만 인프라 확충, 국제협력 확대 등을 지원·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 후보자는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농산물 시장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양국 간 관심사항, 기대 수준 및 인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 비관세 장벽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 국내 제도의 정책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한미 통상 관계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 최근 AI 확산이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AI 기술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신입·저숙련의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성형AI 도입 이후 AI 고노출 직군 22~25세 신입 채용 수요 급감('25, 스탠퍼드)
AI 고노출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청년고용 감소 집중('25, 한국은행)

□ 우선, K-뉴딜아카데미 등 AI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5년간 청년 200만명에게 AI 교육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K-뉴딜아카데미 : 대기업이 직접 AI 등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26년 신규, 1만명)

○ AI 대전환이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신산업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고용노동부) 6월말 발표 추진

47.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보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실거주 1주택 중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 최근 자산시장 성장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개정노조법의 취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 법이 안착되면서 노사간 전반적인 대화의 틀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노사관계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9. 국무총리로 취임할 경우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경우, 자신의 소신을 어떻게 개진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가?

□ 국무총리가 된다면, 민심을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도록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50.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이며, 지향해야할 지방분권의 모습은 무엇인가?

□ 지방분권은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사무 비중과 세입구조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 (국가:지방 사무 비율) '94년 86 : 14 → '24년 63 : 37
(국세:지방세 비율) '18년 78 : 22 → '23년 75 : 25

□ 앞으로 지방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 5극3특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노력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 후보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업 경쟁력 강화보다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이 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취임 시 중기부 임차 청사 고액 월세(2024년 기준 2억2천만원+관리비7,000만원, 2021년 이후 누적 200억원 돌파) 해결의지 있는 지, 해수부 이전 시 해당 자리로 중기부 청사 내 복귀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지적에, 행안부 수요 조사에 응하고, 행안부 결정에 따른다고 밝힌 바, 행안부 결정 및 관련 조치

□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업무 공간 마련이 시급했던 기획예산처의 우선 입주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 포털의 댓글 추천 기능은 후보자가 본부장 및 이사로 있던 엠파스 시절부터 후보자가 도입한 기능,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에도 후보자는 인터넷 네티즌 문화형성, 포털의 공공성 등을 언급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로 인한 댓글 조작, 인터넷 여론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당시, 후보자의 심정과 개인적 및 조직적 차원의 사후 조치 등

□ 공론의 장으로서 네이버 뉴스 댓글 공간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 또한, 뉴스 댓글 어뷰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54. 후보자는 NHN검색 품질센터 이사 시절 전투적으로 포털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원성을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명 자료 및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 현황 및 오영주, 이영 장관 시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실시 현황 (일시, 장소, 인원, 주요참석자, 관련지출 비용(예산) 등 포함)

□ IT 기업 재직 당시의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또한, 간담회 73회 등 총 152회에 걸쳐 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관련 지출은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붙임 **간담회 등 소통 현황**

1. 한성숙 장관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1	2025-07-24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 방문	소상공인
2	2025-07-27	당진 수해피해 전통시장방문	소상공인
3	2025-07-29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 및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	중소기업
4	2025-07-30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금융·위기대응·폐업)	소상공인
5	2025-08-01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6	2025-08-06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수출현장)	중소기업
7	2025-08-07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전통시장 등 재난안전체계)	소상공인
8	2025-08-14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제조 AX·DX)	중소기업
9	2025-08-20	창업벤처 릴레이 간담회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중소기업
10	2025-08-21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전달체계 개선)	중소기업
11	2025-08-29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12	2025-08-29	선학동 골목형상점가 현장방문	소상공인
13	2025-09-0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중소기업
14	2025-09-11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및 인력양성 간담회	중소기업
15	2025-09-11	전북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기반시설 방문	소상공인
16	2025-09-11	글로벌 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17	2025-09-18	창업벤처 릴레이 간담회 (유니콘 육성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	대·중소기업
18	2025-09-22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간담회	소상공인
19	2025-09-22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중소기업
20	2025-09-24	온라인수출 간담회	대·중소기업
21	2025-09-25	R&D 간담회	중소기업
22	2025-09-30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23	2025-10-01	창업벤처 릴레이 간담회(도메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24	2025-10-01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25	2025-10-15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회복 및 안전망)	소상공인
26	2025-10-16	창업전문가 간담회	중소기업
27	2025-10-16	방산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28	2025-10-23	소셜벤처 간담회	중소기업
29	2025-10-23	로컬크리에이터 간담회	중소기업
30	2025-10-30	창업벤처 릴레이 간담회(창업 루키)	중소기업
31	2025-11-12	온라인수출 간담회	대·중소기업
32	2025-11-19	AI 공급수요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33	2025-11-20	소상공인 릴레이간담회 회의	소상공인
34	2025-12-05	대전 글로컬 상권 방문	소상공인
35	2025-12-22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
36	2025-12-26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37	2026-01-15	송정역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38	2026-01-16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소공인)	소상공인
39	2026-01-31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소상공인
40	2026-02-05	모두의창업 간담회	중소기업
41	2026-02-06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42	2026-02-06	로봇분야 중소벤처 간담회	중소기업
43	2026-02-12	OpenData AI 챌린지 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44	2026-02-12	창업멘토단 간담회	중소기업
45	2026-02-13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46	2026-02-26	K뷰티 스마트제조혁신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47	2026-02-27	지역벤처투자 간담회 및 벤처투자 설명회	중소기업
48	2026-03-04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및 1차 간담회	중소기업
49	2026-03-13	상생형 소상공인 AI 스마트공장 간담회	대·중소기업
50	2026-03-24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육성 협업 간담회	중소기업
51	2026-03-26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중소기업
52	2026-04-01	중동전쟁 소상공인 영향점검 간담회	소상공인
53	2026-04-10	중동전쟁 장기화 관련 플라스틱 사출업체 현장방문	중소기업
54	2026-04-13	모두의창업 캠퍼스 투어	중소기업
55	2026-04-13	중동전쟁 K뷰티기업 간담회 및 수출입은행 업무협약식	중소기업
56	2026-04-14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중소기업
57	2026-04-14	중동전쟁 위기 속 상생 실천 기업 현장방문(협력사 간담회)	대·중소기업
58	2026-04-16	대전.충북 상장벤처 간담회	중소기업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59	2026-04-17	통영 지역상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소상공인
60	2026-04-17	지역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61	2026-04-17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 간담회	중소기업
62	2026-04-22	모두의 창업 대학 간담회	중소기업
63	2026-04-29	정부의 첫 실증, 구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중소기업
64	2026-04-30	모두의 창업 대학간담회	중소기업
65	2026-05-06	모두의창업 대학 간담회	중소기업
66	2026-05-08	모두의창업 대학간담회	중소기업
67	2026-05-1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여성, 육아)	소상공인
68	2026-05-13	모두의창업 캠퍼스 투어 간담회	중소기업
69	2026-05-15	인도진출 K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70	2026-05-18	동네책방 간담회	소상공인
71	2026-05-19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	소상공인
72	2026-05-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담회	중소기업
73	2026-06-02	소상공인 노무애로 간담회	소상공인

2. 오영주 장관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1	2024-01-01	청년창업 수출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2	2024-01-01	기업가형 소상공인 현장방문	소상공인
3	2024-01-03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4	2024-02-01	청년창업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5	2024-01-05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6	2024-01-05	소상공인 현장방문	소상공인
7	2024-01-12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8	2024-01-17	AI분야 글로벌 R&D선도기업 방문	중소기업
9	2024-01-23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격려 및 현장방문	소상공인
10	2024-02-01	청년 창업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11	2024-02-14	해양모빌리티 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12	2024-02-15	소공인 집적지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13	2024-02-21	복수의결권 1호 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14	2024-02-26	광주청년 창업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15	2024-02-26	청년고용복지우수기업 방문	중소기업
16	2024-02-28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17	2024-03-20	레전드 50+ 충북지역 간담회	중소기업
18	2024-04-08	스타트업 청년 간담회	중소기업
19	2024-04-30	청년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협약보증 MOU	소상공인
20	2024-05-03	로컬상권 방문	소상공인
21	2024-05-20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중소기업
22	2024-05-28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애로 현장해결단 소통행보	중소기업
23	2024-05-30	울산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소상공인
24	2024-06-21	우주분야 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25	2024-07-16	여름철 사업장 현장 점검	중소기업
26	2024-07-24	K-화장품 중소·벤처기업 관련 간담회	중소기업
27	2024-08-19	재기소상공인 현장방문	소상공인
28	2024-08-22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중소기업
29	2024-09-1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업종 현장점검	소상공인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30	2024-09-12	관계부처 합동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31	2024-09-13	경동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32	2024-10-02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33	2024-10-14	전남지역 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34	2024-10-14	순천 지역상권 방문	소상공인
35	2024-10-18	2024 속초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소상공인
36	2024-11-15	백년소상공인 간담회	소상공인
37	2024-11-21	수출 중소기업 방문	중소기업
38	2024-11-21	대구 염색산업단지 방문	중소기업
39	2024-11-25	외국인창업자 간담회	중소기업
40	2024-11-25	바이오벤처 간담회	중소기업
41	2024-11-28	상생협력 우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42	2024-12-16	대전송강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43	2024-12-20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44	2025-01-02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45	2025-01-07	무안 상권점검	소상공인
46	2025-01-13	공주 골목형상점가 현장방문	소상공인
47	2025-01-16	벤처캐피탈 간담회	중소기업
48	2025-01-16	바이오벤처업계 간담회	중소기업
49	2025-01-17	전통시장 민생현안 간담회	소상공인
50	2025-01-2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소상공인
51	2025-01-21	CES 수상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52	2025-01-23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53	2025-01-24	정책면세점 현장방문	중소기업
54	2025-02-06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방문	소상공인
55	2025-02-06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방문	소상공인
56	2025-02-06	로컬크리에이터 방문	소상공인
57	2025-02-14	경남지역 레전드50+ 기업간담회	중소기업
58	2025-02-27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소상공인
59	2025-03-04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소상공인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60	2025-03-05	해외진출 중소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61	2025-03-06	통영 글로컬 상권 간담회	소상공인
62	2025-03-10	인천 골목형 상점가 방문	소상공인
63	2025-03-12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64	2025-03-17	수원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간담회	소상공인
65	2025-03-19	소공인 상생협력 현장방문	소상공인
66	2025-04-01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방문	중소기업
67	2025-04-21	전주 글로컬상권 현장방문	소상공인
68	2025-05-03	골목형 상점가 방문	소상공인
69	2025-05-07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간담회	중소기업
70	2025-05-15	자동차부품 업계 현장간담회	중소기업

3. 이영 장관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1	2022-05-25	통인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2	2022-05-26	주 52시간제 및 인력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3	2022-06-03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집행 현장점검	소상공인
4	2022-06-16	팹리스 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5	2022-06-22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중소기업
6	2022-07-14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7	2022-07-14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방문	중소기업
8	2022-07-20	소상공인 민생현장(라이브 커머스) 탐방	소상공인
9	2022-07-21	유니콘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
10	2022-08-02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 간담회	소상공인
11	2022-08-10	수해현장 방문 및 피해복구 지원	소상공인
12	2022-08-19	피해시장 현장방문 및 복구지원 대책	소상공인
13	2022-08-26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전통시장방문	소상공인
14	2022-09-05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중소기업
15	2022-09-05	추석, 동행축제 맞이 광장시장 방문	소상공인
16	2022-09-16	뿌리기업 간담회	소상공인
17	2022-09-18	실리콘밸리 디지털 유니콘 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18	2022-09-30	경북 헴프규제자유특구 방문	중소기업
19	2022-11-16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금융애로 간담회	중소기업
20	2022-11-17	구미전자공고 및 새마을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21	2022-12-22	소공인 현장방문 및 나눔행사	소상공인
22	2023-01-03	8시간 추가연장근로 관련 제조현장 방문	중소기업
23	2023-01-12	이태원 피해 소상공인 면담	소상공인
24	2023-01-12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중소기업
25	2023-01-26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26	2023-02-03	이태원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방문	소상공인
27	2023-02-28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중소기업
28	2023-03-02	전주첨단벤처단지 기업간담회	중소기업
29	2023-03-03	AI 분야 창업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연번	일자	행사명	구분
30	2023-03-07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소상공인
31	2023-04-05	청년 VC 투자심사역 간담회	중소기업
32	2023-05-03	울산 조선사 협력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33	2023-05-03	지역혁신 네트워크 간담회	중소기업
34	2023-06-07	소상공인 업계 정책나눔회 개최	소상공인
35	2023-06-09	AI 스타트업 간담회	중소기업
36	2023-06-23	베트남 진출 스타트업 및 투자사와 간담회	중소기업
37	2023-07-06	전통시장 수해 대비 현장 점검	소상공인
38	2023-07-14	부산 지역혁신네트워크 미래신산업(금융·수소)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39	2023-07-14	부산지역 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소상공인
40	2023-07-21	서울 영동전통시장 수해 대비 상황 점검	소상공인
41	2023-07-26	수해 피해 중소기업 현장 방문	중소기업
42	2023-09-02	로컬 팝업스토어 방문	소상공인
43	2023-09-11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44	2023-09-13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	소상공인
45	2023-09-18	인천 남동공단 입주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46	2023-09-18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47	2023-09-25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48	2023-10-18	부산지역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49	2023-10-18	부산지역 전통시장 현장방문	소상공인
50	2023-11-08	아마존웹서비스(AWS)부문 글로벌 총괄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논의	중소기업
51	2023-11-20	소상공인 부담완화, 다회용품 사용문화 안착을 위한 브라운백 미팅	소상공인
52	2023-11-29	대유위니아 협력사 간담회	중소기업

55.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문에 '유통환경 변화, 중소유통 보호, 소비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종합적 고려를 통해 어떤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온라인 유통 확대 등으로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변화된 유통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6.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탕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일체 및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한 현황, '성실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현황 등 포함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에 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 채권 7년 이상 연체 차주는 사실상의 상환능력 상실과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재기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 최대 5천만원 감면을 위해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였습니다.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 비율이 지속 상승('15년 70.8% → '25년 73.5%, 신복위)하는 등 우려와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성실상환자' 비율 10년새 늘었다…맞춤형 채무조정제도 효과(뉴스1, '25.4.30.)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규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있으며, 기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패키지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성실상환 차주 3.6만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을 지원하여 월평균 상환부담을 최대 75%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7. 중기부 장관 시절 ‘해외유망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로 유치’한 현황
(발굴 업체 및 국내 유치 업체명 및 해당 업체 관련 주요 소개 및 성과, 현재도 업체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의 사업을 통해 해외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시장 진입 및 정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주요 사례는 영국 출신 창업자(Ashley Reeves)가 설립한 AI 보안 솔루션 기업 아르바랩스(ArbaLabs)가 있습니다.

○ AI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검증하는 ‘AI 전용 블랙박스’가 주력인 아르바랩스는 작년 12월에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누리호 5차 탑재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8. 중기부 장관 시절 '기존의 소상공인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현황, 해당 지원 사업의 최초 시작 연도부터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 성과 등

□ 소상공인이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시장에 적응하도록 온라인판로 지원*('20년 신설)을 추진하였고,

* ▲(사업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26년 예산) 784억원
▲(성과) 입점지원 등 7.9만건, 매출액 6,343억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20년 신설)을 지원*하여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사업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6년 예산) 349억원
▲(성과) 총 1만개사에 스마트 기기 등 보급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22년 신설)을 위해 역량강화, 배송인프라 구축 등 인적·물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고,

* ▲(사업명)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지원 ▲('26년 예산) 12억원
▲(성과) 초기지원 20개 시장, 고도화 55개 시장 등

○ 소상공인의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활용 교육 및 사업화도 지원할 예정('26년 신설)입니다.

* ▲(사업명) 소상공인 AI활용 지원▲('26년 예산) 143억원,
▲(성과) '25년 시범 사업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AI활용 교육 진행
(오프라인 참여인원 562명, 온라인 평균시청자수 454명)

59. 중기부 장관 시절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우리 곁에서 영업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판로 지원' 현황, 해당 지원 사업의 최초 시작연도부터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 성과 등

□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였으며,

* ▲(사업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6년 예산) 692억원 ▲(성과) 백년시장 12곳 선정, 컨설팅 등 369곳 지원 예정 등

○ 동행축제('20년~)와 범정부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25년~) 개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사업명) 동행축제 ▲('26년 예산) 108억원 ▲(성과) '26년 4월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매출 5,441억원 등

○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09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였습니다.

* ▲(사업명) 온누리상품권 발행 ▲('26년 예산) 4,580억원 ▲(성과) '25년 온누리상품권 4조원 판매(지류 1.1조원, 디지털 3조원)

□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해 상권별 맞춤 지원하는 '지역상권육성사업*('26~)'을 추진 중입니다.

* '글로컬상권(150억원), 로컬테마상권(100억원), 유망골목상권(125억원)

60. 종로구 삼청동 35-184 시설을 여전히 남동생에게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 지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남동생에게 2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밝힌 바, 이후 현재까지 임대표 변동이 있는 지 여부 및 주변 시세보다 임대표가 상당히 낮다는 지적, 특히 가족 간 헐값 임대는 편법 증여, 꼼수 증여를 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및 해당시설에 대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차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 남동생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동산이 입지가 좋지 않고 공실보다 임대가 나을 것으로 보아, 현재 금액으로 임대한 것입니다.

61. 후보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유한 주택이 아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 별도의 아파트에 전세(전세가 18억 5천만원)로 거주하는 이유

□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했는데, 삼청동 주택은 주변 언덕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 적절치 않아서 종로구 아파트 전세를 구한 것입니다.

62. 현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 현황(해당 실거주자와의 관계)

□ 현재 실거주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재지	거주 내역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85	▶ 2026. 4. 10. 여동생 한명숙에게 지하1층~1층 임대

63.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기부의 AI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해당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 관련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한 최초시기(사업명 변경 시 변경 전 사업 포함) 및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사업 성과 등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장관 재임 이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AI 위주로 강화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26년 8천억).

구 분	과 제	'26.예산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2,113억원
창업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투·융자 자금 지원 및 인력 양성	3,938억원
지역	지역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원스톱 지원	1,809억원
정책전달	중기통합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OpenData x AI 챌린지 기업 지원·재무 정보 기반 사업 추천 및 신청서 작성 보조	225억원

○ 또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안의 심의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4.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힌 정책목표 3가지 및 해당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달성했다고 생각할 경우, 관련 근거 자료 일체

□ ①현장의 목소리 경청, ②중소기업 AI전환, ③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였고,

① 업계, 관련기관 등과 지속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25.8.21),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25.10.1) 등

** 신청서류 50% 감축, 제출서류 연 566만장 절감, 정책고객 57만 시간 절약 등

②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❶제조 현장의 AI 도입, ❷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③ 위기 소상공인 대상 선제적 정책안내*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공제제도***도 확대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건 발송

** 전국 17개 광역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체계 완성('26.5.15)

*** 노란우산공제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3→5년) 등

65.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정책 또는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 무엇이라고 보며,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한 뒤, 정책을 직접 진단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해당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25.8.21),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 협의회('25.10.1) 등

○ 이를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하는 등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였고,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 64개로 분산되어 있던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도 개설하였습니다.

붙임 **중기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5. 29.(금) 조간 < 5. 28.(목) 15:00 >

중기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8일(목)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언론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5.28.(목) 10:30~11:20 / SVC 서울 (11층)
- **(참 석 자)** 중기부 장관 및 실·국장 / 중기부 출입기자단
- **(주요 내용)** 핵심정책 성과, 향후 정책방향, 기자단 Q&A

1. 정부 출범 1주년 소회·성과

먼저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정책 목표와 행정 혁신 과제를 다시 언급하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들은 목소리는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현장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또한, 중기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1년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830만 개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美)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5년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26년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 경기 역시 단계적인 소비 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소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 역시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반등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천억 원(역대 최대)과 투자액 3조 3천억 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개소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재도전 응원본부'를 당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도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우선 지정하고, 창업부터 기술개발·투자·판로까지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이후 '27년까지 6개를 추가 선정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서류 50% 감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26년 3월에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의 시행으로 정책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2. 향후 정책방향

중기부는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맞춤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

또한 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66. 스마트 공장 대폭 확대 및 고도화로 중소기업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美 관세특화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 역량을 제고한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투자를 폭넓게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 생산성 34.4%, 품질 44.1%가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 경쟁력도 함께 뒷받침하였습니다.

○ '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2조 원으로 편성하고 그 절반을 TIPS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며,

* 민간이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술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지원하는 프로그램

○ 美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집행하여,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25.9.3일)

67. 후보자가 민간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전통 중소제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성장에 새로움을 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이를 통해, '25년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생산성 34%, 품질 44% 개선되었으며,

○ '26년 현재 2천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실전모델 설계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 네이버 대표이사 재임 등 네이버 재직 시절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성공과 실패가 어떤 정책으로 연결됐는지 여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과거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표 재직시 커머스 사업 성장과 네이버웹툰 등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대, AI와 관련한 과감한 투자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9. 중기부장관 시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율 경험 및 이를 통한 성공 사례 등

□ 중소기업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전달체계를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간담회('25.8.21),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25.10.1), ▲창업·벤처분야 릴레이 간담회 10회('25.8~'25.10) ▲소상공인 성장 간담회 9회('25.11~'26.1) 등

○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서류 대폭 감축, 선제적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또한, K-뷰티, 방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정책 연계·조율을 거쳐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며,

○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조율을 통해 범정부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70. AI 등 ICT 벤처·스타트업을 산업별 기업이나 중소·소상공인과 연결하여 기업 생태계전반으로 디지털·AI 기술이 활용·확산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구체적인 자료 일체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장관 재임 이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AI 위주로 강화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26년 8천억).

구 분	과 제	'26.예산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2,113억원
창업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투·융자 자금 지원 및 인력 양성	3,938억원
지역	지역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원스톱 지원	1,809억원
정책전달	중기통합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OpenData x AI 챌린지 기업 지원·재무 정보 기반 사업 추천 및 신청서 작성 보조	225억원

○ 또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안의 심의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붙임 중소기업 AI 활용 · 확산 지원방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5 - 11 (6호)

중소기업 AI 활용 · 확산 지원방안(안)

2025. 11. 24.

중소벤처기업부

Ⅰ. 중소기업 AI 전환 추진배경 및 현황

□ **(AI 창업)** 국내 전체 벤처투자가 약 1.2배 확대('19~'23)되는 동안, **AI 분야는 약 2배 성장**하는 등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증가**

* AI 분야 벤처투자 금액 : ('19) 2,258억원 → ('21) 5,056억원 → ('23) 4,262억원

○ 하지만,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하고, **AI** 종합 경쟁력 대비 중소기업 관련 AI 역량은 부족

* 오픈AI 등 59개사 > 유비테크 등 10개사 > 7개사 > 5개사 > 0개사

** AI 종합 경쟁력은 6위로, 디지털 연결·반도체·특허 등은 우수하나, 중소기업 AI 활용과 관련된 상용화·인재 등은 10위권 밖 (英 Tortoise, 24.9)

□ **(제조 AI)** **제조 분야 AI 전환**에 핵심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고, **기술력은 AI 선도국 대비 낮은 상황****

* 등록 공급기업 : ('16) 299 → ('20) 1,959 → ('24) 2,460개 / 중소기업 89%

** 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 비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4) :
미국 100% > EU 97.2% > 일본 88.8% > 중국 82.3% > 한국 74.9%

□ **(AI 활용)**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은 정보 및 **기술공급 부족, 인력 및 데이터 확보 애로, 투자 수익률(ROI) 불확실성** 등으로 저조

* AI 미활용 원인(KIET, '24) : **기술 및 인프라 부족**(1위, 34.6%), 비용부담(23.1%)
중소기업 AI 도입애로(기술통계조사, '24) : **전문인력 부족**(1위, 36.1%), 비용부담(34.7%)

○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지역 간 격차도 큰 상황**

* **AI 활용률**(대한상의, '24) : 대기업(48.8%)·**중소기업(28.7%)** / 수도권(40.4%)·**비수도권(17.9%)**

○ 또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AI 도입을 통한 **스마트·디지털化**가 중요하지만, 이들의 **AI 도입률은 저조***

*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23) :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 70%이나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율은 29%에 불과**

Ⅱ. 중소기업 AI 지원방안 및 과제

◇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과 수요 중소·소상공인 지원부처로서 **AI 창업에서 활용·확산**까지 지원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

비전

중소기업 전반의 AI 활용 · 확산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30년 목표

▶ 우리나라 AI 종합경쟁력 **세계 3위** (정부 목표)

* AI 종합경쟁력 6위 (英 Tortois, '24)

▶ 중소기업 **도입률 50%, 상용화 5위** (중기부 목표)

* AI 도입률 28% (OECD 보고서, '24), AI 상용화 12위 (英 Tortois, '24)

지원 방안

(AI 스타트업) 1. 혁신 AI ·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유망 AI 창업가 발굴·육성 ■ AI·딥테크 선도 스타트업 집중 지원 ■ AI 분야 개방형 혁신 및 협업 촉진 ■ AI 스타트업 공공데이터 활용 솔루션 개발
(제조 AX) 2. AI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추진	■ AI 기반 자율형 스마트공장 도입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집중 육성 ■ 제조 AI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 · 소상공인 AX) 3. 중소 · 소상공인 AI 활용 · 확산 촉진	■ 소기업·소상공인의 AI 활용기회 확대 ■ 지역 중소기업의 AX 확산
(AI 기반) 4. 중소기업 AI 활용 기반 구축	■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AI 인재 육성 ■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AI 활용촉진법 제정

전략1 혁신 AI ·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유망 AI 창업가 발굴·육성

○ 과기특성화대를 중심으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고급인재**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AI·딥테크 창업** 촉진

○ **핵심 기술분야**에 도전하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 성장단계**(예비-초기-도약)에 따라 **특화 지원하는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 AI·딥테크 선도 스타트업 집중 지원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추진** (총 13.5조원, ~'30년)

○ AI·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하여('23~'27) **기술사업화·R&D 집중 지원**

□ AI 분야 개방형 혁신 및 협업 촉진

○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25. 13개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Around X'** 프로그램 추진

* (~'25) 엔비디아, MS, AWS, IBM, 오라클, 인텔, 로레알 → ('26) HP, 오픈AI 추가

○ 도메인별 **가치사슬에 최적화**된 대기업 등 **AI 수요기업**과 혁신 **AI 스타트업**간 협업지원을 통해 **기술실증(PoC) 및 판로** 등 지원

* (예시) AI 로봇/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AI 드론/ 한화시스템, 네온테크

□ AI 스타트업의 공공 데이터 활용 솔루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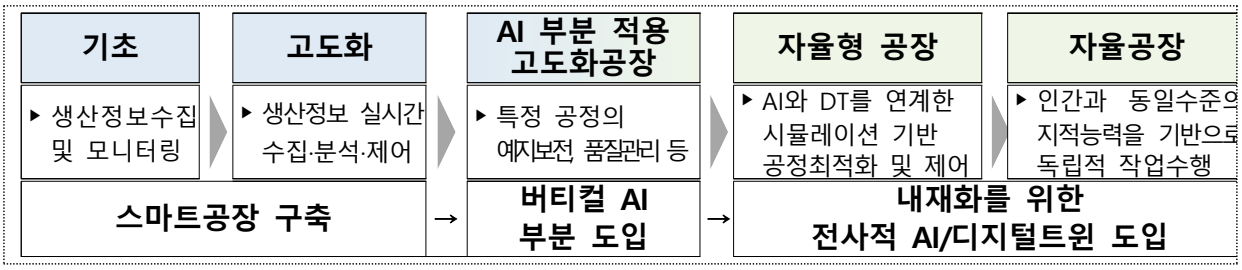
○ AI 스타트업 대상 **「OpenData X AI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중기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과제별 **AI 기반 솔루션 발굴**

◇ **"2030 글로벌 AI 유니콘 육성 계획"** 수립('26 上)

전략2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추진

□ AI 기반 자율형 스마트공장 도입

○ 스마트공장 등 **DX 기반 위**에 **버티컬 AI**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신속히 확산**



○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해 화장품, 식품 등 **중소기업 특화업종**에 최적화된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 도입지원 확대**

*** 산업부(조선), 과기정통부(5G), 복지부(의료기기), 방사청(방위산업) 농식품부(식품제조) 등**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집중 육성

○ 창업부터 벤처투자, R&D, 판로 확대, 해외 진출 등 **기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26~)

○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AI 기반 역량 평가, 맞춤형 컨설팅 등 **기술기업 육성 체계 확립** (스마트제조 관련법 제·개정 추진, '25~)

□ 제조 AI 혁신 생태계 조성

○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이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토록 중소기업의 AX 지원 플랫폼**(제조AI 24) **구축**(제조AI 24 ISP 추진, '26~)

***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개편 및 수요-전문기업 매칭, LLM기반 AX 전략수립 등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확대

* 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개발계획 : ('24) 50개 → ('25) 115개 → **('26) 335개**

◇ 스마트제조혁신 3.0 **본격 추진 및 성과창출** ('26~)

전략3 중소 · 소상공인 AI 활용 · 확산 촉진

□ 소기업·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 확대

○ 국내 대표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AI 교육** 추진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강원 8개 지역에서 교육과정 개설

○ 소상공인의 역량·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지원방안**을 **기획* 하고, AI를 활용한 분야별**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 예) 온라인 판로 진출, 업종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기기 보급, 생산공정 제고 등
** 경영관리, 홍보·디자인, 업무자동화, 제품개선·개발, 판로개척 등

○ 스마트공장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도 AI 도입(제조로봇, 자동화 설비)**할 수 있도록 **공정·라인 단위 AI 도입**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AX 확산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제조 AX·DX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AX 사업 추진**('25~'26, 5개 지자체)

* [경남] 우주항공·방산·기계, [대구] 자동차부품, [전남] 화학·철강·세라믹, [울산]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정밀화학 [제주] 바이오

◆ **(지역 AX 비전 선포식)** '25년 선정된 5개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 AX 붐업 및 AI 네크워크 구축**

○ **5극 3특 성장엔진, ABCDEF 전략*을 반영**하여 **6대 분야**, 14대 산업에 AI를 공통 툴로 적용하여 **주력산업의 AX를 촉진**

* [A]인공지능 + [B]바이오, [C]문화관광, [D]방산·우주, [E]에너지, [F]제조 & [M]모빌리티

○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구**를 **지정**('25. 6개)하여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 **'5극 3특' 중심**「지역 기업 AX 혁신 지원 방안」수립('26 上)

전략4 중소기업 AI 활용 기반 구축

□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AI 인재 육성

○ 재직자 대상 **AI 특화 계약학과**, 직무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AI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역량 강화**('26~)

○ **AI 연구인력 채용** 및 **공공연**의 **AI전문가 파견 지원, OJT 훈련** 등으로 **현장맞춤형 AI 인력양성** 등 AI 연구수준 향상('26~)

□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 **창업자 희망 7대 분야**(법률, 세무, 경영, 공간, 행사, 정부지원, 규제) **AI**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26.下~)

○ 창업, 수출, 소상공인, 제조 AI 등 **지원분야별 특화정보 제공**

분 야	정보제공 주요내용
창 업	▪ 지원신청 희망 스타트업과 사업간 적합도를 「닮음지수」로 제시('26.下~,창진원)
수 출	▪ 품목·국가별 관세, 수입수요 등 정보와 맞춤형 수출국가 추천('25.12~중진공)
소상공인	▪ 상권분석 등 맞춤형 상담·분석을 제공하는 「AI 도우미」 구현('26.下~소진공)
제조AI	▪ 「제조AI 24」로 플랫폼 통합, 제조기업과 최적의 기술기업 추천('30)

□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

○ **(목적)**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체계 마련** 및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기술 변화 대응 및 경쟁력 확보**

* 국정과제 20-4.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유관 법령 정비

○ **(내용)** AI 규제 해소·완화, 학습 데이터 활용·확보, 지역 AI 생태계 구축, 중소·소상공인 AI 도입·활용, 특화 AI 중소기업 육성 등

◇ **중소·스타트업 GPU 활용지원 추진** ('26 上, 과기정통부 협의)

71. 중기부 장관 시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와 스스로에 대한 자평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미 관세,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K-뷰티·온라인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5년 및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 화장품 수출 및 온라인 수출 최대 실적 달성 등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붙임1. 2025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붙임2.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붙임1 **2025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1. 29.(목) 조간 < 1. 28.(수) 12:00 >

2025년 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 기록(+6.9%)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 및 수출기업 수 역대 최대 기록

- 자동차·화장품은 각각 3년 연속 전년 실적을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 재경신
- 對중국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 전환하여 중소기업 수출 1위 국가로 재등극, 對미국 수출은 관세 영향에도 보합세를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8일(수)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을 발표했다.

《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

1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분포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잠정치 기준)를 기록했다.

* 연도별 中企 수출액(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1) 1,155 (+14.7) [2위] → ('22) 1,145 (△0.9) [3위] → ('23) 1,097 (△4.2) → ('24) 1,110 (+1.2) → ('25) 1,186 (+6.9) [1위]

2025년 수출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2~4분기는 분기별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던 상위 품목이 하반기에 대다수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상반기(+2.8%) 보다 하반기(+10.8%)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 분기별 中企 수출액/증감률(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4.4Q 287 (+2.1%) → '25.1Q 269 (+0.4%) → '25.2Q 297 (+5.1%) → '25.3Q 304 (+11.4%) → '25.4Q 316 (+10.3%)

수출 중소기업 수는 98,219개사로 전년(95,815개사) 대비 소폭(+2.5%)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업수를 기록했다. 또한 신규(+2.2%) 수출 및 지속기업(+2.6%)은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감소(△2.0%)하며 수출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2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국가별 특징

<주요 수출품목>

중소기업 상위 수출품목 중 자동차, 화장품, 전자응용기기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6.1%로 총수출 집중도(60.9%)에 비해 낮은 편으로 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어 글로벌 경기변동에도 완충 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1위자동차(+76.3%)와 2위화장품(+21.5%)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올해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품목도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 총수출 상위 10대 품목 (억달러, %) **】**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반도체	1,734	24.4	+22.2
2	자동차	720	10.1	+1.7
3	석유제품	455	6.4	△9.6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18	4.5	+24.1
5	합성수지	217	3.1	△8.2
6	자동차부품	212	3.0	△5.9
7	철강판	185	2.6	△8.4
8	무선통신기기	173	2.4	+0.4
9	평판DP및센서	172	2.4	△9.2
10	컴퓨터	137	1.9	+4.4
상위 10대		4,322	60.9	+6.9
전 체		7,094	100.0	+3.8

【 中企 수출 상위 10대 품목 (억달러, %) **】**

구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자동차**	**90**	**7.6**	**+76.3**
2	**화장품**	**83**	**7.0**	**+21.5**
3	플라스틱 제품	48	4.0	△0.2
4	자동차부품	43	3.6	△1.3
5	**반도체제조용장비**	**32**	**2.7**	**+2.4**
6	**반도체**	**32**	**2.7**	**+4.2**
7	합성수지	30	2.5	△8.3
8	**전자응용기기**	**27**	**2.3**	**+1.2**
9	기계요소	23	2.0	△0.7
10	기타기계류	22	1.8	△25.5
상위 10대		429	36.1	+11.7
전체		1,186	100.0	+6.9

자동차 수출의 경우 CIS 국가인 키르기스스탄(+106.0%), 카자흐스탄(+107.2%)의 한국 중고차 수요 증가와 인지도 상승하였으며, UAE(+91.2%) 등 중동으로 중고차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화장품은 K-뷰티 인기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77.6%), 중동(+54.6%)까지 수출 다변화를 실현하면서 수출국가수(204개국, +7개국)와 수출액(83.2억달러, +21.5%) 모두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은 관세 영향에도 북미 시장은 소폭 증가(+0.6%)하였으나, 그 외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현지 완성차 업계의 판매실적 감소 등으로 인한 완성차 생산 축소 영향으로 중소기업 자동차부품 수출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주요 수출국>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 '25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단위 : 억달러, %) **】**

구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키르기스스탄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수출액	189.0	182.8	108.3	93.9	59.4	34.1	34.0	32.5	26.8	25.8
증감분	9.8	-1.0	-1.7	4.8	19.8	6.0	16.8	-0.8	-0.1	-1.2
증감률	+5.5	△0.6	△1.5	+5.4	+50.1	+21.4	+97.7	△2.4	△0.2	△4.6

중국은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K-패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확산으로 소비재(화장품, 의류) 수출 증가와 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22년부터 3년간 이어지던 감소세를 마감하며 동시에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하였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화장품,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美품목관세 대상인 철강은 현지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규모가 감소(△8.6%)했으나, 알루미늄은 기존 對미 주요 수출국의 물량감소분 일부를 한국이 대체하면서 증가(+9.3%)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對미 품목관세 수출액 : 철강(파생상품 포함) 45.7억$(△8.6%), 알루미늄(파생상품 포함) 47.5억$(+9.3%), 자동차부품 20.5억$(+7.9%)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동(64.5억달러, +14.1%), CIS(88.6억달러, +37.3%)에서도 K-뷰티, 푸드 등 소비재가 한류 컨텐츠 확산과 글로벌 소비 추이 변화로 중소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20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전년(10.4억달러)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국내 온라인 총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75.6%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中企 온라인 수출액/증감률 (억달러, %) : ('23) 7.6 (+11.5) → ('24) 10.4 (+36.7) → ('25) 11.0 (+6.3)

온라인 수출 상위 품목인 화장품은 영국(+261.7%), 네덜란드(+138.0%)

등 유럽 수출이 급증하였고, 의류는 중국(+109.8%), 대만(+149.8%) 등 중화권 수출이 증가하며 對미국, 일본 감소를 상쇄하였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4,392개사로 전년대비(3,821개사) 크게 증가하며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수/증감률 (천개사, %) : ('23) 4.1 (+8.0) → ('24) 3.8 (△7.0) → ('25) 4.4 (+14.9)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백만달러, %) **】**

구분	'24년	'25년	증감률
화장품	580.5	663.7	+14.3
의류	97.3	100.7	+3.5
컴퓨터	83.0	79.2	△4.6
문구 및 완구	51.7	35.5	△31.4
서적	34.3	28.9	△16.0
주요품목 소계	846.9	907.9	+35.8
온라인수출액	1,039.9	1,104.9	+6.3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 (백만달러, %) **】**

구분	'24년	'25년	증감률
미국	513.3	506.4	△1.3
일본	169.6	132.3	△22.0
중국	122.1	127.3	+4.3
영국	24.1	55.8	+131.6
네덜란드	24.1	43.2	+79.1
주요국가 소계	853.2	865.0	+40.8
온라인수출액	1,039.9	1,104.9	+6.3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5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정책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통상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5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분석
- 수출기업수는 수출자(화주)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업규모 구분(대·중견·중소)은 발표 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대기업) '25.11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 (중견기업) '23년 결산 기준(산업부)
- 관세청 연간 무역통계 확정('26.2월)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구분('26.4월) 후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붙임2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4.30.(목) 조간 < 4.29.(수) 12:00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 '26년 1분기 中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

– 품목1위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 역대 분기 최고 실적

– 국가1위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 中企 수출 1위국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9일(수)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1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잠정치 기준)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1분기 中企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23.1Q 268 (△9.6%) → 24.1Q 268 (+0.1%) → '25.1Q 273 (+1.7%) → **'26.1Q 298 (+9.1%)**

온라인 수출은 3.0억 달러로, 미국(+25.1%), 중국(+43.4%), 영국(+191.6%)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분기 중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연도별 1분기 中企 온라인 수출액(억달러) : 1위('26) 3.0, 2위('25) 2.2, 3위('24) 2.2

수출 중소기업 수는 **64,706개사**로 전년 동기대비(63,033개사) **2.7% 증가**하였고,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역시 **2,735개사**로 14.4% 늘었다.

* 온라인 수출기업수/증감율(개사/%): ('24.1Q) 2,193 → ('25.1Q) 2,390 → ('26.1Q) **2,735(+14.4)**

2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국가별 특징

<주요 수출품목>

중소기업 주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26년 1분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35.1%)과 **유럽**(+43.7%)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중동 수출 감소(△16.1%)에도 불구하고 21.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21.3%)을 달성했다.

* 화장품 역대 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6.1Q) 21.8**, 2위('25.3Q) 21.7, 3위('25.4Q) 21.6
* 주요 권역별 화장품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아시아) 10.4 (+7.8), (북미) 4.6 **(+37.6)**, (유럽) 5.0 **(+43.7)**, (중동) 0.8 (△16.1)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2% 증가**한 **2.0억 달러**로,

미국(+60.8%), 중국(+91%), 영국(+28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도체(11.3억 달러, +55.6%)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고성능 통신장비,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이 **홍콩**(+214.8%), **베트남**(+35.4%), **대만**(+82.5%)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홍콩 4.3(+214.8%), 베트남 2.8(+35.4%), 중국 1.7(+1.2%)
**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반면 **자동차**(14.7억 달러, △15.2%)는 러시아의 **수입차 부과 세금 인상** 및 중동 전쟁에 따른 **해협 봉쇄** 영향으로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주요 권역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CIS) 7.2(△22.0), (중동) 3.4(△10.5)
↳ CIS 주요 수출국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키르기) 4.0(△21.9), (러시아) 1.0(△36.6)

<주요 수출국>

'26년 1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태국** 6개국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4개국 **수출은 감소**하였다.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단위: 억달러, %) **>**

국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니
수출액	48.8	44.7	27.4	22.2	20.2	9.4	9.4	6.8	5.9	5.8
증감률	+10.6	△2.7	+9.7	△2.8	+86.3	+29.4	+23.6	+4.4	△4.0	△2.9
비중	16.4	15.0	9.2	7.4	6.8	3.2	3.1	2.3	2.0	1.9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 부품용 동박 등 **구리 가공제품**(3.0억 달러, +65.8%) 수출 호조와 **의류**(1.5억 달러, +36.3%)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4.1억 달러, 35.1%) 및 **자동차부품**(2.9억 달러, 4.4%)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전력용기기(2.6억 달러, △5.1%) 등이 기저효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2.7%)하였다.

또한, **1분기 중동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6.9% 감소**한 **1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수출규모(13.8억달러)를 밑돌았다. **자동차**(3.4억 달러, △10.5%), 자동차부품(1.0억 달러, △16.2%) 및 화장품(0.8억 달러, △16.1%)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동반 감소**하였다.

특히, 1분기 중 3월 한 달만 살펴보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중동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9.5% 감소**하였으나, 화장품,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이 아시아 등 **주력 시장**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3월 전체 수출액**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 3월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아시아) 66.6 (+20.7), (북미) 18.6 (+4.5), **(중동) 2.89 (△49.5)**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 수출이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며,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다양화, 주력 수출제품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ㅇ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 분석
- ㅇ 수출기업수는 수출자(화주)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업규모 구분(대·중견·중소)은 발표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대기업) '26.2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 (중견기업) '24년 결산 기준(산업부)
- ㅇ 관세청 연간 무역통계 확정('27.2월)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구분('27.4월) 후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72. 중기부 장관 시절,연기금·기업·금융권 등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유도, 모태 펀드의 투자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중기부 장관 시절, 모태펀드를 통해 차세대 유니콘, 창업초기 등 1.2조원을 출자하여 71개 펀드, 2.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하였으며('25.7월~),

○ 연기금·기업·금융권 등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LP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관련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 모태펀드가 1,700억원 출자, 총 8,500억원 규모 자펀드 조성 예정

**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상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26.1.)
(금융권) 위험가중치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26.3.)

□ 이를 통해 '26년 1분기 벤처투자는 역대 두 번째인 3.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했고,

* ('24.1Q) 19,573억원 → ('25.1Q) 26,752억원 → ('26.1Q) 33,189억원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했습니다.

* ('24.1Q) 16,688억원 → ('25.1Q) 25,501억원 → ('26.1Q) 43,652억원

붙임 **국내 벤처투자 동향**

□ 개요

○ 벤처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등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벤처투자・펀드결성 동향에 대해 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 '23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의 '신기술금융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실적 합산하여 발표

□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 (벤처투자) '25년 벤처투자 금액은 13.6조원(역대 두 번째), '26.1분기에는 3.3조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회복세

< '22~'26.1분기 벤처투자 동향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1Q	2026.1Q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금액		124,706	109,133	119,457	136,244	26,752	33,189	+24.1%
업력별	7년 이하	76,422	57,517	55,794	62,088	12,959	14,449	+11.5%
	3년 이하	33,594	26,808	22,243	22,666	7,378	6,675	△9.5%
	7년 초과	48,284	51,616	63,663	74,156	13,793	18,741	+35.9%

* 벤처투자회사·조합과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 (펀드결성) '25년 펀드결성은 14.3조원(+34.1%)이고 '26.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4.4조 규모로 결성,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확대 추세

< '22~'26.1분기 벤처펀드 결성 동향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1Q	2026.1Q	전년 동기 대비
결성 금액		176,385	130,438	106,404	142,669	33,399	43,652	+30.7%
출자자	정책금융	32,151	21,761	24,393	27,407	5,827	10,606	+82.0%
	민간부문	144,234	108,677	82,012	115,261	27,572	33,045	+19.8%

73. 중기부장관 시절,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자평, 및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일체

□ 금융부담 완화 정책으로 ①성실상환자 우대, ②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③채무조정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정책자금 금리우대,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패키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②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우선도 평가를 도입하여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취약자금(5,000→6,000억원), 대환대출(2,000→3,000억원) 규모를 총 0.9조원(+0.2조원)으로 확대(본예산 기준)

** 저신용자(+67%p), 비수도권 지역 소재 소상공인(+27%p),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25%p) 지원 비율이 기존(선착순 방식) 대비 증가

③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연장 및 금리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였고,

- 향후 채무조정 규모 확대(상각 연 1천억원 → 3천억원) 및 채권소각('26. 下)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4. 중기부 장관 시절, 직원들의 업무를 세심하게 살피고 직원들이 가진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부, 관련 성과 및 자평

□ 실무자와 직접 소통,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6급 이하 실무자 및 신규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고, 제안된 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즉각 제도화하였습니다.

* (사례1) 장관-주무관과의 대화('26.2.26) : 현장 건의사항 '신규자에 대한 업무교육 필요' 즉시 검토하여 '멘토-멘티 제도' 운영('26.3.18)

** (사례2) 실무자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과도한 참고자료의 간소화

○ 실·국장 중심 업무보고 외에 실무자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고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실무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75. 네이버 재직 당시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여원을 후원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관여할 위치(관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직책/직급은 누구인지)에 있지 않았다면, 문제 발생 후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및 사후 보고 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부

□ 당시 서비스총괄이사로 소관업무가 아니었습니다.

76. 중기부장관 시절, 과거 정책 중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현황, 계승 발전시킨 과거 정책은 무엇인지 (정책명, 정책시작 시기),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정책명, 정책시작 시기),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것은 무엇인지(정책명, 정책시작 시기)

□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라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3년 납품대금 연동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23.10.4일)

○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민감업종 목소리를 청취하고

*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해야" ('25.6.25, 중소기업중앙회)

○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였습니다.('25.12)

77. 중기부장관 시절, 폐업 소상공인들이 반복적으로 창업하는 회전문창업이 아닌 준비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 현황 (구체적인 근거 자료 및 해당 정책에 대한 자평)

□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을 위해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 AI기반의 경영진단, 교육, 밀착 멘토링 등을 통해 실패 원인 분석·개선을 지원하여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 재창업 지원기업 3년차 생존율 : 64.9% (일반 소상공인 45.9%)

○ 타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시스템도 확대하였습니다.

* 재기지원에 채무조정(신복위), 정책서민금융(서금원) 등을 연계하여 지원

□ 재창업보다 취업이 적합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교육, 국민취업지원 연계*, 심리회복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취업 마인드셋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노동부) 직업훈련 등 특화 취업지원 / (‘25) 2천명 → (‘26) 3천명

78. 후보자의 네이버 대표이사 퇴임 시기 및 사임서 제출 여부 및 제출시기 및 사임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조직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22.3.14. 사임하였습니다.

79. 이재명 대통령이 유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후보자는 여러 건물 등을 보유한 슈퍼리치라는 평가에 대한 입장, 후보자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비유한 마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

□ 자매들이 전부 미혼으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없었습니다.

□ 중기부장관 취임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잠실 아파트는 '26.5월 매도했으며, '26.6.12 역삼 오피스텔(잔금일 6.23.) 및 '26.6.16. 양평 주택(잔금 6.22. 입금 완료)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주택을 해소 중입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80. 중기부 장관시절, 다주택 논란에 대해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국무총리가 된다면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인지 여부, 국무총리가 된다면 수 년안에 매각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는지 여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 공직자가 된('25.7.)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처분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26.5.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매도했고, 나머지도 매각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처분될 예정입니다.

* 양평 주택: 6.16. 5억원에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 체결 / 역삼동 오피스텔: 6.12. 15억원에 매도 계약(잔금일 6.23.) 체결 등

81. 중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법 증축 건물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후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조차 돈으로 때우며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지속한 구체적인 사유 및 후보자가 밝힌 신속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기간), 구청의 시정 명령 횟수 및 이행강제금 납부 현황 등

□ ’25.12.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25.7.7.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25.9.9.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명령이 있었으며, ’25.12.16. 이행강제금 130,810원이 부과돼 납부한 바 있습니다.

□ 이유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82. 이재명정부가 환율 상승의 책임을 서학개미들에게 돌리며 국내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했을 때,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주식 현황(종목및규모) 및 국내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지 여부, 해외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사유, 해외 주식을 매각할 의지 등, 중기부장관 재직 후 해외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한 현황 등

□ 임명동의안(37p)에 기재된 애플 등 미국 주식 8종을 네이버 재직 당시부터 보유중이었습니다.

○ 국내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미국 주식 8종을 ’26. 6. 10. ~ 6. 17.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 중기부장관 재직시에는 별도 해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83.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으로 평가하며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하였는데, 여전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정책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해당 규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과거 투기성 우려 등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22년부터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이후 정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기조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핵심 딥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5년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였습니다.

○ 기술성·사업성을 갖추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춘 가상자산업 기업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4. 교권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5. 내신 5등급제가 학생들의 경쟁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정책 취지와 달리 자퇴·검정고시 증가 및 사교육 의존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내신 5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 추세에 맞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있는 만큼,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당국과 검토하겠습니다.

86.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수도권 학생 중심의 재편과 교육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책 중 하나로,

○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창업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말씀해주신 우려 사항을 잘 고려하여,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정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87.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육성과 함께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가?

□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AI 발전과 활용을 견인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중등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기본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을 통해 AI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AI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융합·실무형 인재 등 다층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8.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의 투명성 부족과 계약직 의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리 투명성 부족, 계약직 의사 활용 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6월에 발표한「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토대로 따라 국립대병원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국립대병원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89. 후보자는 국립대 병원에서 간호사 조기퇴직이 지속되며 숙련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PA제도 의존이 확대되는 상황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거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간호사 양성 체계 구축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 2005년 엠파스검색 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음란물 유포혐의로 벌금 1,000만원 및 몰수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한 약식명령서 사본 및 후보자의 해당 건에 대한 입장은?

□ '05년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로, 엠파스도 타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인터넷 포털 영화 서비스 리더들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당시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해당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처벌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능 범위가 정비되었고, 포털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1. 음란물 유포의 전과가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니라서' 공직자, 특히 총리직을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입장인지?

□ 임명권자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92. 후보자가 엠파스를 M&A한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기업 간 M&A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의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93. 후보자가 재직한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의 직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 업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검색, 쇼핑, 커뮤니티, 뉴스 모바일 등)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94. 후보자가 네이버의 성남 FC 후원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면, 개입·관여한 부서와 직책, 성명은 누구인가?

□ 저는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95. 후보자가 재직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에 대한 입장

□ 유족과 네이버 임직원들에게 이미 수 차례 사과하였고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96. 후보자가 재직한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 조직 내 과도한 성과주의와 리더십 문제 관련 후보자의 책임은 어떠한 부분 있다고 보는지?

□ 조직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도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 후보자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이후 조치한 제도적 조직적 개선 방안 시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유족과 네이버 임직원들에게 이미 수 차례 사과하였고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9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9.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당시 대표이사로서 유가족을 직접 만나본 적 있는지? 유가족과 국민께 충분한 책임있는 설명과 사과를 했는지? 추가 소명할 내용이 있는지?

□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바 있고, 이후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서도 수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100. 플랫폼 기업과 IT 업계에서 만연한 장시간 노동, 과도한 성과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직을 수행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은?

□ 과도한 장시간 노동 및 성과 압박,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신건강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제품이 우선적으로 노출하도록 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관련 구체적 사유와 처분 내역 관련 결정문 사본 및 관련 후보자의 소명은?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사 상품과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플랫폼 사업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준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3. 쿠팡이 쿠팡파트너스 제휴 링크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특정 상품으로 유인한 뒤,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다른상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납치광고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 제기에 대하여는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의 정확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104.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이나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를 의도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플랫폼 사업자가 추천의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 후보자는 향후 국무총리로 재직할 경우 공정거래·플랫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거 네이버 대표이사 경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 종로구 삼청동 35-184 시설 관련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 임대 수입 금액(변동금액도 기재), 지급 방식, 갱신 내역 관련 증빙 자료

□ 임대차 계약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붙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84(북촌로5나길103)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면적 :46.68㎡
4. 임대차구분
   월정임대료 일금 이십만원정(₩200,000/부가세포함)

제2조 **【임대차 기간】**

1.임대차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로한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까지 특별한 조건의 변동이나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월정 임대료】

보증금은 없이 을의 월정 임대료는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4조 **【기타관리비】**

임대료에 전기료, 관리유지비, 수도료 모두 포함된다.

제5조 **【임차인의 의무규정】**

"을 은 임차한 건물과 제반사항에 있어 일반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 내부구조변경 및 임차건물의 제품 야적은 물론 계약당시 제출한 설비목록 외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무효】**

1.을'은 임대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편법 사용케 할수없으며, 본계약상 내용권리 일체를 제삼자에 대하여 질권으로 행사 할 수 없다.

2. 임대료와 관리비를 2회연속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 고의로 본 임대점포를 훼손하였을 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 갑은 통고없이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화재, 도난, 기타사고등으로 갑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하였을시 손해에 대한 일체변상책임을 지며, 을은 필히 화재보험 가입 및 방화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제8조 을은 본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전에 갑에게 사전승락을 득한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시 을은 점포구조를 필히 원상복구 하여 갑에게 명도키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1. 1층 및 2층(한옥구조) 모두 을이 사용하는것으로 한다.

2.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정 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나은행 : 한성숙 768-910403 -)

위 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인 정정은 이를 불허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계약일자 : 2022년 3월 22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4동 305호

주민등록번호 : 670620 - 2

성 명 : 한 성 숙 연 락 처 : 010-

(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주민등록번호 : 741130 - 1

성 명 : 연 락 처 : 010

107. 후보자의 임대 사업 소득 관련 연도별, 임차인 별 대상 시설 및 보증금 및 월별 임대료 금액 및 실제 임대료 총 수입액은 얼마인가?

□ 남동생에게 삼청동 35-184 건물('22.3.~ 월세 20만원), 연건동 $268^{1\sim2층}$ · $269^{1\sim3층}$ 건물('20.11.~ 보증금3천만원· 월세 350만원), 여동생에게 삼청동 $35\text{-}185^{지하1\sim1층}$ 건물('26.4.~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

○ 제3자에게 연건동 269 건물 지하1층('20.10.~월세 55만원, 부가세 포함)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상 수령 중에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역삼동 루카831 오피스텔('26.4.1.~월세 150만원, 부가세 포함)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정상 수령 중에 있습니다.

□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임대수입 내역은 임명동의안(p.79~p.260)의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후보자가 남동생에게 임차료를 현금 수령으로 받았다면, 현금 수령을 뒷받침할 입증자료(장부 및 영수증 등)은?

□ 계좌이체로 입금받았습니다.

109. 후보자가 남동생으로부터 계약상 월세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월별 임대료 수령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영수증 발행 내역, 장부 등 증빙자료는?

□ 후보자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2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2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2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2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2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2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2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2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2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2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2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2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2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2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2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2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2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2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2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200,000

110. 후보자의 남동생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제3자 임차인과 달리 월세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히고, 장관직재임시에도 현금 수령을 유지한 이유는? 국무총리에 임명되어도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후보자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계좌로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111. 후보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종로구 연건동 건물 사이 연결 통로가 불법 증축임을 인지한 후 신속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현재까지 철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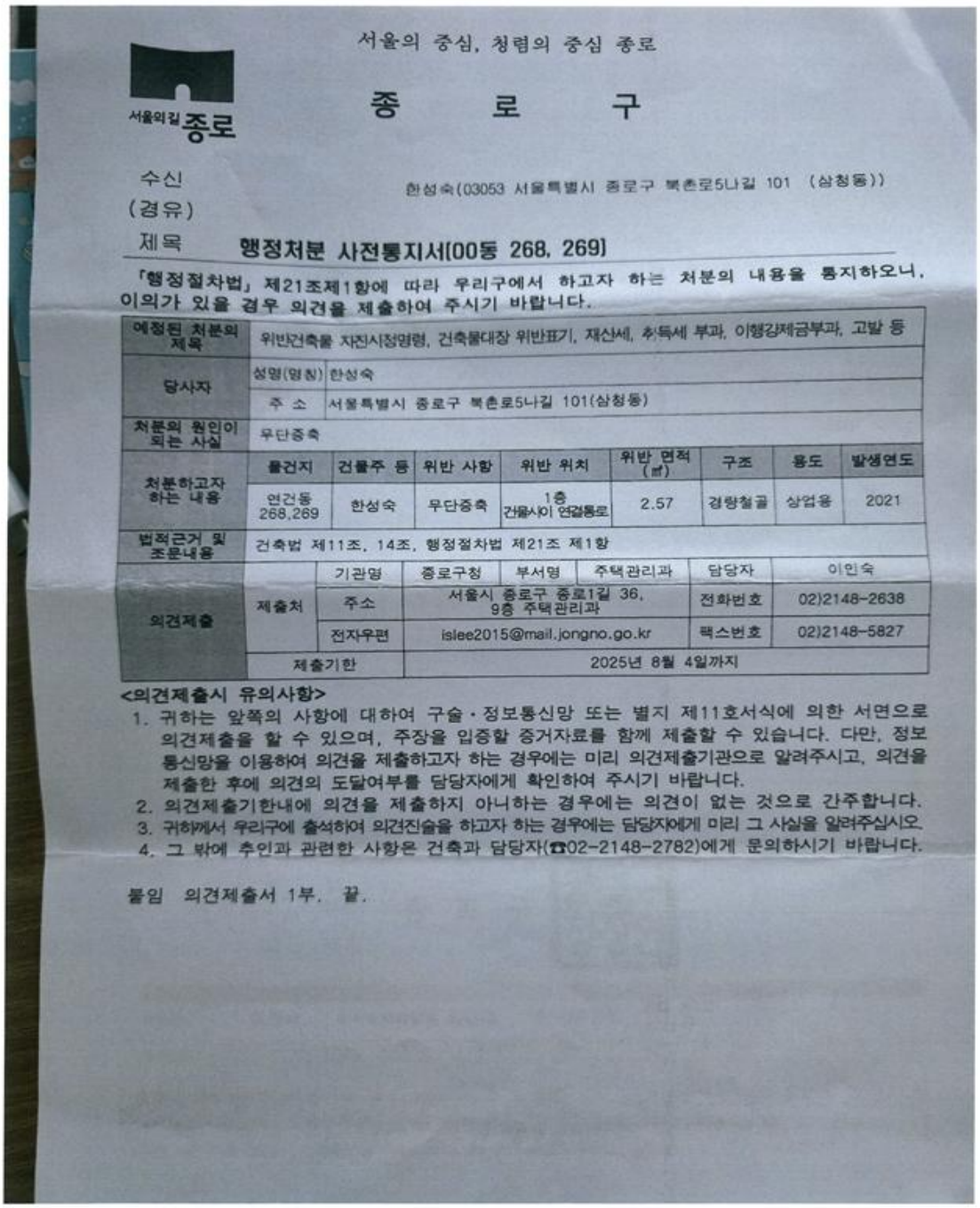
□ 2025년 12월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26.6.23일 완료 예정) 중입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12.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전통지, 1·2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문서

□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00동 268, 269)**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00동 268,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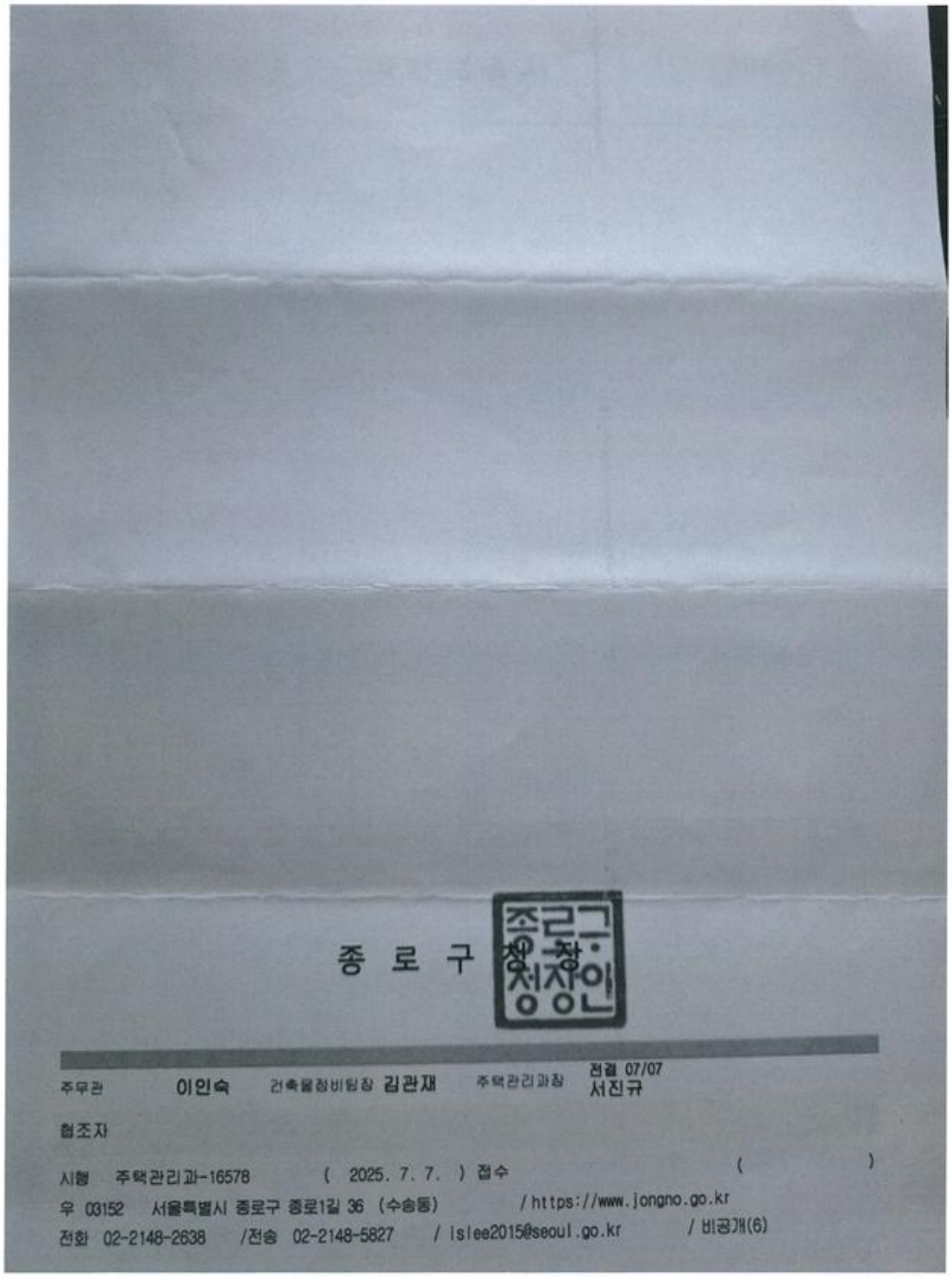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재산세, 취득세 부과,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당사자	성명(명칭)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증축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물건지	건물주 등	위반 사항	위반 위치	위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연건동 268,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건물사이 연결통로	2.57	경량철골	상업용	202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1조, 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구청	부서명	주택관리과	담당자	이인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2148-2638	
		전자우편	islee2015@mail.jongno.go.kr			팩스번호	02)2148-5827	
	제출기한		2025년 8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추인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 담당자(☎02-2148-27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종 로 구 종로구청장인

주무관 이인숙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전결 07/07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16578 (2025. 7. 7.)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8 /전송 02-2148-5827 / islee2015@seoul.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동 268, 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의 자진시정(철거, 추인 등)을 명하니, 2025. 10. 10.까지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우리구 주택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법건축물 내역

물건지	건축주 등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도	발생년도	비고
연건동 268,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건물사이 연결통로	2.57	경량철골	상업용	2021	건축법 위반

3.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고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시 위반면적이 포함되며 시정기간 내 철거하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위 기한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필요시 공익을 위하여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나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을 철거하게 한 후 귀하로부터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기고 공사 계속시 건축법 제108조, 제111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정기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진술하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종 로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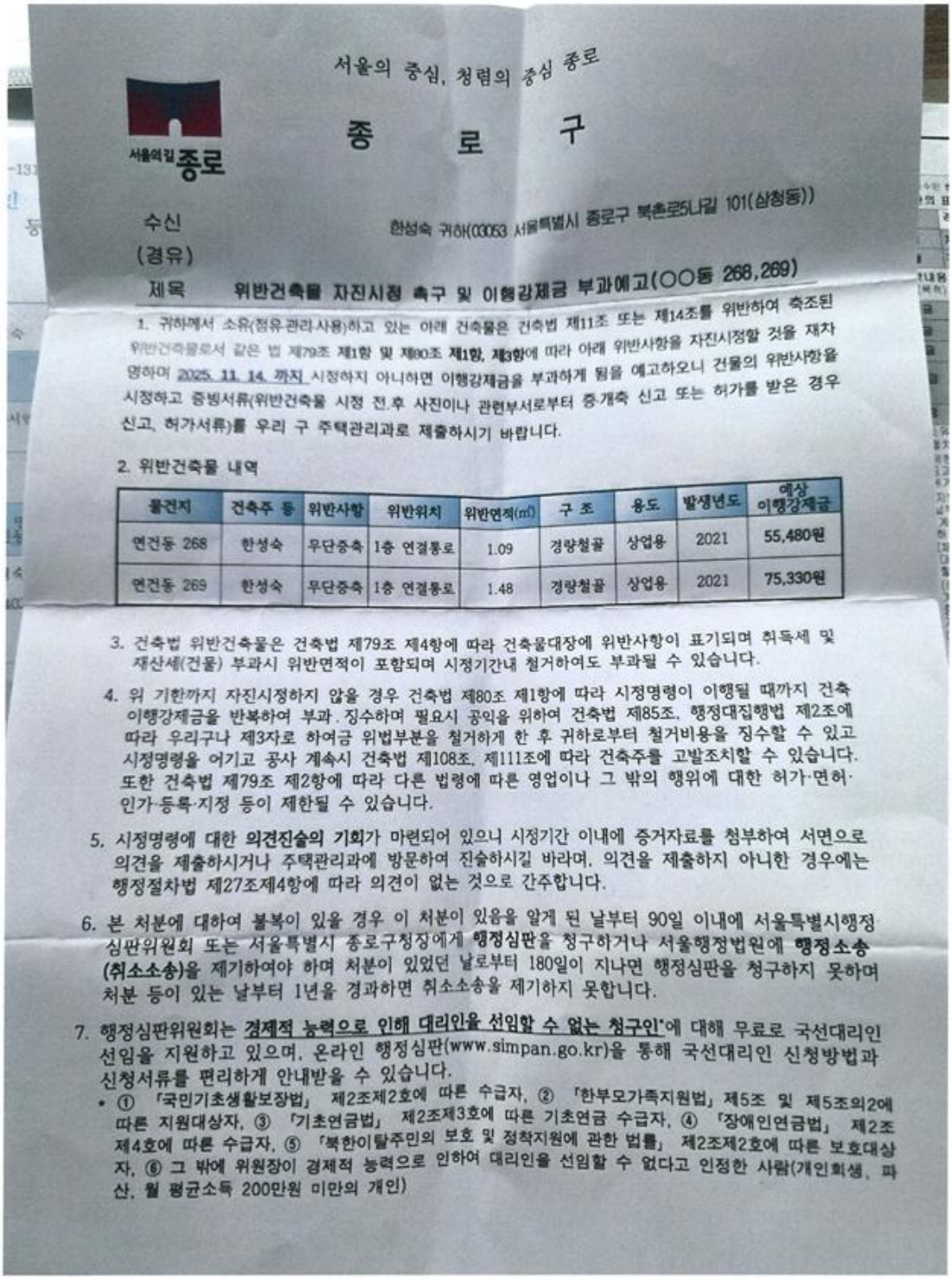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09/09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23255 (2025. 9. 9.)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 귀하(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동 268,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며 2025. 11. 14. 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예고하오니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위반건축물 시정 전·후 사진이나 관련부서로부터 증·개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허가서류)를 우리 구 주택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 내역

물건지	건축주 등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도	발생년도	예상 이행강제금
연건동 268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09	경량철골	상업용	2021	55,480원
연건동 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48	경량철골	상업용	2021	75,3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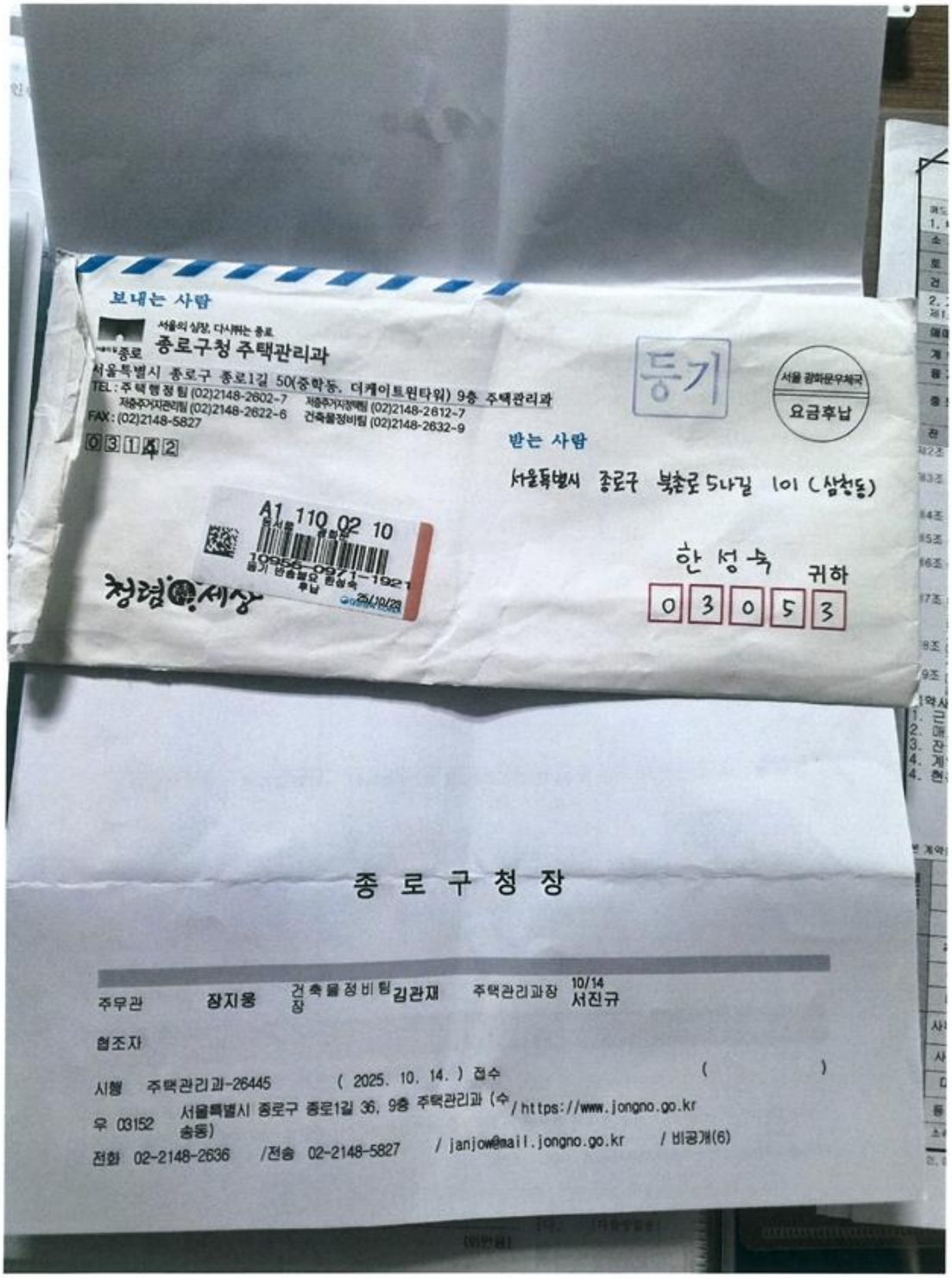
3.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시 위반면적이 포함되며 시정기간내 철거하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위 기한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필요시 공익을 위하여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나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을 철거하게 한 후 귀하로부터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기고 공사 계속시 건축법 제108조, 제111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정기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진술하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보내는 사람
서울의 심장, 다시뛰는 종로
종로구청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주학동, 더케이트윈타워) 9층 주택관리과
TEL : 주택행정팀 (02)2148-2602~7
저층주거지관리팀 (02)2148-2622~6
저층주거지정책팀 (02)2148-2612~7
건축물정비팀 (02)2148-2632~9
FAX : (02)2148-5827
03142
등기
서울 광화문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청렴세상
종로구청장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10/14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26445 (2025. 10. 14.)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 귀하(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동 268,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이행강제금은 아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내용

물건지	건물주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 도	발 생 연 도	예상 이행강제금(원)
연건동268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09	경량철골	상업용	2021	55,480원
연건동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48	경량철골	상업용	2021	75,330원

나. 납부기한 : 2025. 12. 31.까지

다. 납부방법 : 은행납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전용계좌납부(고지서 상단 좌측)
전자납부(etax.seoul.go.kr), ARS납부(1599-3900)

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연건동268)

① 1㎡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② 시가표준액 가산률/감산률	×	③ 위반 면적(㎡)	×	④ 법정 요율	×	⑤ 소규모 주택감경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⑦ 가중/감경 사유	=	⑧ 이행강제금
509,000		1		1.09		0.5		해당없음		0.8		0.25 (0.75 감경)		55,480원

① 2025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②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가산/감산사유

③ 위반건축물 위반면적

④ 건축법 제80조제1항

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1항

⑥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⑦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가중사유), 제115조의4(감경사유)

※ 감경기간 3년 도과 후(2028.9.9.) 감경 제외

⑧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연건동269)

① 1㎡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② 시가표준액 가산률/감산률	×	③ 위반 면적(㎡)	×	④ 법정 요율	×	⑤ 소규모 주택감경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⑦ 가중/감경 사유	=	⑧ 이행강제금
509,000		1		1.48		0.5		해당없음		0.8		0.25 (0.75 감경)		75,330원

① 2025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②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가산/감산사유

③ 위반건축물 위반면적

④ 건축법 제80조제1항

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1항

⑥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⑦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가중사유), 제115조의4(감경사유)

※ 감경기간 3년 도과 후(2028.9.9.) 감경 제외

⑧ 이행강제금

붙임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 각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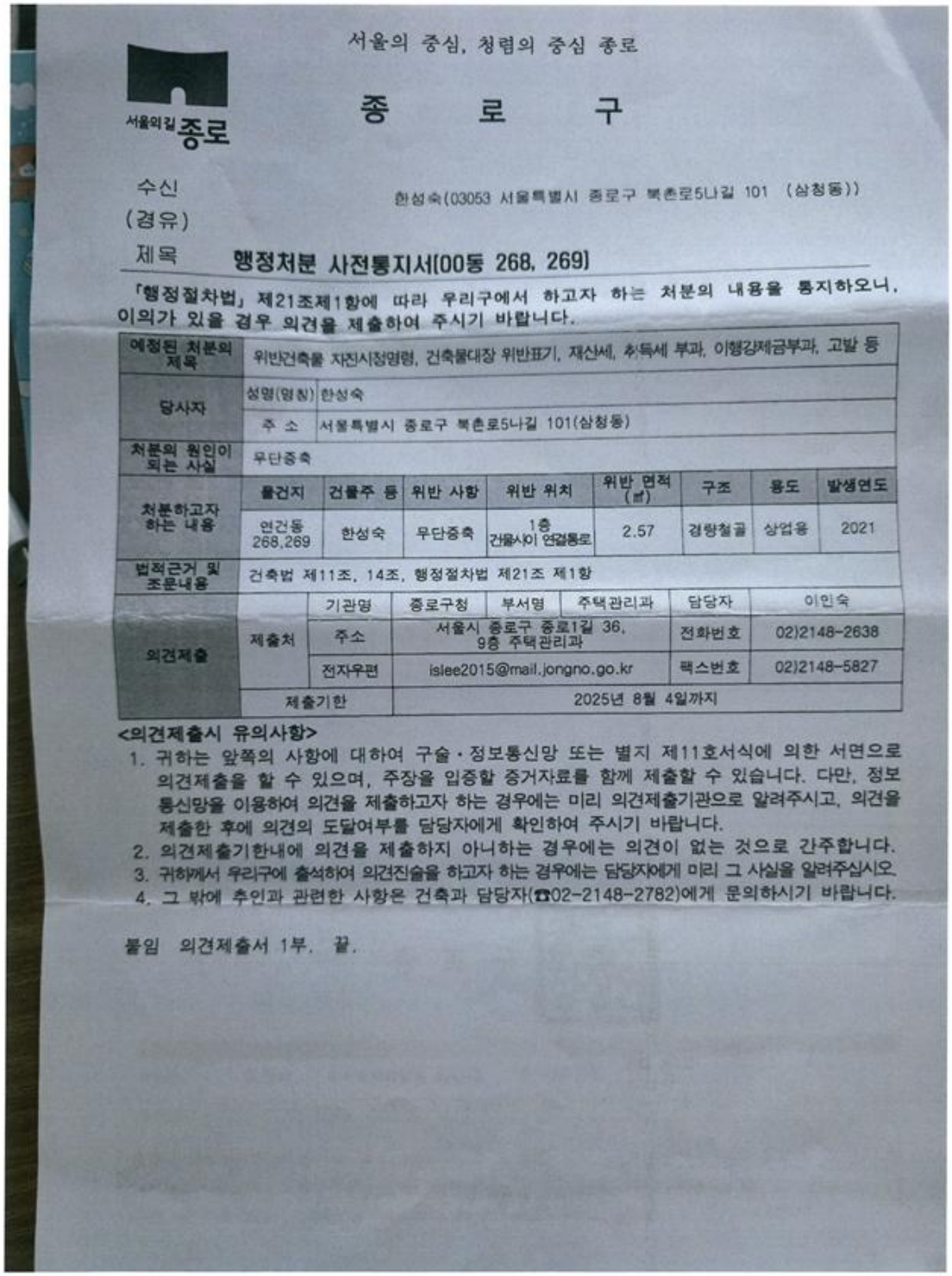
종 로 구 청 장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代이동석	주택관리과장	12/16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33741 (2025. 12. 16.) 접수 ( )

우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1층 주택관리과 (중학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00동 268, 269)**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재산세, 취득세 부과,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당사자	성명(명칭)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증축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물건지	건물주 등	위반 사항	위반 위치	위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연건동 268,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건물사이 연결통로	2.57	경량철골	상업용	202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1조, 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구청	부서명	주택관리과	담당자	이인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2148-2638	
		전자우편	islee2015@mail.jongno.go.kr			팩스번호	02)2148-5827	
	제출기한		2025년 8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추인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 담당자(☎02-2148-27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113. 현재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 내역(총액)과 향후 철거계획 및 일정, 관련 공사 계약 현황

□ 이행강제금 납부 내역은 별첨1, 철거 관련 공사 계약은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12일 종로구청에 건축물 철거 신청이 접수되어 2026년 6월 23일(화)에 완료 예정입니다.

붙임 1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바르게 걷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종로구 JONGNO-GU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세외수입 고지서

※ 고지금액을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 적발내용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 1.09 / 경량철골 / 상업용 / 2021
- 위반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비고 :2025년 신규
- 부과면적 :1.09

발급일자 : 2025.12.18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수납부서 : 주택관리과
담 당 자 : 장지웅 02-2148-2636

종로구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110-2-20-25-614771143

납부번호 기관번호 1100192 세목 50288301 납부년월기 2025122 분류번호 0029300

납 부 자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03053]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8 (이화동)

물 건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6-1 (연건동)

[부과일자: 2025년 12월 16일]

	납부금액
금 액	55,480
구 세	0
합 계 액	55,480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2 월8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5.12.31
OO은행장

납부기한 2025.12.31 까지 55,480 원

까지 원 (상시수납가능)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바르게 걷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종로구 JONGNO-GU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세외수입 고지서

※ 고지금액을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 적발내용 :무단증축 / 1층 연결통로 / 1.48 / 경량철골 / 상업용 / 2021
- 위반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비고 :2025년 신규
- 부과면적 :1.48

발급일자 : 2025.12.18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수납부서 : 주택관리과
담 당 자 : 장지웅 02-2148-2636

종로구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110-2-20-25-614772035

납부번호 기관번호 1100192 세목 50288301 납부년월기 2025122 분류번호 00293 7

납 부 자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03053]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 (이화동)

물 건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6-1 (연건동)

[부과일자: 2025년 12월 16일]

	납부금액
금 액	75,330
구 세	0
합 계 액	75,330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12 월18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5.12.31
OO은행장

납부기한 2025.12.31 까지 75,330 원

까지 원 (상시수납가능)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붙임 2 **연건동 두 채 보수 업무 계약서(연건동 268, 269번지)**

연건동 두 채 보수 업무 계약서

[연건동 268, 269번지]

주 | 건축사사무소

sign Innovation Architecture with Nature

연건동 두 채 보수 업무계약서

1. 용 역 명 : 연건동 268, 269번지 보수 및 대관 업무

2.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8, 269번지

3. 계약금액 : 일금 일천이백만원정 (₩ 12,000,000) *부가세 별도

4. 용역기간 : 2025년 12월 ~ 준공 시

5. 용역비지급조건
   - 계약 시 30%
   - 철거 시 및 자재 발주 시 40%
   - 완료 시 30%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 140-010-　　/ 예금주 : ㈜　건축사사무소

발주자인 한성숙 님 (갑)과 수급자인 ㈜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주의 승인하에 두 동간의 연결통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보수공사 및, 업무협의, 법적 검토, 대관 모든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년 12 월 20 일

(발주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8, 269번지
건 축 주 : 한　성　숙 (인)

(수급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회 사 명 : ㈜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발주자 한성숙 님(이하"갑"이라한다.) 과 수급자 ㈜ 건축사사무소(이하 "을"이라한다.)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연건동 268, 269번지 기존 시설 중 위법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 진행하기 위함이다.

제3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
2. "을"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인허가 추진지연 및 준공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을 재조정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해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갑"이 용역비 지불을 지연하여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지시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고, 중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용역이 재개되지 않을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용역을 수행 할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6. "을"이 파이낸스사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약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
7. 제3자가 "갑" 또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갑" 또는 "을"이 부도, 부도유예 협약적용, 파산신청, 합병, 해산,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8.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
9.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4조 1항에서 제7항 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하자보수)

각 자재 업체별 별도의 하자보수 용역기간을 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료의 제공 의무)

"갑"은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1.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여 중재 규칙에 의한다.
2. "을"은 설계사 또는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0조(법력의 준수)

"갑"과 "을"은 사업관리를 이행하는데 있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용역의 범위

■ 용역의 역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협조, 자문과 지급자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

■ 용역의 범위

1. 두 동 간의 연결 유리구조물 철거
2. 철거 후 도어 설치 및 보안을 위한 담장 검토
3. 대관업무
4. 기타 관련 업무 일체

※ 특약

- 공사개시 시점은 2026년 3월 5일 이후로 한다.
- 공사 계약 후 도면 및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여 견적을 산출하고 이에따라 최종 승인, 금액 확정 후 공사하기로 한다.
  다만, 동절기를 감안하여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철거는 3월 5일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다.

114. 총리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해당 불법 증축물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위법 상태를 지속한것이 적절했다고 판단 하는지?

□ 2025년 12월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6월 23일 완료 예정입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15. 공직 후보자로서 스스로 약속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국민께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지?

□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문제는 ’25. 12월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계약 체결 후 현재 공사 중(6. 23. 완료 예정)입니다.

□ 이유 불문하고 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16.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되었던 불법 증축 및 가족 간 금전 거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장관 취임 이후 해당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정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문제는 '25. 12월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계약 체결 후 현재 공사 중입니다.

□ 남동생에게 2억 4,500만원을 대여한 부분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남동생이 납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법 증축 시정 여부, 남동생에 대한 추가 대여금, 임대 소득현황 등에 대해 검증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 반복적으로 제기된 가족 간 금전거래 및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 가족 간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납부 및 이자 지급 중이고, 불법 건축물은 ’25.12.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6월 23일 완료 예정입니다.

□ 다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19.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인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직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항상 공정과 균형을 염두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20. 후보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제출

□ 후보자의 가족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자료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로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후보자의 양평군 소재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계획서 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사본 및 영농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취득목적, 실제 경작에 참여한 기간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하였습니다.

○ 농업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서, 자료가 수신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 한 이후 실제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 인력, 농기계 확보, 농업 경영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영농일지, 농자재 구입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산물 판매 내역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해당 농지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26.3.31.)했으며, 현재 매도 계약(6.16.)을 체결(잔금 6.22. 입금 완료)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3. 후보자는 「농지법」 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소명해 주시기 바람.

□ 양평군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124.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 내용과 실제 영농 실태가 다를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 지난 중기부장관 청문회 시 '09년~'10년에 걸쳐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양평군 도곡리 '75-2' 단독주택과 인근 필지 관련, 농지법 위반 지적이 있었으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은 없었으며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26.3.31.)한 바 있으며, 6.16.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 진행 중(잔금 6.22. 입금 완료)입니다.

125. 후보자는 도시 거주자나 비농업인이 형식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관행이 농지 투기와 경자유전 원칙 훼손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이나 도시거주자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소유에 한하여 허용

○ 농지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가 영농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위원회를 신설('22.5.18)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 후보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농지취득 관련 위탁경영이나 매각 등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이행은?

□ 해당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26.3.31.)했으며, 현재 매도계약(6.16.)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잔금 6.22. 입금완료)입니다.

127.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농지법의 엄정한 집행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 올해 6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ㅇ 정부는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적발 시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처분의무 생략)하고, ②처분명령을 법률이 정한 기속행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앞으로 농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정상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8. 이재명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후보자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본인의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농지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양주시 농지는 부친께서 소유했던 농지 등(광사동 431-2 등)을 '23.5. 형제들과 협의 분할하여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했지만, 상속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양평군(도곡리 75-2 등) 농지는 주말농장 등을 위해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는데, '25.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을 체결하였습니다.

129. 후보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이나 원상 회복 등 법률상 조치 외에 국무총리 후보자 또는 국무총리로서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부친께서 소유했던 농지 등(양주시 광사동 431-2 등)을 '23.5. 형제들과 협의 분할하여 상속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했으며

○ 주말농장 등을 위해 매입한 양평군 농지(도곡리 75-2 등)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0.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정부의 전수조사와 별도로 자발적인 실태 점검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 후보자는 저성장·고물가·국가 채무 증가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운영 철학과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역동적 혁신과 함께 포용 성장을 통해 이 위기를 대응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I 대전환,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성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 성장의 혜택이 서민·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 재정 건전성과 경기 활성화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부 재정 정책 운용의 원칙은?

□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재정 - 경제의 선순환’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33. 미국의 관세정책,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은?

□ 정부는 주요국과 통상·외교 채널을 밀착 가동하면서 타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34. 후보자가 강조하는 AI 산업 육성 관련, 특정 플랫폼 기업이나 대형 IT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중소기업·제조업·소상공인과의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AI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전환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스타트업에도 AI핵심자원(GPU 등)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 또한, 대기업의 제조혁신 기술·설비·AI·로봇·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 수출·수주금융 지원 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를 우대하는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135.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 어떠한 측면 을 더 중시하여 판단하는지?

□ 데이터 역량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AI 산업 육성의 핵심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 각 부처별 공공데이터, 산업·의료 등 민간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같은 규제 등 부처별 정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 다만, 고품질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국가안보 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산업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중소기업 데이터 주권 보호와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산업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 연합학습 및 공동 AI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여 특정 기업에게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제조AI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제조A I24 플랫폼) 제조데이터와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역량을 집적시킨 중소 제조AX 거점 플랫폼 구축('26년 ISP 수립, '27년 이후 구축·운영)

○ 또한,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를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7.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 북핵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기본인식과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한미동맹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과학기술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중국) 최근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복원된 흐름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꾸준히 이어나가며,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일본) 최근 한일 정상 간 빈번한 셔틀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핵)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로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동결-감축-폐기 순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보완하여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외교활동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시행할 조치 계획

□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도 한중 정상회담('26.1.5)에서 서해와 관련한 소통이 있었고,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여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北 구성 핵시설 발언 관련한 미동맹 우려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관련 발언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은 여러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 2026 통일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2)국가로 존재하는현실”이라고 적시된 것과 관련한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1. 병력 자원 감소 관련 대책 방안

□ 국방부가 병-간부간의 구성비율 조정,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과 함께 인공지능·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접경지역 등 중첩규제·과잉규제에 묶인 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 및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국토 균형성장의 틀 내에서 수도권 내 균형성장을 위한 개선·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3. 후보자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국가균형발전 전략

□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일자리·교육·정주기반이 함께 약화되는 구조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도 기존의 격차 완화와 지원 위주 정책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기업투자,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을 권역별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144.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수도권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의 규정이 검토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속히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전국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반도체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45.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 없음"과 "국민 눈높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할 것인지?

□ 공직자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법적 기준’과 ‘국민 눈높이’는 모두 중대한 가치입니다.

□ 공직자에게는 단순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146.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및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는 위헌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 이번 특검법 발의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7.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된다면, 입법취지와 별개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국무총리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 국무총리에 취임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헌법 수호'와 '국익'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148. 후보자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수호가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대통령 및 여당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헌법상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9.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연임제 개헌 관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개헌되더라도 헌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총리 후보자로서 개헌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 123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이며,

○ 해당 과제의 내용에는 대통령의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여야 논의 등을 통해 국회 중심으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총리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서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AI 시대에도 필요할 좋은 일자리를 지역과 청년에게 제공하며,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AI가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AI 시대에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경험을 쌓도록 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고용활성화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도 세심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51.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문제점 및 재개정 방향

□ ‘노사 대화 촉진’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노사 간의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고,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보완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52.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153. AI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직업교육·평생교육 체계 개편 방안

□ AI 시대를 맞아 AI 강국 도약을 견인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직업교육·평생교육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대학·대학원을 통해 △AI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융합·실무형 인재 등 다층적 인재가 조기에 양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직업교육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AI 실무 인재를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인학습자 등 국민 누구나 본인이 필요한 수준의 AI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온·오프라인 AI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154.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계부처·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공 교육·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아울러,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창업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155.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 방향

□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사회적 논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을 통해 노인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 사시는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돌봄과 간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156.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27)·공공의전원('30) 도입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 적정 수가 보상, 의료 안전망 강화,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강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157. 탈모는 생존 문제인지,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경우 희귀·중증 질환자에게 돌아갈 재정을 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희귀·중증 질환 지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8.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지역 의료 붕괴 해소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공보의 배치 효율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의사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민들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 방안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해외 공급망 안정화, 정부·민간 비축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식량안보의 정의 마련, 식량안보 지표 신설, 범정부 식량안보 대응체계 구축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책으로는 쌀 등 주요 작물의 적정 생산과 타작물 재배 지원, 공익직불제 운영 및 다양한 친환경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간계획이 연계된 농촌정책, 그리고 AI기술과 접목된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 대통령실과 각 부처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원칙으로 국정을 조정할 계획인지 후보자의 입장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자의 시각차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61.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존치·개편·기능 조정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여성가족부는 2025년 10월 1일에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및 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62.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

□ 정부는 출산·육아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면,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3.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수사, 피해자 지원, 국제공조 강화 등 범부처 통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인 등 친밀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25.9월)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 AI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 플랫폼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정보를 탐지하는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 제도적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러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5. 최근 교권 침해와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시해 주기 바람.

□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존중되어야 할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도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지원체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166.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는지, 국무총리로서 어떠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한 해 1만 4천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 다만,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25.10월부터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자살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다양한 자살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67.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청년 취업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하에 임금·근로조건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앞으로도 중기부장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챙겨보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이 '네이버의 뇌물 공여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저를 지명하신 이유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9. 최근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특정 기업 출신 인사들에 대한 편중인사와 이해충돌 우려, 국정운영의 다양성 및 균형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 정부의 인사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 최근 정부(행안부)의 스타벅스 불매 선언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중기부 장관 시절 후보자도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가담 및 동조하였는지 여부

□ 행안부가 설문조사,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지 않는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71. 후보자는 지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시절 '소비쿠폰이 전 국민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골목 상권 점포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여부 및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일체

□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25.7~11)은 전 국민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26.5.7)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액 13조 5천억원의 43.3%인 5조 9천억원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으며,

○ 매출 증대 효과의 약 50%가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72.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시절, 주말과 퇴근 후 밤 시간에도 카톡으로 직원들에게 업무(사적업무 등) 지시한다는 제보가 있는 바,주말과 퇴근 후 밤시간 대(10시이후)에도 카톡으로 직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제보가 사실일 경우, 관련 행위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

□ 긴급한 현안에 한하여 실·국장급 간부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다소 가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직원들 고충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73. 후보자는 중기부 후보자 당시 '모친의 농지 무허가 불법 건축' 의혹 관련하여, 해당 문제 해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건축물 철거소송을 진행하는 등 불법적인 상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변호사 선임 일, 선임 비용, 현재 진행 상황 등 일체

□ 해당 건물 소재 토지는 부친과 윤병준(1937년생)이 공동 소유하여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윤병준을 찾아야 해서 2024년 9월 경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 윤병준을 찾은 후 현재는 불법건축물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유)클라스 한결

174. 후보자는 지난 중기부 후보자 시절, '평소 독서와 그림 그리기가 취미'라고 밝힌 바, 가장 감명 깊에 읽었던 도서와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 이유

□ 최근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와 박소영 작가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다시 나아갈 위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17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용인 반도체 첨단특화단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업 투자계획, 인력 및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미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업이 필요시 지역으로 언제든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1.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 총리의 역할은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를 지속 성장시키고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거정권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입니다.

○ 이는 국민 누구나 주권자로서 행복할 권리를 당연히 갖고 함께 도약한다는 것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부처가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형태와 그 이유는?

□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국무총리로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방안은?

□ 불법 정치자금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그런 만큼 불법 자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 풍토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 만큼 국회에서 개정·보완 등의 논의가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5.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3가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중동전쟁 이후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국무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5가지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로 비롯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 내부 혁신 등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이재명 정권의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 및 검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리로 임명된다면 대통령과 다양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8. 제청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청을 철회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유능한 분들로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다양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9.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어떤 점을 계승할 것인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지난 정부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일관성이 필요한 정책은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 중앙-지방간 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총리가 된다면,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이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11. 대통령과의 의견이 다른 사안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국무총리가 된다면, 민심을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도록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할 단기·중기 정책은?

□ 단기적으로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야당과의 국회 협치 강화 방안은?

□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4.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 있는지?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확대와 투기적 수요 관리 양 측면의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5.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 26년도 全 금융권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 보다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

○ 투기적 대출수요는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이 있는지?

□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과 채무 상황에 따라 크게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최대 90%) 또는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최대 20년) 등
(신복위) 연체 단계별로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원금 일부 감면 등
(법원) 소득有개인회생, 변제능력無개인파산·면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패키지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완화 중이며,

○ 상환능력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새도약·새출발기금 등 제도 개편·강화를 통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 장기채권 채무조정 규모 확대(연 1천억원 → 3천억원) 및 채권소각 신규추진 등을 통해 누적된 채무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7.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층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계획(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26년) 공공분양주택 2.4만호, 공공임대주택 4.3만호 등

□ 또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많은 청년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2년간 매월 20만원 지급
** '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54만원으로 지나치게 협소
→ 기준 중위소득 80%(205만원), 100%(256만원) 등으로 완화 검토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결혼 친화적 주거지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現)청년 1인가구의 약 1.5~1.6배 수준 → (改)2배 수준으로 완화
** (現)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대상 → (改)미성년 자녀까지 확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 주거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창출 방안은?

□ 최근 청년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청년(15~29세) 고용률 : ('26.5) 43.8% (2년째 하락중)
20·30대 '쉬었음' 청년 : ('26.5) 64.9만명 (20대 36.8만명, 30대 28.1만명)

□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AI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며,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당장 청년이 겪는 구직과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일경험 등 지원 : ▲K-뉴딜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3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1만명) 등

○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혁신, 규제 합리화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구상이 있는가?

□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등 정부 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는 한편,

○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구체적인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정책은?

□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외투 옴부즈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첨단산업, 공급망 등 유망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 투자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은?

□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고령층은 물론,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희망하는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기술 변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가정 양립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2.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변화 구상은?

□ 지역산업 고도화는 균형성장의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중심의 특화성장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지역 주력산업 R&D, 지역인재 양성, 인프라, 금융·창업 지원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산업 고도화가 실질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23.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개선 계획은?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기존 수·위탁거래 중심의 상생협력 제도를 플랫폼·금융·방산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상생협력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 및 실태조사, 상생협의체 등 상생법 개정

○ 금융회사와 방산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과의 상생 수준을 산정·공표하여 상생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과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現) 수·위탁기업 → (改)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 적용

** (現) 출연기업이 협력사에 지원 → (改) 기금 일부를 공모 방식 지원

□ 또한, 기술탈취 근절 및 납품대금 제도 개선 등 신뢰 기반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계획은?

□ 현재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25.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저 전원인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기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6. 최근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음을 시사 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이유는?

□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학적·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원전 비중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가 균형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 탄소중립 추진 계획과 기존 산업의 보호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 우리나라는 202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 2030년까지 전력·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3.4)
- 전체 : '18년 732.9 → '30년 436.6백만톤(40.0% 감축)
- 산업 : '18년 260.8 → '30년 230.7백만톤(11.5%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와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감축 설비투자 비용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금융세제·제도 등 통합지원 방안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발표 예정(7월말, 잠정)

□ 총리로 임명된다면,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성장과 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28. 우리나라의 과학 및 정보통신 분야별 기술개혁 과제로 대표적인 세가지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AI가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현실에서, ①AI를 활용한 과학기술 난제해결, ②AI 기술경쟁력 향상, ③전산업 AX 추진이 대표적인 기술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며,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9.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7천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며,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되었음. 하지만 반도체, 선박 등 특정품목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 등 기존 품목은 고전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무역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방산, 조선, 바이오, 소비재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무역금융, 수출 마케팅, 인증·물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 국가 재정 건전화 및 부채 관리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재정 - 경제의 선순환’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1. 공공기관 개혁 추진시 우선순위 기관은 어디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 현재 소관 부처(재경부)에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2. 공공기관 부채 관리 필요성과 이유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채규모(조원) : ('21)584.4 ('22)671.0 ('23)709.7 ('24)741.5 ('25)768.6

□ 현재 재경부에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33.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혁신도시 조성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 여건 등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4.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문제점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재착수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 총리로 임명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및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이유는?

□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과 방식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특정 기관 포함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6.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 구상은?

□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양극화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5극 3특 육성에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재정, 세제, 규제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식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살피고,

○ 지방으로 이전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 저출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범부처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26.6.9. 공포, '26.9.10. 시행)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인구전략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출산·양육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3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 정주여건 악화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 제조업 기반의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지식서비스·첨단산업·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청년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교육·의료 등 경제·산업적 기반과 기본적인 삶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기업투자 촉진,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 이재명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방안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지?

□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는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물량·속도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민간의 분양주택 공급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40.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등 세금 감면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기본적으로 실거주한 1주택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및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및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장· 단점과 개선방안은?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자산시장 성장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수요 관리 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 이와 병행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방안, 1.29 도심주택 공급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 국무위원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결정에 다주택자 배제원칙에 후보자는 찬성하는지? 이유는?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께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투기성 다주택의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 하에,

○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부동산 정책 결정에 다주택자 배제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43.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로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스스로 빠질 예정인지?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 '06.10.25. 취득 후 약 20년 간 거주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6.5월 매도 완료 했으며

○ '22.4월 분양받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은 '26.6.12. 매도계약(잔금일 6.23.)했고

○ '09년 경 가족별장 및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양평군 주택은 '26.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완료)하였습니다.

44.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할 총리가 본인의 부동산 보유 문제로 정책 결정에서 '셀프 배제' 된다면, 이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 조만간 삼청동 주택(1주택) 외 주택들은 처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45. 후보자는 현재 보유 중인 양평, 강남, 종로구 소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6.5월 매도 완료 했으며, 역삼동 오피스텔은 '26.6.12. 매도 계약(잔금일 6.23.) 했습니다.

○ 양평군 주택은 '26.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46. 수도권 대비 지방의 주택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단기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공공매입 등을 통해 수요를 보완하는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산업·교육·인프라·행정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적되면서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첨단산업·지식서비스·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문화·의료·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어야 인구 집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기업투자와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기업투자 촉진,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은?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지방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은?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거주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전원 도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재정 계획은?

□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지난 3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 해당법을 근거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27.1.1., 年세입 1.1조원)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1.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여 즉각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인력·시설 등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은?

□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국무총리가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3.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건보적용을 시사했으며, 최근 정은경 복지부장관 역시 건보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도 찬성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4.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거나 결정을 수년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은 건보 재정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매표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 헌법(제84조)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각급 법원에서 헌법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 이재명 정권 및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의견이 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 후보자는 '공소취소특검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이번 특검법 발의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8. 국회에서 여당이 '공소취소특검법안'을 강행 처리 시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드리고,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 국회에서 법안 심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9. 육아휴직 제도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 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도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육아휴직 제도 홍보와 확대 방안 등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0. 현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사업의 구체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출산·육아 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면,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그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고, 업무공백으로 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려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부부가 함께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 홍보와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62. 초등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 초등돌봄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희망하는 학생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63. 한부모·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정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지속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 다문화 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64. 후보자의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 후보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6. 최근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7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 후보자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매우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결-감축-폐기'라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은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로서, 매우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67.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 및 외교 전략에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핵 문제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북미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또한 중국 등 주변 국가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 유엔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 북한의 사이버 위협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강화 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사이버테러, 해외민감정보 절취, 가상자산 탈취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내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한편, 민간·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69. 후보자는 미·중·일과의 외교 단기 목표 및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한미동맹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과학기술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서 핵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JFS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 최근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가며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최근 한일 정상 간 빈번한 셔틀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미·중 간 전략경쟁 하에서 현 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굳건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과는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우리 외교영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1.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및 경제협력 간의 균형적 접근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파트너입니다.

○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 부분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사 문제의 경우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착수에서 보듯이 인도주의적 사안을 시작으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민간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 경제·사회 협력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산업 공급망, 첨단 기술, 인적·문화 교류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구체적 이유는?

□ ‘노사 대화 촉진’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노사 간의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고,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보완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3.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산업계에서 안전 관리 위축과 투자 지연,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

□ ‘노사 대화 촉진’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노사 간의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고,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보완점이 필요한지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4. 국내 일부 노동조합의 과격한 노동운동과 불법행위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격, 불법 행위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노사 자치' 원칙 하에 대화와 상생을 통한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75. 최근 레미콘운송노조의 운송비 문제를 두고 협상이 다시 잠정 타결됐지만 건설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또 타워크레인노조도 앞서 파업을 단행해 반도체 공장 건설이 중단되는 등 일부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노사 자치' 원칙하에서 대화와 상생을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노사가 대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6.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계가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설명회 개최(4.8) 등

□ 현재 정부는 인사, 노무 등과 관련한 경영 애로 상담, 현장자문, 지원사업 연계 뿐만 아니라

○ 하청업체 교섭 등 노무와 관련된 경영애로 발생 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해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률·규제·노무 등 12개 분야에 대해 변호사·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제공

77. 최근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으로 역점을 두었던 ‘모두의창업’에서 1기 합격자 5천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는지?

□ 정부를 믿고 도전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8. ‘모두의창업’ 합격자 5천명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 이유와 경위가 어떻게 되며, 후보자는 언제쯤 해당 문제를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이와 관련해 후보자가 지시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6월 15일 오전 9시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 당일 오후 3시경,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게시된 이용자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오후 4시경 해당 허가되지 않는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6월 16일 오전 11시경 비공개 이메일로 AI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수신했다는 플랫폼 이용자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확인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메일 주소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되었습니다.

□ 동 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시행, 전반적인 시스템 보안점검 실시 등을 지시했습니다.

79. 국무총리가 된다면 대통령 보좌와 행정각부 통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지?

□ 총리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하고 제언할 수 있는 국무총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8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자랑할만한 성과는?

1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6.3만여명을 기록했습니다.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최대이며,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동행축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은 '25년 1,200억 달러, '26년 1분기 298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K-뷰티 수출은 21.8억 달러로 '26.1분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동행축제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50% 감축 등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여,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 건을 발송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1.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랑할만한 성과는?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과거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표 재직시 커머스 사업 성장과 네이버웹툰 등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생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고,

○ 네이버 클로바 등 AI 관련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이 있습니다.

82.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자랑할만한 성과는?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과거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1997년 엠파스의 창립 멤버로 회사에 합류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장의 형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83.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부동산 거래(매매 및전·월세 모두)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각종 세금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 후보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등 가계 소득 확충을 통해 소비 증가 등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분배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경제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 경제의 자율적인 활력과 창의성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 계층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5.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함께 예방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상호 존중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86. 후보자가 기업체(네이버) 등에 근무하며 본인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보고)이 있다면, 그 당시 후보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당시 이와 같은 사건을 목격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87. 후보자는 노동약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노동약자 지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취약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 후보자의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인 2021년 5월 네이버 지도 서비스 담당부서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후보자는 사건 발생 전 언제, 누구로부터 괴롭힘 등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사건 발생 전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유족과 네이버 임직원들에게 이미 수 차례 사과하였고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89. 후보자의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인 2021년 5월 네이버 지도 서비스 담당 부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후보자 주도로 자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지? 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회의를 했고 후보자는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개최한 내부 회의별 일시, 장소, 참가자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유족과 네이버 임직원들에게 이미 수 차례 사과하였고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90. 후보자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경영진을 전면교체 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실무 책임 선상에서 사임했던 최익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 책임자는 사임 이후에도 네이버 공익재단인 커넥트재단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보자도 알고 있었는지?최인혁 COO를 커넥트재단 대표직을 유지시킨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후보자가 결정했는지?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1. 지난해 네이버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최익혁 전COO가 복귀하면서 후보가 당시 단행했던 인사 쇄신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네이버의 이러한 인사 조치가 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2. 후보자는 기업체 등에 근무하며 본인 직장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지금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네이버 사건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3. 최근 부산북구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하정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인 2021년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주식 1만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하후보와 업스테이지 측은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당시 후보자가 대표이사였던 만큼 후보자가 허락한 것이 맞는지?

□ 당시 하정우 前 수석이 직속 조직장의 승인을 받고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94. 후보자는 하정우 당시 네이버AI랩·AI센터장 재직 시절 업스테이지 자문을 맡고 그 대가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후보자는 이를 언제 최초 인지했는지? 대표이사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당시 하정우 前 수석이 직속 조직장의 승인을 받고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95. 일각에서는 하정우 센터장이 외부기업 자문의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는 것은 심각한 이해 충돌 및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규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식수령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당시 하정우 前 수석이 직속 조직장의 승인을 받고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민간기업의 사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6. 후보자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하정우 후보가 외부 자문을 대가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은 것이 네이버 사내규정 위반에 해당됐다고 판단하는지? 당시 네이버 사내규정 등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민간기업의 사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7. 후보자는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및 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청’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된다면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19년~`22년 마 등급, `25년 라 등급 등 꾸준히 하위등급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중기부 민원서비스의 신속성과 만족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가 결과가 높은 부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정부의 민원서비스 실태를 면밀히 살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중기부 '19년~'25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

평가연도	평가결과	전체 평가 방법
'19~'22	마	5단계 (가, 나, 다, 라, 마)
'23	라	5단계 (가, 나, 다, 라, 마)
'24	다	5단계 (가, 나, 다, 라, 마)
'25	라	5단계 (가, 나, 다, 라, 마)

99.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었습니다. 후보자도 이 내용에 동의합니까?

□ 대통령께서 모든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투기용 다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편법 증여, 증여세 탈루, 증여세 대납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편법 증여 등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형평성 및 기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인 만큼,

○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101.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 3가지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와 해결방안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행정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과감한 AI 혁신을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 또한,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총리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2.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대내·외 경제여건, 재정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재정-경제의 선순환'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03. 후보자는 증세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 또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ㅇ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 정책의 재원과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ㅇ 우선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04.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재생에너지·화석연료 중 어느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연료 의존도가 낮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원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 국무총리로서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하여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십니까?

□ 사회 갈등 조정을 위해 경청과 소통, 공정한 조정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106. 후보자는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정책적 분야에서 각각 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 공직은 사적인 직위와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리이므로, 도덕적 자질로는 청렴성과 준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적 부분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봅니다.

107. 후보자는 현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08.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및 한국 인터넷기업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해주십시오

□ 네이버 대표이사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인터넷·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정부정책에 다양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으로 재직 당시 국회·정부와 협력해 디지털경제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며,

○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당시에는 네이버의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창작자들의 가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추진한 '프로젝트 꽃'이 기억에 남습니다.

109. 플랫폼 대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해외주식포함) 보유내역은 무엇이며, 이를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후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해외주식 8종(임명동의안 37p)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111. 대통령의 지시가 본인의 소신 또는 국민다수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자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정확한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2.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국민여론과 괴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정확한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3.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가 경험한 조직생활에서 상급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 후보자는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총리를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역대 총리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한 만큼, 특정 총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115. 후보자 생각에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방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까?

□ 정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께 솔직하게 설명드린 뒤 필요한 보완과 수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6.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 그 성과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7. AI 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일자리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AI 시대에도 필요할 좋은 일자리를 지역과 청년에게 제공하며,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AI가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AI 시대에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경험을 쌓도록 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고용활성화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도 세심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18. 후보자는 북한의 선전·선동매체에 대한 정부의 기본원칙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알권리를 존중하되, 국가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상황에 대하여 알권리 증진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북한체제선전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의 북한 노동신문 개방은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신뢰하여 시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 노동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 북한 체제 선전물 확산 등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 체계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0. 통일백서에 담긴 두국가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 이전에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현재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속에 남북간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 향후 대화가 재개되고,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공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2. 후보자는 대한민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에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후보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4.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조와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하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부처간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5.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군(軍)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가지를 선정해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해 주십시오

□ 우리 군은 안보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의 전환, 비전투 분야 임무에 대한 민간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중동전쟁·러우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 변화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무인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주적·제도적 체계 완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6.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십시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군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및 특수업무수당 신설 △순직군경 인정 확대('27.2월~) 등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 (군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 3.5%(공통분) + 7~9급 초임의 3.1% 상당(추가분) / (위험근무수당 인상) 월 7 → 8만원 / (특수업무수당 신설) 월 8만원 / (순직군경 인정 확대) 경찰·소방 → 군인까지 확대

□ 총리로 임명된다면, 제복공무원의 위험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7. 후보자는 모병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현 안보 상황, 군 인력 모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로의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8. 후보자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여성징병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9. 후보자는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급여, 취업·창업 지원, 자기계발 기회 확대, 의료 지원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 후보자가 국무총리실 업무현황을 확인한 후 증진·발전시켜야 할 부분와 개선시켜야 할 부분 각각 3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총리실의 특정한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의 업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1. 한성숙 후보자의 세금 납부내역 증명서를 보면 2023년 귀속 2024.12.12. 증여세 6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일반적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그런데 한성숙 후보자는 2023년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2024.12.에 납부,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 명의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면, 2023.5. 사망한 父로부터 지분을 상속받거나 본인이 직접 매입한 것들이고 증여받은 물건은 없음. 또한, 한성숙 후보자는 2020년 이후 연평균 30억원 가량 소득이 있었음.
이처럼 증여세를 기한을 넘기고 납부하였고, 고소득에 보유 재산이 많음에도 남에게 증여 받았다는 사실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증여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증여세를 왜 제때 납부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람

□ ’23년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려주셨던 금전(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 ’24년에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조속히 납부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132. 한성숙 후보자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보면, 2022.6.10. 설해원 회원권을 6억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등으로 1,322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골프장 회원권은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고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그러나 한성숙 후보자는 설해원 회원권 취득사실만 나와있고, 그 이후 재산신고 내역 등에서 설해원 회원권 관련 내용이 없음. 설해원 회원권이 고가인 만큼 취득한 회원권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재산신고에서 누락은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람

□ 설해원 회원권을 ’22.1월에 본인과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6억원에 취득(입회)하였다가 ’23.10.25. 5.4억원에 중도해지(위약금6천만원)하여 양도소득세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133. 2026.3. 한성숙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母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했던 국내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2025.12.5. 전자관보에 공고되어 있는 인사혁신처 주식 매각사항을 보면母의 매각대금은 모두 2억9,722만원이었음. 그렇다면 이 대금이 母의 예금 등으로 이전되어 있어야하나 母의 예금 증가액은 6천만원 가량이고 타항목 재산증가는 없음.고령의 母가 단기간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소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제3자에게 대여했으면 그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나, 이번 총리인사 청문요청안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母의 매각대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 바람. 만약 母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 내용과 증여세 납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23년 부친상으로 인한 상속세(임명동의안 221P 참조),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 한성숙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2026.5.6. 잠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성경화에게 52억원에 매도함.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인 성경화는 잠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금융권에 한푼도 대출을 받지 않고 구입하였음. 그러나 성경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두산위브아파트 109동 1605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성경화는 2019.11.30. 동 아파트를 6억5,000 만원에 구입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2,000만원 가량(2억6,400근저당설절)을 빌린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 채무는 존재하고 있음.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성경화씨는 금융권에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52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살만큼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성숙 후보자과 성경화가 특수관계는 아닌지? 매도대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오명을 벗기 위한 위장매매는 아닌지 등에 대해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 바람

□ 매수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매매 대금은 계좌를 통해 정상 입금받았습니다.

□ 입금 내역은 붙임1,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나은행 통장 내역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거래일자	거래시각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통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단말	거래점	상대은행	상대계좌 (수취인/의뢰인)
2026/03/31	22:04	입금	대체								******
2026/03/31	22:04	입금	대체		KRW						******
2026/04/07	15:28	지급	현금								
2026/04/10	11:23	입금	대체								
2026/04/16	10:24	입금	대체	성경화	KRW	100,000,000	138,546,383		문정법조타운	**	****** 성경화
2026/04/16	10:25	입금	대체	성경화	KRW	100,000,000	238,546,383		문정법조타운	**	****** 성경화

붙임 2 신영증권 통장 내역

종합매매계좌 거래내역

계좌번호: 800-1***93-001 한성숙
거래일자: 2021/06/19 ~ 2026/06/19

일자 : 2026/06/19
의뢰자

거래일자	거래번호	거래적요	종목코드	수량	이자	수수료	거래금액	융자/대주금액	잔량
취소여부	원거래번호	상대계좌	종목명	단가	신용이자	제세금	정산금액	미수발생/변제금	RP+예수금
2026/05/06	1			0	0			0	0
					0				
2026/05/06					0				0
					0			0	
2026/05/06	3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	0	101,989,737
2026/05/06	4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	0	201,989,737
2026/05/06	5	전자계좌입금		0	0	0	2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20,000,000	0	221,989,737
2026/05/06				0	0			0	
					0				
2026/05/06				0	0			0	
	0							0	
2026/05/06				0	0			0	
	0			0	0				
2026/05/06				0	0			0	
	0			0				0	
2026/05/06	1			0	0			0	0
	0			0	0				
2026/05/06	11			0	0			0	0
	0			0	0			0	
2026/05/06	12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0	0	1,012,814,167
2026/05/06	13	전자계좌입금		0	0	0	56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560,000,000	0	1,572,814,167
2026/05/06				0	0			0	0
	0				0				
2026/05/07				0	0				
					0	0		0	
2026/05/07				0	0	0		0	
					0			0	
2026/05/07	3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0	0	1,332,827,074
2026/05/07	4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0	0	2,332,827,074
2026/05/07	5	전자계좌입금		0	0	0	8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80,000,000	0	2,412,827,074
	0				0	0			
2026/05/27	1	전자계좌입금		0	0	0	1,00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1,000,000,000	0	1,000,340,020
2026/05/27	2	전자계좌입금		0	0	0	40,000,000	0	0
	0	하나은행/성경화			0	0	40,000,000	0	1,040,340,020

135. 한성숙 후보자의 막내 동생인 한진수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1815 평촌더샵선트럴시티 102동203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한진수는 2020.11.26. 동 아파트를 담보대출 한푼도 없이 10억 6,000만원에 매입함. 한성숙 후보자는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2016.11.30. 한진수에게 2억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2025.6.25.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한성숙 후보자의 한진수에 대한 채권은 2026년 한성숙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한진수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작년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한진수는 한성숙 후보자 소유의 삼청동 상가를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벤츠차량도 한성숙 후보자가 증여해 줄 만큼 여유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한진수는 경기 안양 아파트 매입자금을 대출없이 살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한성숙 후보자가 자금을 증여해 준 것으로 보여짐. 한성숙 후보자가 한진수에게 2억4,5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탈세, 경기 안양아파트 매입자금 무상증여로 인한 탈세 등의 의혹에 대해 설명 바람

□ 동생에게 대여한 2억 4,500만원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남동생이 납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생의 아파트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136.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주식 종목별 거래내역을 연월일, 거래시간(시간대 명시), 수량 등으로 구분해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후 ’25. 7. 28.~29. 네이버 주식 8,934주를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애플 등 미국 주식 8종(임명동의안 37p)을 ’26. 6. 10. ~ 6. 17.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 위 2건 모두 신영증권에 위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37.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 주택을 2017년에 15억원에 매입했는데, 어떤 용도로 매입한 것이며, 누구의 소개로 매입한 것인지?

□ 은퇴 후 거주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찾았습니다.

138.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 주택에 처음으로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언제까지 거주를 했는지?

□ 2022년 3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2026년 4월 5일에 ‘종로구 사직로 8길’로 전입하였습니다.

139.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 해당 주택에서 누구와 함께 언제부터 동거했으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동거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2022년 3월 14일에 동생 한명숙과 함께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140.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 주택을 올해 4월 후보자의 동생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후보자의 동생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 2026년 4월 ‘종로구 사직로8길’로 이사를 하면서 함께 거주하던 동생 한명숙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141.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 주택을 올해 4월 후보자의 동생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금 책정은 후보자가 직접 결정한 것인지? 그렇게 책정한 사유 는 무엇인지? 주변 부동산 문의 등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주택의 특수성 상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정 수준의 임차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142.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35-185)주택 관련 후보자와 여동생이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월세는 매달 10일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따라 여동생이 후보자에게 보증금과 매월 지정일에 임대료(130만원)을 입금했는지? 이와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4/10	11:23	입금	대체	한영숙	KRW	10,000,000				**	****** 한영숙
2026/05/10	13:06	입금	대체	한영숙	KRW	1,300,000				**	****** 한영숙
2026/06/10	11:41	입금	대체	한영숙	KRW	1,300,000				**	****** 한영숙

143.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3(삼청동 35-184)을 2017년에 5억원에 매입했는데, 어떤 용도로 매입한 것이며, 누구의 소개로 매입한 것인지?

□ 삼청동 185번지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이 한옥(184번지)을 함께 매수할 것을 요청해 매입하였습니다.

144.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3(삼청동 35-184)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인지? 임대를 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남동생에게 임차를 하였고, 계약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2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2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2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2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2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2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200,000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4-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2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2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2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2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2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2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2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2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2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2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2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2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2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200,000

붙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84(북촌로5나길103)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면적 :46.68㎡
4. 임대차구분
   월정임대료 일금 이십만원정(₩200,000/부가세포함)

제2조 **【임대차 기간】**

1.임대차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로한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까지 특별한 조건의 변동이나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월정 임대료】

보증금은 없이 을의 월정 임대료는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4조 **【기타관리비】**

임대료에 전기료, 관리유지비, 수도료 모두 포함된다.

제5조 **【임차인의 의무규정】**

"을 은 임차한 건물과 제반사항에 있어 일반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 내부구조변경 및 임차건물의 제품 야적은 물론 계약당시 제출한 설비목록 외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무효】**

1.을'은 임대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편법 사용케 할수없으며, 본계약상 내용권리 일체를 제삼자에 대하여 질권으로 행사 할 수 없다.

2. 임대료와 관리비를 2회연속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 고의로 본 임대점포를 훼손하였을 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 갑은 통고없이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화재, 도난, 기타사고등으로 갑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하였을시 손해에 대한 일체변상책임을 지며, 을은 필히 화재보험 가입 및 방화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제8조 을은 본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전에 갑에게 사전승락을 득한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시 을은 점포구조를 필히 원상복구 하여 갑에게 명도키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1. 1층 및 2층(한옥구조) 모두 을이 사용하는것으로 한다.

2.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정 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나은행 : 한성숙 768-910403 -)

위 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인 정정은 이를 불허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계약일자 : 2022년 3월 22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4동 305호

주민등록번호 : 670620 - 2

성 명 : 한 성 숙 연 락 처 : 010-

(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주민등록번호 : 741130 - 1

성 명 : 연 락 처 : 010

145.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3(삼청동 35-184) 사무실(제2종 근 린생활시설)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유·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대상이 누구이며, 후보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계약서를 함께 제 출해주시기 바람

□ 삼청동 35-184 사무실은 남동생 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계약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84(북촌로5나길103)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면적 :46.68㎡
4. 임대차구분
   월정임대료 일금 이십만원정(₩200,000/부가세포함)

제2조 **【임대차 기간】**

1.임대차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로한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까지 특별한 조건의 변동이나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월정 임대료】

보증금은 없이 을의 월정 임대료는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4조 **【기타관리비】**

임대료에 전기료, 관리유지비, 수도료 모두 포함된다.

제5조 **【임차인의 의무규정】**

"을 은 임차한 건물과 제반사항에 있어 일반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 내부구조변경 및 임차건물의 제품 야적은 물론 계약당시 제출한 설비목록 외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무효】**

1.을'은 임대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편법 사용케 할수없으며, 본계약상 내용권리 일체를 제삼자에 대하여 질권으로 행사 할 수 없다.

2. 임대료와 관리비를 2회연속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 고의로 본 임대점포를 훼손하였을 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 갑은 통고없이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화재, 도난, 기타사고등으로 갑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하였을시 손해에 대한 일체변상책임을 지며, 을은 필히 화재보험 가입 및 방화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제8조 을은 본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전에 갑에게 사전승락을 득한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만료시 을은 점포구조를 필히 원상복구 하여 갑에게 명도키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1. 1층 및 2층(한옥구조) 모두 을이 사용하는것으로 한다.

2.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정 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나은행 : 한성숙 768-910403 -)

위 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인 정정은 이를 불허하며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계약일자 : 2022년 3월 22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4동 305호

주민등록번호 : 670620 - 2

성 명 : 한 성 숙 연 락 처 : 010-

(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주민등록번호 : 741130 - 1

성 명 : 연 락 처 : 010

146.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 35-185)와 북촌로5나길103(삼청동35-184) 내·외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언 제 어느 업체를 통해 했으며, 얼마를 지급했는지? 관련 도면과 사진(공사 전·후)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18년 7월경 종로구청의 승인을 받아 내력벽 8개소 해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별첨 참조)

붙임 **사용승인(대수선) 처리 알림(삼청동 35-185)**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종 로 구

수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4동 305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한성숙 귀하

(경유)

제목 사용승인(대수선)처리 알림(삼청동 35-185)

1. 평소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아래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대수선)신청서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지위치 : 삼청동 35-185

나. 건 축 주 : 한성숙

다.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6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북촌),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라.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1.93㎡

마. 공사종별 및 용도 : 대수선(내력벽 일부 해체) / 단독주택

- 대수선 : 내력벽 8개소 해체. 끝.

종 로 구 청 장 종로구청장인

★주무관 강민경 한옥문화팀장 박대용 건축과장 전결 07/23 김재욱

협조자

시행 건축과-17714 (2018.07.23.) 접수 ( )

우 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 http://www.jongno.go.kr
전화 02)2148-2793 /전송 02)2148-5830 / yoco83@mail.jongno.go.kr / 부분공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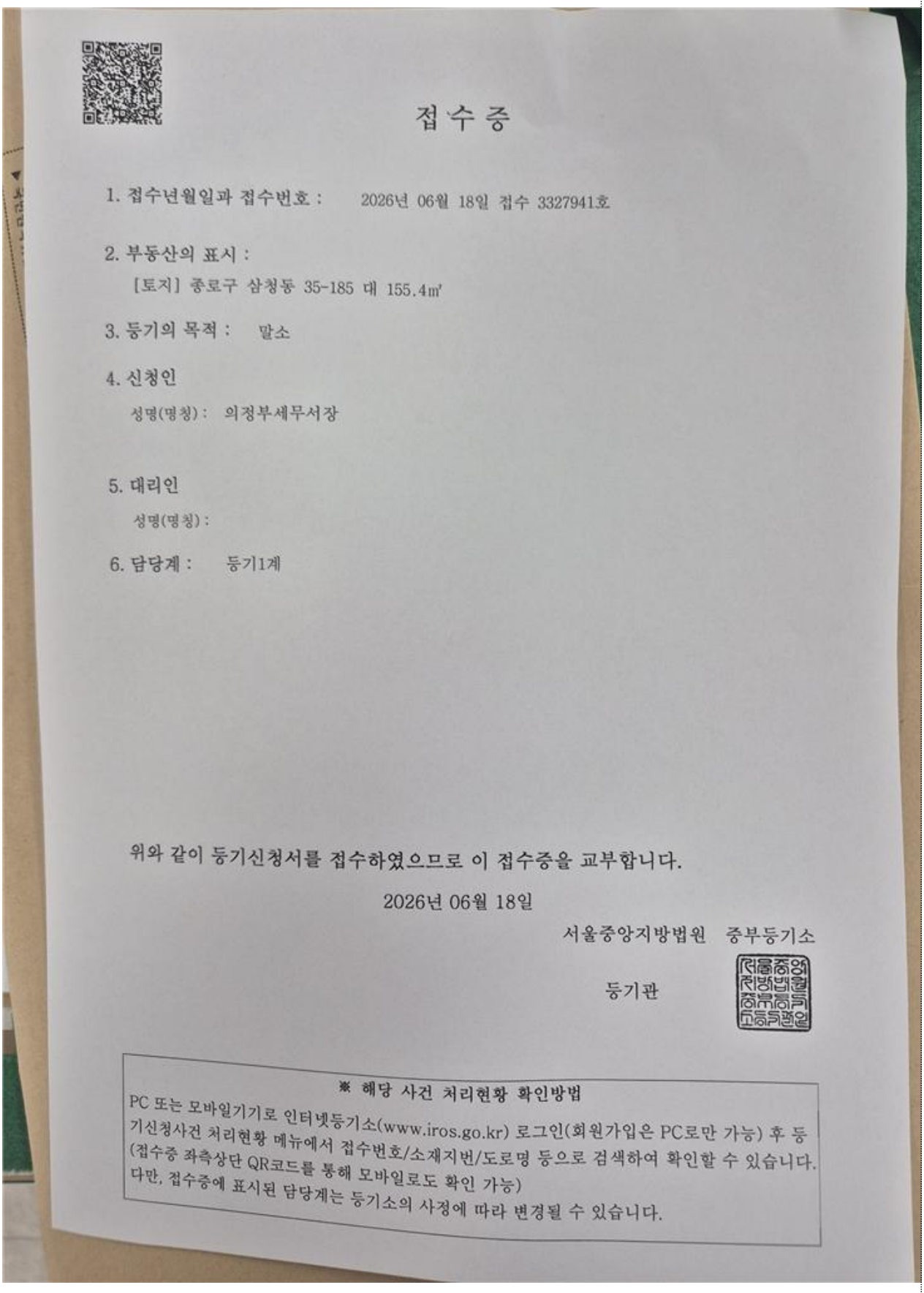
147.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 35-185)와 북촌로5나길103(삼청동35-184) 내·외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신고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종로구청 신고 관련 내역은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303쪽, 319쪽, 32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8. 후보자 소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삼청동 35-185)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해당주택이 2024년 국세청(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 563.932,48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납세담보제공계약)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

□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p306 [을구] 순위번호 5번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 설정된 것으로 상속세는 2025년 12월 1일 완납되었고, 동 담보는 6월 24일까지 삭제될 예정입니다.

붙임 **근저당권 해제 신청서**



접 수 증

1.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 : 2026년 06월 18일 접수 3327941호

2. 부동산의 표시 :
[토지] 종로구 삼청동 35-185 대 155.4㎡

3. 등기의 목적 : 말소

4. 신청인
성명(명칭) : 의정부세무서장

5. 대리인
성명(명칭) :

6. 담당계 : 등기1계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관

※ 해당 사건 처리현황 확인방법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로그인(회원가입은 PC로만 가능)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접수번호/소재지번/도로명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좌측상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다만, 접수증에 표시된 담당계는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9. 후보자와 후보자 형제자매는 2023년 부친으로부터 양주 일대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 받은 것으로 밝혔는데, 후보자가 후보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려 한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와 근거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후보자는 본인 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납하려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부친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후보자와 모친 및 형제자매는 상속세 연납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후보자 소유 주택에 국세청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 이는 상속세 일시납부가 어려운 가족들을 감안하여 가족 간 논의를 거쳐 연납을 신청한 것입니다.

150.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3(삼청동 35-184)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에 걸쳐 활용했고 이를 통해 얼마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51. 후보자 소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나길 103 (삼청동35-184) 한옥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한옥 수선 등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관련 신청서 사본 및 수선 내역, 지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318-3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2.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청에서 후보자 소유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모친이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지숙과 어머니가 상속 받아 가진 새 주식을 팔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얼마이며, 약속을 이행했는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07년 경부터 후보자가 형제자매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 후보자가 네이버 유럽 대표로 해외 체류(’22.3.~)하게 되면서 부득이 후보자 없이 모친께서 거주하게 되셨는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고 ’26.5월 매도하였습니다.

153.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사실인지?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07년 경부터 후보자가 형제자매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 후보자가 네이버 유럽 대표로 해외 체류('22.3.~)하게 되면서 부득이 후보자 없이 모친께서 거주하게 되셨는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고 '26.5월 매도하였습니다.

154. 후보자 모친은 지난해 7월 29일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차 주식을 매각해 2억 9,593만원을 현금화했는데, 올해 3월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에는 모친의 예금이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식매각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세 증빙서류는 임명동의안 221P를 참조 바랍니다.

155. 후보자 모친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양주시 일대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2억 2,568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납부했으며,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후보자 모친의 상속세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은 임명동의안 221페이지의 ‘납부내역증명’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후보자 소유 서울 종로구 율곡로13가길8 건물 내 있는 수림재(사업자번호: 293-86-03087)는 후보자 또는 형제자매가 설립·등록한 사업체인지? 언제 설립되었고,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설립 목적이 무엇이고, 후보자가 투자 또는 지원 한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025년 11월 27일 청산되었고, 후보자가 투자 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157. 후보자는 수림재에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했었던 사례가 있는지? 등록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등록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58. 후보자는 수림재(사업자번호:293-86-03087)로부터 급여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59. 수림재(사업자번호:293-86-03087)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립된 이후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금액을 지원받았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60. 수림재(사업자번호:293-86-03087)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또는 기관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립된 이후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사업에 얼마의 금액에 선정되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단독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현재 후보자의 여동생이 거주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이후부터는 이사 준비 중입니다.

162.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단독주택의 최근 5년간 실제 거주자 현황 제출

□ 후보자의 여동생이 거주하였습니다.

163.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단독주택의 최근 5년간 전기·수도·가스 사용 현황 제출

□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64.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단독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주택에는 후보자의 여동생이 거주해 왔으며, 이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165.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단독주택의 최근 10년간 임대차 계약체결 현황 제출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6.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취득 영위와 취득 목적은?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67.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내역 제출

□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서, 자료가 수신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최근 10년간 실제 경작자는 누구인지?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69.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70.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등록 내역 제출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1.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 구입시 농업 경영계획서 상 농경 동력확보 방안에 일부고용 30%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해당 농지 경작을 위해 고용된 인력 현황 및 임금 제출

□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동생이 대신 경작하여 명시했으며, 외부 인력 고용 사실은 없습니다.

172. 후보자 또는 가족이 해당 농지와 관련하여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을 수령 내역 제출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3.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최근 10년간 농지 이용 현황 제출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74.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5.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시설물 현황

□ 후보자 소유 부동산 현황은 임명동의안 부속서류(1p~394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6.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제출

□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77.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여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8.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컨테이너, 창고, 비닐 하우스, 농막 등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9. 후보자 또는 가족이 해당 농지와 관련하여 농협 노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0.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경작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 가족 외의 제3자에 대한 사용 허락 또는 경작을 맡긴 사실이 없습니다.

181. 후보자는 25년 7월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영농계획서 제출이 대리인 실수라고 해명했음, 해당 대리인은 누구인지? 성명, 관계, 연락처 등 제출

□ 대리인은 현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양평군 농지는 '09년 취득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시일이 오래되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후보자는 25년 7월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농지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에 맞게 위탁경영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후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26.3.31.)했으며, 현재 매도 계약(6.16.)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잔금 6.22. 입금완료)입니다.

183.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한 위탁경영 계약 체결 여부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26.3.31.)했으며, 현재 매도 계약(6.16.)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잔금 6.22. 입금 완료)입니다.

184.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매각 추진 시기 및 진행 경과는?

□ ’26. 6. 16. 매도계약(잔금 6. 22. 입금 완료)을 체결하였습니다.

185. 후보자 소유 양평군 도곡리 소재 농지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이유는?

□ ’26. 6. 16. 매도계약(잔금 6. 22. 입금 완료)을 체결하였습니다.

186.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지방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농사 짓겠다고 땅사서 가짜로 심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으로 팔아야한다"고 지시한바 있으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 안지으면 경자유전 헌법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해당 발언에 따르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양주시 농지는 부친께서 소유했던 농지 등(양주시 광사동 431-2 등)을 '23.5. 형제들과 협의 분할하여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했습니다.

□ 주말농장 등을 위해 7.8억원에 매입한 양평군 농지(도곡리 75-2 등)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으며, '26.6.16. 5억원에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 체결하였습니다.

187. 국무총리에 임명될 경우 해당 농지를 계획 보유할 계획인지? 아니면 매각할 계획인지?

□ 양주시 농지는 부친께서 소유했던 농지 등(양주시 광사동 431-2 등)을 '23.5. 형제들과 협의 분할하여 지분을 상속한 것입니다.

□ 양평군 농지(도곡리 75-2 등)는 '26.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 체결하였습니다.

188.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건축물 용도 변경 내역 제출

□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36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9.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2020년 연결공사(통로 설치) 경위 및 목적

□ 대수선 공사는 남동생이 주도 하였습니다.

190.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연결공사를 최초로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 대수선 공사는 남동생이 주도 하였습니다.

191.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연결공사 비용 총액 및 비용 부담 주체는?

□ 대수선 총 공사비용은 약 947백만원으로 연결공사 비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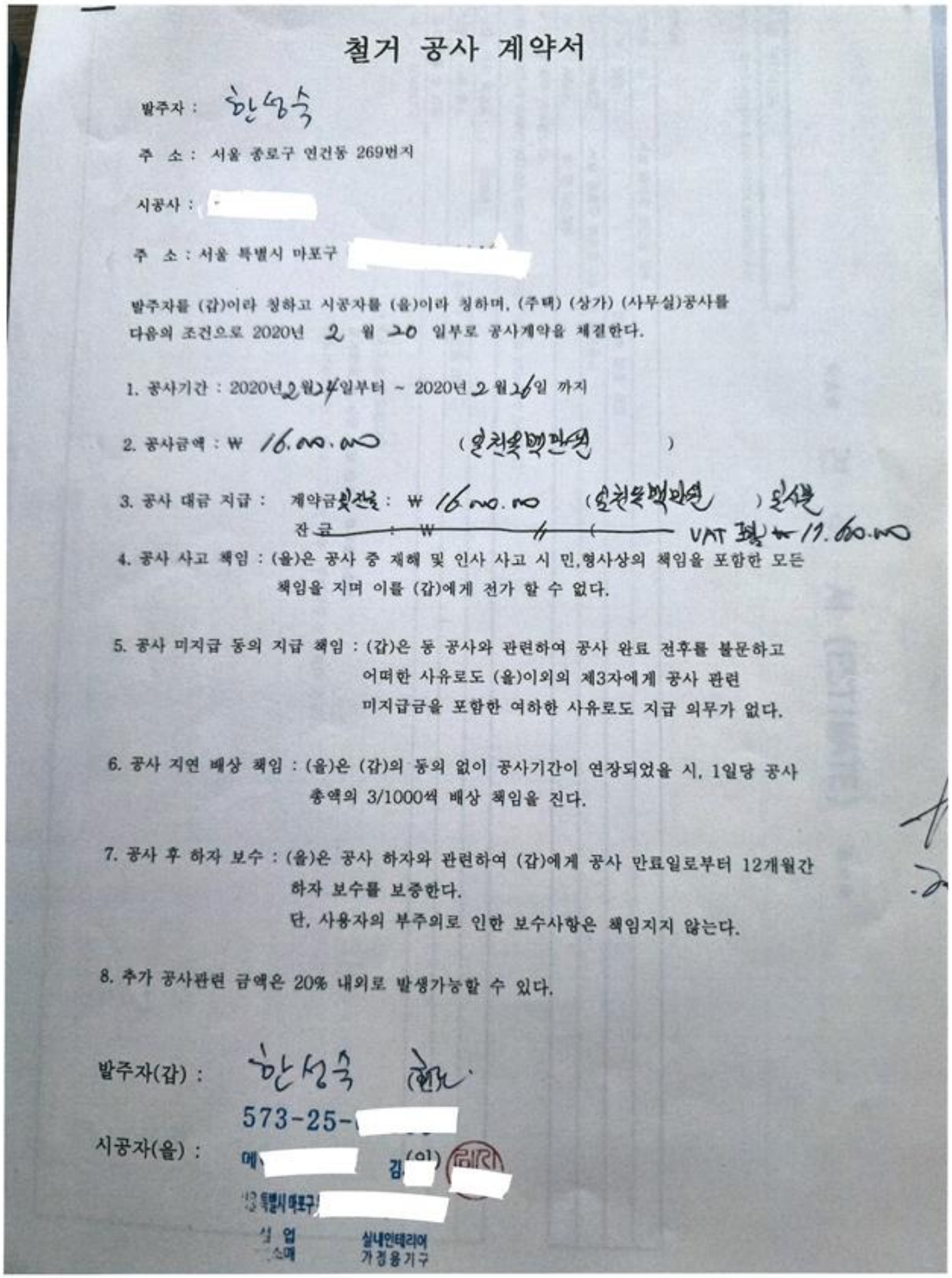
192.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연결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세금 계산서 및 공사비 지급 내역 제출

□ 연건동 대수선 공사 관련 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공사를 특정한 계약은 없습니다.

날짜	적요	거래금액(원)
2020-02-20	김**(메****)	17,600,000
2020-03-31	김**(메****)	110,000,000
2020-06-12	김**(메****)	100,000,000
2020-07-01	김**(메****)	135,400,000
2020-07-28	김**(메****)	345,400,000
2020-10-07	김**(메****)	100,000,000
2020-11-04	김**(메****)	139,073,340
합계		947,473,340

○ 계약서는 별첨1, 세금계산서는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철거 공사 계약서**



철거 공사 계약서

발주자 : 한성숙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2 월 20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2월 24일부터 ~ 2020년 2월 26일 까지

2. 공사금액 : ₩ 16.00.00 (일천육백만원)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및잔금 : ₩ 16.00.00 (일천육백만원) 일시불
잔 금 : ₩ // (VAT 포함 ₩ 17.60.0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등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성숙 (인)
573-25-[redacted]

시공자(을) : 메[redacted] 김[redacted] (인)
[redacted]
업 실내인테리어
소매 가정용기구

2차철거 및 기초 계약서

발주자 : 한OO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4 월 2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 2020년 4월 30일 까지

2. 공사금액 : ₩ 110,000,000 (일백십만원정 VAT포함)
VAT포함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 : ₩ 110,000,000 (완납지급)
잔 금 : ₩ ( )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OO (인) 시공자(을) : 573-25-0[redacted]
[redacted] 김[redacted]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redacted]
건 설 업 실내인테리어
도매및소매 가정용기구

855 - 18 - [redacted]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
(율곡로 13가길 8)

공 사 계 약 서

발주자 : 한성숙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8/8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268번지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6 월 4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5 월 1 일부터 ~ 2020년 8 월 31 일 까지

2. 공사금액 : ₩ 1850.000.000 (vat 포함 ₩ 863.500.000)

3. 공사 대금 지급 (계약금+110.000.000)

1차 계약금 : ₩	314.000.000	(vat포함.₩ 345.400.000)
중도금 : ₩	314.000.000	(vat포함.₩ 345.400.000)
잔 금 : ₩	157.000.000	(vat포함.₩ 172.700.00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9. 공사 공정별 내용 : 견적서 별도 제출.

573-25-[redacted]

발주자(갑) : 한성숙 (인) 시공자(을) : 메[redacted] 김[redacted] (인)

서울 특별시 마포구 [redacted]

건 설 업 실내인테리어
도매및소매 가정용가구

계 약 서

발주자 : 한 성 숙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 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9 월 10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9월 10일부터 ~ 2020년 10월 25일 까지

2. 공사금액 : ₩ 60,339,400 (vat포함 ₩66,373,340)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 : ₩ 50,000,000 (vat포함 ₩55,000,000)
잔 금 : ₩ 10,339,400 (vat포함 ₩ 11,373,34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 성 숙 (인) 시공자(을) : 메 [redacted]

붙임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220-10000000-45231526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ii)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3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2-20	16,000,000	1,6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2	20	인테리어 공사				16,000,000	1,6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7,6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623-10000000-43609433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ㅣ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ı@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6-23	214,000,000	21,4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6	23	인테리어 공사				214,000,000	21,4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235,4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331-10000000-84608401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daum.net				이메일	i@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3-31	100,000,000	10,0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3	31	인테리어 공사				100,000,000	10,0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110,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026-10000000-51515075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00699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메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sihankim@daum.net				이메일	i@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0-26	314,000,000	31,4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0	26	인테리어 공사				314,000,000	31,4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345,4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110-10000000-70867213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00699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1-10	60,339,400	6,033,94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10	인테리어공사				60,339,400	6,033,94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66,373,34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104-10000000-70865611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ㅣ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ㅣ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22-6(자곡동)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n@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1-04	157,000,000	15,7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04	인테리어 공사				157,000,000	15,7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172,7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 연결공사가 이루어진 시점과 남동생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각각 제출

□ 임대차계약은 2020년 11월 13일이며 대수선 공사는 남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194. 후보자는 남동생의 카페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건물의 연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 대수선 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195.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임대료 산정 기준 제출

□ 과거 코로나 시기 경제 상황, 자영업자 여건 등 고려해 당시 시세에 맞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책정했으며, 동생에게도 적정 임대료(350만원)를 받고 있으며, 제3자에게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 중입니다.

196.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시세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 당시 시세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에 대해 남동생 외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예상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 당시 시세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8.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내역 제출

□ 동생과의 임대차 보증금 등 수령 내역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1-03-05	보증금	35,000,000
2021-03-05	임대료	2,000,000 *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5백만원과 2백만원 합계인 7백만원이 '21년 1-2월 임대료임
2021-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1-04-30	4월 임대료	3,500,000
2021-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1-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1-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1-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1-09-30	9월 임대료	3,500,000
2021-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1-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2-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2-03-02	2월 임대료	3,500,000
2022-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2-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2-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2-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2-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2-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2-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3,5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3,500,000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3-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3,5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3,5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3,5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3,5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3,5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3,5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3,5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3,5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3,5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3,5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3,5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3,5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3,500,000

□ 제3자와의 임대차 보증금 등 수령 내역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0-10-16	도**	5,000,000
2020-11-03	도**	580,000
2020-12-02	도**	580,000
2021-01-05	도**	580,000
2021-02-02	도**	580,000
2021-03-04	도**	580,000
2021-04-01	도**	580,000
2021-05-04	도**	580,000
2021-06-02	도**	580,000
2021-07-17	도**	580,000
2021-08-03	도**	580,000
2021-09-03	도**	580,000
2022-02-09	도** 10월	580,000
2022-02-09	도** 11월	580,000
2022-02-09	도** 12월	580,000
2022-02-09	도** 1월	580,000
2022-02-09	도** 2월	580,000
2022-03-02	도** 3월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3-09-02	도**	580,000
2023-09-05	도**	2,000,000
2023-10-01	도**	1,120,000
2023-10-09	도**	580,000
2024-04-03	도**11월	580,000
2024-04-03	도**12월	580,000
2024-04-03	도**1월	580,000
2024-04-03	도**2월	580,000
2024-04-03	도**3월	580,000
2024-04-03	도**4월	580,000
2024-05-07	도** 5	580,000
2025-01-14	레****	580,000
2025-02-03	레****	580,000
2025-03-04	레****	580,000
2025-03-04	24년 5-12월	4,640,000
2025-04-03	레****	580,000
2025-05-11	레****	580,000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5-06-05	레****	580,000
2025-07-03	레****	580,000
2025-08-06	레****	580,000
2025-09-02	레****	580,000
2025-10-01	레****	580,000
2025-11-15	레****	580,000
2025-12-10	레****	580,000
2026-01-15	레****	580,000
2026-02-20	레****	580,000
2026-03-30	레****	580,000
2026-04-28	레****	580,000
2026-05-11	레****	580,000
2026-06-16	레****	580,000

* 입금자 도**는 사업주 이름이며 레****는 업체명으로 동일인임

199. 후보자는 해당 건물의 임대료가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지?

□ 당시 시세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의 사업자등록일 및 영업 신고일 제출

□ 남동생과는 2020년 11월 13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자등록일 등은 아는 바 없습니다.

201.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해당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 시설 설치 비용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 건물 매입 목적에 맞게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는 후보자가 지급하였습니다.

202.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해당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집기 구입,시설 개보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 건물 매입 목적에 맞게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는 후보자가 지급하였습니다.

203.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내역 제출

□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341-344쪽, 365-36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4.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위반건축물 지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있습니다.

205. 후보자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와 관련하여 건물주 외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 카페 대수선 과정 등은 카페를 운영하는 남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206. 후보자는 해당 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부동산의 특수성 및 코로나19 등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임차료를 정한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207.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에서 남동생이 운영중인 카페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8. 후보자는 해당 카페의 상호 선정, 인테리어 기획, 영업 준비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9.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연결공사 이후 종로구청 또는 종로소방서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2025년 7월경 위반건축물 점검을 위해 종로구청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210.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중인 공방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간 사업상 관계가 있는지?

□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211. 후보자 소유 건물 지하 1층 공방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간 공동 마케팅, 공동 행사, 공동 홍보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212.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내부에 전시된 도자기 작품의 소유자 및 공급자는?

□ 남동생의 카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213. 카페 내부에 전시된 도자기 작품 중 지하 1층 공방에서 제작 또는 판매하는 작품이 있는지?

□ 남동생의 카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214. 카페에서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매 주체, 판매 방식 및 수익 귀속 관계 제출

□ 남동생의 카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215. 지하1층 공방 임차인과 후보자 남동생 간 금전거래, 사업상 협력관계 또는 공동 사업 관계를 제출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216. 지하1층 공방 임차인과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간 친족관계, 특수관계 또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7. 지하1층 공방의 입점시기와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의 개업시기를 각각 제출

□ 공방과 임대차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 남동생과 임대차 계약은 2020년 11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218. 후보자 소유 건물에서 운영중인 공방과 카페가 하나의 브랜드, 갤러리 또는 문화공간으로 홍보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219.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지하 1층 공방의 입점, 운영 또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공방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운영 또는 사업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20. 후보자 소유 종로구 소재 건물 지하 1층 임대차 계약서상 제1조에는 월정 임대료가 월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조에는 월정 임대료가 월 5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금액 불일치가 발생한 경위는?

□ 제3조 월55만원은 오기한 것입니다.

221.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수령한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0-10-16	도**	5,000,000
2020-11-03	도**	580,000
2020-12-02	도**	580,000
2021-01-05	도**	580,000
2021-02-02	도**	580,000
2021-03-04	도**	580,000
2021-04-01	도**	580,000
2021-05-04	도**	580,000
2021-06-02	도**	580,000
2021-07-17	도**	580,000
2021-08-03	도**	580,000
2021-09-03	도**	580,000
2022-02-09	도** 10월	580,000
2022-02-09	도** 11월	580,000
2022-02-09	도** 12월	580,000
2022-02-09	도** 1월	580,000
2022-02-09	도** 2월	580,000
2022-03-02	도** 3월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3-09-02	도**	580,000
2023-09-05	도**	2,000,000
2023-10-01	도**	1,120,000
2023-10-09	도**	580,000
2024-04-03	도**11월	580,000
2024-04-03	도**12월	580,000
2024-04-03	도**1월	580,000
2024-04-03	도**2월	580,000
2024-04-03	도**3월	580,000
2024-04-03	도**4월	580,000
2024-05-07	도** 5	580,000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5-01-14	레****	580,000
2025-02-03	레****	580,000
2025-03-04	레****	580,000
2025-03-04	24년 5-12월	4,640,000
2025-04-03	레****	580,000
2025-05-11	레****	580,000
2025-06-05	레****	580,000
2025-07-03	레****	580,000
2025-08-06	레****	580,000
2025-09-02	레****	580,000
2025-10-01	레****	580,000
2025-11-15	레****	580,000
2025-12-10	레****	580,000
2026-01-15	레****	580,000
2026-02-20	레****	580,000
2026-03-30	레****	580,000
2026-04-28	레****	580,000
2026-05-11	레****	580,000
2026-06-16	레****	580,000

222. 해당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실제 임대료 입금 내역 제출

□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0-10-16	도**	5,000,000
2020-11-03	도**	580,000
2020-12-02	도**	580,000
2021-01-05	도**	580,000
2021-02-02	도**	580,000
2021-03-04	도**	580,000
2021-04-01	도**	580,000
2021-05-04	도**	580,000
2021-06-02	도**	580,000
2021-07-17	도**	580,000
2021-08-03	도**	580,000
2021-09-03	도**	580,000
2022-02-09	도** 10월	580,000
2022-02-09	도** 11월	580,000
2022-02-09	도** 12월	580,000
2022-02-09	도** 1월	580,000
2022-02-09	도** 2월	580,000
2022-03-02	도** 3월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3-09-02	도**	580,000
2023-09-05	도**	2,000,000
2023-10-01	도**	1,120,000
2023-10-09	도**	580,000
2024-04-03	도**11월	580,000
2024-04-03	도**12월	580,000
2024-04-03	도**1월	580,000
2024-04-03	도**2월	580,000
2024-04-03	도**3월	580,000
2024-04-03	도**4월	580,000
2024-05-07	도** 5	580,000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5-01-14	레****	580,000
2025-02-03	레****	580,000
2025-03-04	레****	580,000
2025-03-04	24년 5-12월	4,640,000
2025-04-03	레****	580,000
2025-05-11	레****	580,000
2025-06-05	레****	580,000
2025-07-03	레****	580,000
2025-08-06	레****	580,000
2025-09-02	레****	580,000
2025-10-01	레****	580,000
2025-11-15	레****	580,000
2025-12-10	레****	580,000
2026-01-15	레****	580,000
2026-02-20	레****	580,000
2026-03-30	레****	580,000
2026-04-28	레****	580,000
2026-05-11	레****	580,000
2026-06-16	레****	580,000

223.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수정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해당사항 없습니다.

224.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동생에 대한 채권의 발생 경위, 발생 시기 및 금액 각각 제출

□ ’16. 11월 2억 4,500만원을 남동생 결혼 후 생활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 ’26. 2월 1억원을 남동생에게 생활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225. 후보자가 남동생에게 대여한 금액의 연도별·건별 내역 제출

□ ’16. 11. 30. 2억 4,500만원 대여(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1p 참조)

□ ’26. 2. 24. 1억원 대여(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2p 참조)

226. 후보자가 남동생에게 대여한 금액의 사용 목적을 각각 제출

□ ’16.11.30. 2억 4,500만원 대여: 결혼 후 생활자금 등 목적

□ ’26.2.24. 1억원 대여: 생활자금 등 목적

227.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기존 채권이 존재함에도 2026년 2월 추가로 1억원을 대여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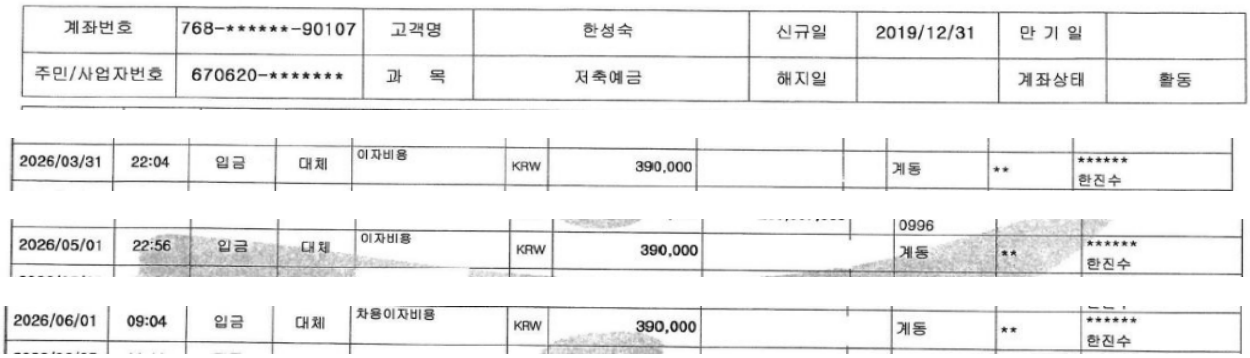
□ 생활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228. 2026년 2월 체결된 금전차용증에 따라 약정한 연 4.6% 이자가 실제 지급되고 있는지?

□ 월 39만원씩 상환받고 있습니다.

229. 2026년 2월 체결된 금전차용증에 따른 월별 이자 지급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제출

□ 월 39만원 이자를 3. 31., 5. 1., 6. 1. 수령하였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3/31	22:04	입금	대체	이자비용	KRW	390,000		계동	**	****** 한진수
2026/05/01	22:56	입금	대체	이자비용	KRW	390,000	0996	계동	**	****** 한진수
2026/06/01	09:04	입금	대체	차용이자비용	KRW	390,000		계동	**	****** 한진수

230. 후보자가 남동생으로부터 수령한 원금 상환 내역 및 이자 수령 내역 제출

□ 1억원 대여에 대한 월 39만원 이자를 3. 31., 5. 1., 6. 1. 수령하였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3/31	22:04	입금	대체	이자비용	KRW	390,000		계동	**	****** 한진수
2026/05/01	22:56	입금	대체	이자비용	KRW	390,000		0996 계동	**	****** 한진수
2026/06/01	09:04	입금	대체	차용이자비용	KRW	390,000		계동	**	****** 한진수

231. 후보자가 남동생에게 대여한 금액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 제출

□ 원금은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232. 후보자가 남동생의 어떠한 상환능력을 근거로 추가 대여를 결정하였는지?

□ 종로구 연건동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33.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대여금이 사업자금, 생활자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생활자금 등 명목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지출 내역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234.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이자 상당액 증여 또는 기타 세법상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 ’16. 11월 2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남동생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6. 2월 1억에 대해서는 세법 등을 고려하여 법정 이자(4.6%)에 상응하는 이자 39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35.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채권을 언제까지 회수할 계획인지?

□ ’26. 2월 대여한 1억원은 ’29. 2. 23.까지 상환받을 예정(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2p 참조)이며, ’16. 11월 대여한 2억 4,500만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상환받을 계획입니다.

236.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담보 내역 제출

□ 별도 담보를 설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237. 후보자는 남동생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계획인지?

□ 원금을 탕감할 생각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238. 후보자는 남동생에 대한 금전대여가 사실상 경제적 지원 또는 사업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

□ 생활자금 등 용도의 대여이며 증여는 아닙니다.

239. 후보자와 남동생 간 금전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금 거래내역 일체 제출

□ 남동생에게 삼청동 35-184번지 건물(월세 20만원), 연건동 269 카페(월세 350만원)를 임대하였고 임대료를 수령중입니다.

* 삼청동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2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2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2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2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2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2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2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2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2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2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2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2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2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2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2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2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2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2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2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200,000

* 연건동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1-03-05	보증금	35,000,000
2021-03-05	임대료	2,000,000 *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5백만원과 2백만원 합계인 7백만원이 '21년 1-2월 임대료임
2021-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1-04-30	4월 임대료	3,500,000
2021-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1-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1-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1-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1-09-30	9월 임대료	3,500,000
2021-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1-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2-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2-03-02	2월 임대료	3,500,000
2022-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2-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2-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2-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2-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2-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2-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3,5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3,5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3,5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3,5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3,5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3,5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3,5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3,5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3,5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3,5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3,5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3,5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3,5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3,500,000

□ 남동생에게 ’16. 11. 30. 2억 4,500만원(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8p 확인서 참조), ’26. 2. 22. 1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2/24	10:49	지급	타행송금	차용	KRW	100,000,000		Y015	계동	신영증권	100081174001 한진수

240. 후보자 소유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의 연결통로 설치 관련 후보자 최초 인지시점 및 조치 현황, 그리고 1년이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최초 인지하게 되었으며, ’25. 12월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오는 6. 23.경 철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유 불문하고 조치가 지연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41. 후보자와 남동생 간 금전차용증에 따르면 금액 일억원에 대한 이자(39,0000)을 매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39,0000' 으로 표기한 사유 설명 및 실제 이자액은?

□ 월 이자 39만원을 정상 수령중에 있으며, 차용증 작성 당시 콤마(,)를 오기하였습니다.

* <차용증 상> 39,0000원 ⇨ <실제> 390,000원

242. 후보자 소유 건물에서 운영중인 남동생 카페 개업 이후 건물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43. 후보자 소유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중인 공방에 대해서 건물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44. 후보자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외 제3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의사가 있었는지?

□ 동생 카페 영업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것이여서 생각해본 바 없습니다.

245. 후보자는 전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전과이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6. 후보자가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 2005년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 시절로, 엠파스도 다른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 하였고,

○ 이에,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 영화 서비스 리더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해당 처벌을 받았습니다.

247. 당시 후보자가 어떠한 직책과 책임 범위에 있었는지요?

□ 사건 당시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의 직위로, 서비스 총책임자였습니다.

248. 본인이 처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 시절로, 엠파스도 다른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를 하였고,

○ 이에,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 영화 서비스 리더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해당 처벌을 받았습니다.

249. 어떤 음란물이 어떻게 유포되어 처벌받은 내용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50. 기업에 재직하면서 받은 처벌로 보이는데, 대표자가 아니라 검색서비스본부장이었던 후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2005년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 시절로, 엠파스도 다른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를 하였고,

○ 이에,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 영화 서비스 리더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해당 처벌을 받았습니다.

251. 검색서비스본부장이었던 후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억울한 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52. 수사과정에서 후보자는 본인의 법적책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 수사과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3. 당시 혐의를 인정하였는지,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54. 법원의 판결 또는 약식명령에서 후보자의 책임이 인정된 핵심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엠파스의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55. 후보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본인의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플랫폼 사업자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그 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의 불법성·유해성에 따라 플랫폼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가 다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6. 디지털 플랫폼 불법·유해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디지털 플랫폼 불법·유해정보 관리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 이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정착·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 후보자는 본인이 처벌받은 내용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검증에 있어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답변해주시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과거 처벌받은 사안으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58.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이라는 관리직급에서 본인의 관리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 서비스 총책임자로서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59. 후보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현재기준 당시에 본인에게도 법적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 사례라고 생각합니까?

□ 당시 검색사업본부장으로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이다 보니 법적 책임을 진 바 있습니다.

□ 다만, 당시 포털에 음란물을 게시했던 행위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네이버 회사 및 책임자도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 후보자는 당시 문제가 된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인지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당시 검색사업본부장으로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 '05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로, 엠파스도 타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했던 사안입니다.

261. 후보자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납부할 때 어떤 직급·직책에 있었습 니까? 그리고 그 직급·직책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설명해주십시오

□ 당시 서비스총괄이사로, 네이버 서비스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62. 후보자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납부할 때, 후원금 납부에 대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인지했다면 인지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임원회의, 다른 임원과의 대화 등)

□ 당시 서비스총괄이사로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263. 후보자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납부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회의록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저는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당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264. 후보자는 2010년~2017년, 네이버가 성남시와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인 각종 인허가·행정절차·사업협력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까?

□ 해당 사안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265.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당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성숙 부사장이 성남FC 사건 관련 결재라인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 등 제출요구에 제출하지 않은 요구자료는 무엇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민간기업의 판단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 후보자는 본인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831,2606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하였습니까? (부동산을 통한 중개 등)

□ 중기부장관 취임('25.7월) 이후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내놓은 바 있으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26.4. 임대한 것이며

○ 매달 관리비가 6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어 저렴하게라도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68. 후보자는 본인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831,2606호)계약 체결 당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부동산 중개 또는 소유자와 직접 계약 등)

□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직접 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69. 후보자는 본인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831,2606호) 임차인(이희, 에스엔디파트너즈)과 원래 알던 사이입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270. 후보자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 831,2606호)을 에스엔디파 트너즈와 계약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중기부장관 취임 이후부터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관리비가 6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어 저렴하게라도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71. 후보자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 831,2606호)에 대하여 월별 임대료 납부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증빙서류(통장거래사본 등)를 제출해 주십시오

□ 통장거래 사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월별 임대료 납부 내역(하나은행)**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기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3/31	17:48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0,000,000	29,256,38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
2026/05/01	23:15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500,000	236,121,58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2026/05/29	11:29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500,000	137,771,62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272. 후보자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 831,2606호)을 계약하며 임차인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까?

□ 사무실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73. 후보자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 831,2606호)을 계약하며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금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274. 후보자는 본인 소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루카831,2606호)의 임대차조건(보증금·월세·관리비 등)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당시 인근 유사 물건 시세와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 제한 조건인 데다,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75. 후보자 소유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에 입주한 수림재의 입주시기 및 사용 공간 제출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76.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던 법인 수림재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77.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78.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사용한 공간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79.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80.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사용공간은?

□ 수림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13가길8 지하1층(연건동)’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다가 ’25.11.27. 청산되었습니다.

281.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법인 등기부상 본점으로 사용한 지하1층에 대하여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282.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가족 기업입니다.

283.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한 공간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과 중복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제3의 임차인과 중복되지 않게 지하 1층의 별도 공간을 소재지로 지정하였습니다.

284.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한 공간에 대하여 임대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

□ 수림재는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여 후보자의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85.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 실제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86.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수림재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전기·수도·가스 등 관리비를 부담한 내역 제출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287.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과 후보자 간 채권·채무관계 또는 금전거래 내역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 후보자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계획수립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89. 후보자는 수림재 건물 사용과 관련하여 남동생 또는 남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90. 수림재 자본금 3천만원을 후보자가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 수림재는 가족법인인 바 가족이 모두 함께 출자하고 출자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회수하였습니다.

김희정 위원(추가)

1. 후보자 소유주택 또는 건물에 후보자 가족 및 지인 (관계명시) 임대계약 체결 내역 및 계약서 사본, 임대료 수익 및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등) 제출(최근20년기준)

□ 임대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	계약 관계 및 임대료 지급 현황
1	삼청동	35-185 주택 지하1~3층	▶여동생 한명숙에게 지하1층~1층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
		35-184 근린생활시설 1~2층	▶남동생 한진수에게 임대(보증금 無, 월세 20만원)
2	연건동	268 근린생활시설 1~2층	▶남동생 한진수에게 268 1~2층 및 269 1~3층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
		269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3층	▶제3자(도선미)에게 지하1층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
3	역삼동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제3자(에스앤디파트너즈, 대표 이희)에게 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50만원)

□ 임대차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체결일	비고(참조)
삼청동 35-185 지하1층~1층	2026. 4. 10.	임명동의안 재산 관련 부속서류 439쪽
삼청동 35-184 1~2층	2022. 3. 22.	붙임 1

연건동 268 1~2층 및 269 1~3층	2020. 11. 13.	임명동의안 재산 관련 부속서류 433쪽
연건동 269 지하1층	2020. 10. 16.	임명동의안 재산 관련 부속서류 436~437쪽
역삼동 오피스텔	2026. 4. 1.	임명동의안 재산 관련 부속서류 440쪽

□ 삼청동 35-185 주택 지하1층~1층 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4/10	11:23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0,000,000				**	****** 한명숙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5/10	13:06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300,000				**	****** 한명숙
2026/06/10	11:41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300,000				**	****** 한명숙

□ 삼청동 35-184 근린생활시설 1층~2층 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2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2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2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2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2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2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2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2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2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2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2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2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2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2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2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2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2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200,000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5-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2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2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200,000

□ 연건동 상가(268, 269) 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1-03-05	보증금	35,000,000
2021-03-05	임대료	2,000,000 *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5백만원과 2백만원 합계인 7백만원이 '21년 1-2월 임대료임
2021-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1-04-30	4월 임대료	3,500,000
2021-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1-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1-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1-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1-09-30	9월 임대료	3,500,000
2021-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1-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2-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2-03-02	2월 임대료	3,500,000
2022-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2-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2-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2-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2-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2-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2-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3,500,000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2-31	12월 임대료	3,5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3,5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3,5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3,5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3,5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3,5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3,5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3,5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3,5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3,5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3,5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3,5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3,5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3,500,000

□ 연건동 상가(269, 지하 1층) 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0-10-16	도**	5,000,000
2020-11-03	도**	580,000
2020-12-02	도**	580,000
2021-01-05	도**	580,000
2021-02-02	도**	580,000
2021-03-04	도**	580,000
2021-04-01	도**	580,000
2021-05-04	도**	580,000
2021-06-02	도**	580,000
2021-07-17	도**	580,000
2021-08-03	도**	580,000
2021-09-03	도**	580,000
2022-02-09	도** 10월	580,000
2022-02-09	도** 11월	580,000
2022-02-09	도** 12월	580,000
2022-02-09	도** 1월	580,000
2022-02-09	도** 2월	580,000
2022-03-02	도** 3월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3-09-02	도**	580,000
2023-09-05	도**	2,000,000
2023-10-01	도**	1,120,000
2023-10-09	도**	580,000
2024-04-03	도**11월	580,000
2024-04-03	도**12월	580,000
2024-04-03	도**1월	580,000
2024-04-03	도**2월	580,000
2024-04-03	도**3월	580,000
2024-04-03	도**4월	580,000
2024-05-07	도** 5	580,000
2025-01-14	레****	580,000
2025-02-03	레****	580,000
2025-03-04	레****	580,000
2025-03-04	24년5-12월	4,640,000
2025-04-03	레****	580,000
2025-05-11	레****	580,000
2025-06-05	레****	580,000
2025-07-03	레****	580,000
2025-08-06	레****	580,000
2025-09-02	레****	580,000
2025-10-01	레****	580,000
2025-11-15	레****	580,000
2025-12-10	레****	580,000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6-01-15	레****	580,000
2026-02-20	레****	580,000
2026-03-30	레****	580,000
2026-04-28	레****	580,000
2026-05-11	레****	580,000
2026-06-16	레****	580,000

* 입금자 도**는 사업주이며 레****는 업체명으로 동일인임

□ 역삼동 오피스텔 임대 관련 보증금 및 월세 입금 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184(북촌로5나길103)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3. 면적 :46.68㎡
4. 임대차구분
   월정임대료 일금 이십만원정(₩200,000/부가세포함)

제2조 **【임대차 기간】**

1.임대차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로한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까지 특별한 조건의 변동이나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월정 임대료】

보증금은 없이 을의 월정 임대료는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4조 **【기타관리비】**

임대료에 전기료, 관리유지비, 수도료 모두 포함된다.

제5조 **【임차인의 의무규정】**

"을 은 임차한 건물과 제반사항에 있어 일반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 내부구조변경 및 임차건물의 제품 야적은 물론 계약당시 제출한 설비목록 외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무효】**

1.을'은 임대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편법 사용케 할수없으며, 본계약상 내용권리 일체를 제삼자에 대하여 질권으로 행사 할 수 없다.

2. 임대료와 관리비를 2회연속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 고의로 본 임대점포를 훼손하였을 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 갑은 통고없이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화재, 도난, 기타사고등으로 갑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케 하였을시 손해에 대한 일체변상책임을 지며, 을은 필히 화재보험 가입 및 방화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제8조 을은 본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한전에 갑에게 사전승락을 득한 후 재계약을

붙임 2 월별 임대료 납부 내역(하나은행)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성숙	신규일	2019/12/31	만 기 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3/31	17:48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0,000,000	29,256,38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2026/05/01	23:15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500,000	236,127,58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2026/05/29	11:29	입금	타행이체	(주)에스앤디파트너	KRW	1,500,000	137,771,623	기업은행 1192	**	****** (주)에스앤디파트너

2. 후보자 소유 주택 또는 건물에 후보자 가족 및 지인의 거주내역(주소, 성명, 후보자 와의 관계, 거주기간, 임대료 납부여부 및 금액, 무상거주시 사유 설명) (최근 20년 기준)

□ 임대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재지	거주 내역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8(근린생활시설)	▶2020. 11. 13. 남동생 한진수에게 268 1~2층 및 269 1~3층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근린생활시설)	▶2020. 10. 16. 제3자(도선미)에게 지하 1층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85	▶2026. 4. 10. 여동생 한명숙에게 지하1층~1층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35-184(근린생활시설)	▶2022. 3. 22. 남동생 한진수에게 임대(보증금 無, 월세 2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1 루카 831 제26층 제2606호	▶2026. 4. 1. 제3자(에스앤디파트너즈, 대표 이희)에게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50만원)

3. 후보자의 언니(한혜숙)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15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입신고 또는 거주유무, 거주기간, 임대계약서, 임대료 납부여부 및 금액, 무상거주시 사유 설명(최근 20년 기준)

□ 후보자의 언니(한혜숙)는 '07. 7. 1.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99. 3. 4.~'24. 12.19. 네팔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07.1. 부터 '26.4.까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전입 신고한 것입니다.

4. 후보자의 동생(한경숙)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서도곡길138번길46 전입신고 또는 거주유무, 거주기간, 임대계약서, 임대료 납부여부 및 금액, 무상거주시 사유 설명(최근 20년 기준)

□ 후보자의 동생(한경숙)는 '13. 11. 20. 양평군 주택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 소유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상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증여세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후보자의 동생(한명숙)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전입신고 또는 거주유무, 거주기간, 임대계약서, 임대료 납부여부 및 금액, 무상 거주시 사유 설명 (최근 20년 기준)

□ 한명숙은 삼청동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 계약서는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	768-******-90107	고객명	한명숙	신규일		만기일	
주민/사업자번호	670620-*******	과 목	저축예금	해지일		계좌상태	활동

2026/04/10	11:23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0,000,000				**	****** 한명숙
2026/05/10	13:06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300,000				**	****** 한명숙
2026/06/10	11:41	입금	대체	한명숙	KRW	1,300,000				**	****** 한명숙

6. 후보자의 동생(한진수)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55 평촌더샵센트럴시티 102동 203호 등기부등본 및 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 후보자 동생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 관련된 자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후보자의 동생(한진수)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55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102동 203호 전세 또는 매입 관련 계약서 사본 및 전세 또는 매입시 후보자금 전적지원 여부 및 지원사유, 증빙서류제출 (통장거래내역등)

□ 동생(한진수)의 매입 관련 계약서 등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후보자소유 건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8 지하1층 임차인이 도선미가 맞는지? 임차인의 성명, 임차인과 후보자 및 후보자 동생(한진수)와 임차인과의 관계 제출

□ 연건동 268 지하 1층 임차인은 도선미님이며, 후보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8.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8 지하1층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는 '월정임대료 일금이 오십만원(₩500,000)'으로 되어 있으나, 제3조2호에는 '을의 월정 임대료는 일금오십만원(₩550,000)'으로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실제 임대료 금액 및 임차인이 후보자에게 매월 말일 지정된 통장으로 보낸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제출 (2020~2026년 6월)

□ 계약서 제3조의 550,000원 잘못 기재한 것으로 제1조에 기재된 500,000원이 맞습니다.

□ 보증금 5백만원, 월 임대료 58만원(부가가치세 5만원, 관리비 3만원 포함)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0-10-16	도**	5,000,000
2020-11-03	도**	580,000
2020-12-02	도**	580,000
2021-01-05	도**	580,000
2021-02-02	도**	580,000
2021-03-04	도**	580,000
2021-04-01	도**	580,000
2021-05-04	도**	580,000
2021-06-02	도**	580,000
2021-07-17	도**	580,000
2021-08-03	도**	580,000
2021-09-03	도**	580,000
2022-02-09	도** 10월	580,000
2022-02-09	도** 11월	580,000
2022-02-09	도** 12월	580,000
2022-02-09	도** 1월	580,000

거래일시	적요	입금액
2022-02-09	도** 2월	580,000
2022-03-02	도** 3월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2-05-05	도**	580,000
2023-09-02	도**	580,000
2023-09-05	도**	2,000,000
2023-10-01	도**	1,120,000
2023-10-09	도**	580,000
2024-04-03	도**11월	580,000
2024-04-03	도**12월	580,000
2024-04-03	도**1월	580,000
2024-04-03	도**2월	580,000
2024-04-03	도**3월	580,000
2024-04-03	도**4월	580,000
2024-05-07	도** 5	580,000
2025-01-14	레****	580,000
2025-02-03	레****	580,000
2025-03-04	레****	580,000
2025-03-04	24년 5-12월	4,640,000
2025-04-03	레****	580,000
2025-05-11	레****	580,000
2025-06-05	레****	580,000
2025-07-03	레****	580,000
2025-08-06	레****	580,000
2025-09-02	레****	580,000
2025-10-01	레****	580,000
2025-11-15	레****	580,000
2025-12-10	레****	580,000
2026-01-15	레****	580,000
2026-02-20	레****	580,000
2026-03-30	레****	580,000
2026-04-28	레****	580,000
2026-05-11	레****	580,000
2026-06-16	레****	580,000

* 입금자 도**는 사업주 이름이며 레****는 업체명으로 동일인임

9. 후보자의 남동생(한진수)가 설립한 사업체(수림재)에 대한 후보자 투자내역 및 회수내역(2023~2026년)

□ 형제자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가족기업(가족 5명 1인당 6백만원씩 출연, 각 지분 20%)으로 ’25. 11. 27. 법인을 지분 비례 청산하였습니다.

10. 후보자동생(한진수)이 설립한 사업체(수림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내역 제출 (2023~2026년)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후보자 동생(한진수)이 설립한 사업체(수림재)와 후보자 재직기관(네이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계약 체결 내역 및 계약서 사본 제출(2023~2026년)

□ 형제들 간 상속 재산 관리 목적으로 설립한 가족기업(가족 5명, 각 지분 20%)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formation8 partnersfund 2 LP 매입경위

□ 질의하신 “formation8 partners fund 2 LP”는 후보자가 제출한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의 기타소득명세서에 표기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기표된 상기 내용은 네이버 유럽사업 대표로 재직하던 기간의 국외 근로소득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내역이 아니며

○ 세무 전문가 문의 결과 “formation8 partners fund 2 LP”라는 명칭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임의의 사업자번호(999-99-99999)를 입력하면서 생성되는 명칭으로 추정됩니다.

13. formation8 partnersfund 2 LP 매입부터 매도까지 연도별 수익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기표된 상기 내용은 네이버 유럽사업대표로 재직하던 기간의 국외근로소득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내역이 아닙니다.

14. formation8 partnersfund 2 LP 수익 관련 납세내역 (국외 납세내역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기표된 상기 내용은 네이버 유럽사업대표로 재직하던 기간의 국외근로소득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내역이 아닙니다.

○ 후보자의 납세 자료는 임명동의안(p.79~p.26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4년 귀속 (주)엘지유플러스 수입(1,500만원)사유 및 증빙자료

□ ㈜엘지유플러스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았으며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9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동 소득금액 중 1,000만원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외 8개 기관에 기부하였습니다.

16. 후보자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신청서류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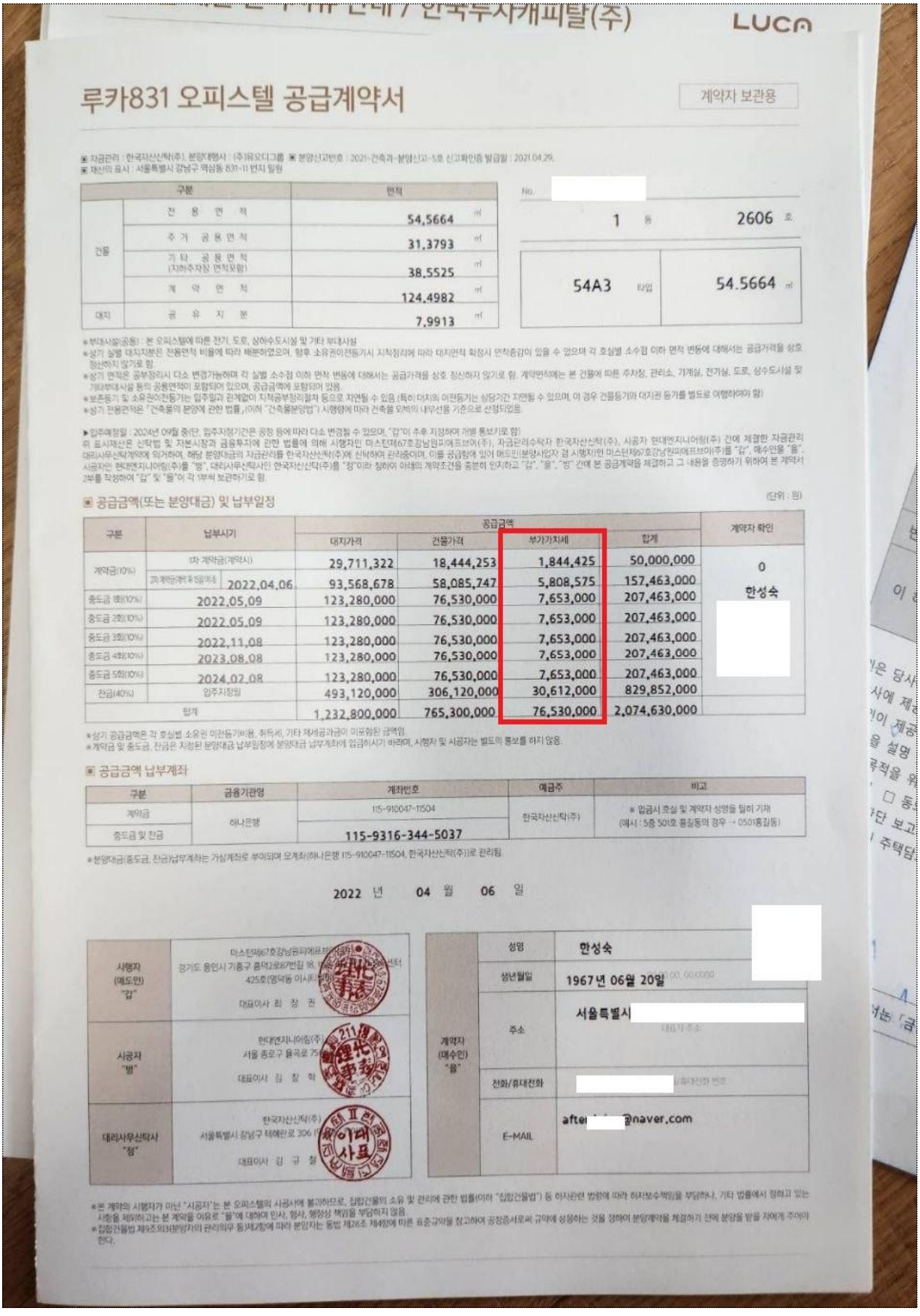
□ 후보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일	2019년 12월 16일
업 종	부동산임대
업 태	부동산업
업 종 코 드	701201
등 록 주 소 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

17. 후보자소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시 임대사업자 등록후 10% 부가세 환급받은 현황 및 증빙서류 제출

□ 후보자의 소득신고 자료는 인사청문요청안(p.79~p.26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부가가치세가 표기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부가가치세 표기)**



LUCA

루카83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계약자 보관용

▣ 자금관리 : 한국자산신탁(주), 분양대행사 : (주)유오디그룹 ▣ 분양신고번호 : 2021-건축과-분양신고-58 신고확인증 발급일 : 2021.04.29.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번지 일원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54.5664	㎡
	추가공용면적	31.3793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포함)	38.5525	㎡
	계약면적	124.4982	㎡
대지	공유지분	7.9913	㎡

No. [redacted]

1 동 2606 호

54A3 타입 54.5664 ㎡

※부대사업(공동) : 본 오피스텔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사업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호실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상기 면적은 공부정리시 다소 변경가능하며 각 실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계약면적에는 본 건물에 따른 주차장, 관리소, 기계실, 전기실,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본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입주예정일 : 2024년 09월 중순.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갑"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위 표시재산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자인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주), 자금관리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자 현대엔지니어링(주) 간에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신탁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한국자산신탁(주)에 신탁하여 관리중이며, 이를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분양사업자) 겸 시행자인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주)를 "갑", 매수인을 "을",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를 "병",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를 "정"이라 칭하여 아래의 계약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갑", "을", "병" 간에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 및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함.

▣ 공급금액(또는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분	납부시기	공급금액				계약자 확인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금(10%)	1차 계약금(계약시)	29,711,322	18,444,253	1,844,425	50,000,000	0
	2차 계약금(계약 후 5일이내) 2022.04.06	93,568,678	58,085,747	5,808,575	157,463,000	한성숙
중도금 1회(10%)	2022.05.09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2회(10%)	2022.05.09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3회(10%)	2022.11.08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4회(10%)	2023.08.08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5회(10%)	2024.07.08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잔금(40%)	입주지정일	493,120,000	306,120,000	30,612,000	829,852,000	
합계		1,232,800,000	765,300,000	76,530,000	2,074,630,000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자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공급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115-910047-11504	한국자산신탁(주)	※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시 : 5층 501호 홍길동의 경우 → 0501홍길동)
중도금 및 잔금		115-9316-344-5037		

※분양대금(중도금, 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115-910047-11504, 한국자산신탁(주))로 관리됨.

2022 년 04 월 06 일

시행자 (매도인) "갑"	마스턴제67호강남원피에프브이(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illegible] 425호(영덕동 이시티)	대표이사 최 창 권	
시공자 "병"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김 창 학	
대리사무신탁사 "정"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illegible]	대표이사 김 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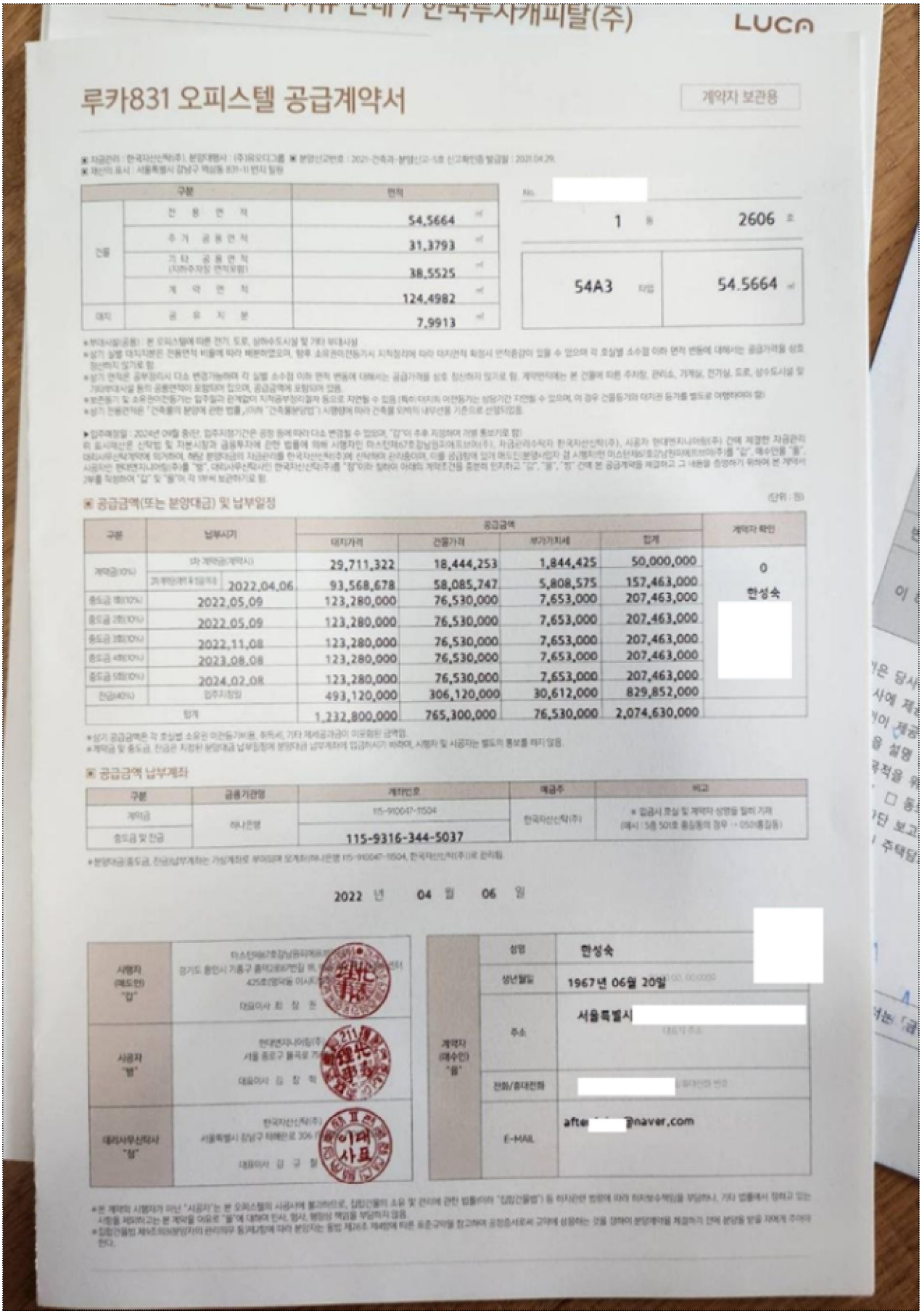
계약자 (매수인) "을"	성명	한성숙
	생년월일	1967년 06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redacted]
	전화/휴대전화	[redacted]
	E-MAIL	afte[redacted]@naver.com

※본 계약의 시행자가 아닌 "시공자"는 본 오피스텔의 사공사에 불과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등 하자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나,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2항에 따라 분양자는 동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18. 후보자소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시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

□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루카83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계약자 보관용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54.5664 ㎡
	추가 공용면적	31.3793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포함)	38.5525 ㎡
	계약면적	124.4982 ㎡
대지	공유지분	7.9913 ㎡

No. 1 동 2606 호

54A3 타입 54.5664 ㎡

▣ 공급금액(또는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분	납부시기	공급금액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자 확인
계약금(10%)	1차 계약금(계약시)	29,711,322	18,444,253	1,844,425	50,000,000	0
	2차	93,568,678	58,085,747	5,808,575	157,463,000	한성숙
중도금 1차(10%)	2022.04.06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2차(10%)	2022.05.09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3차(10%)	2022.05.09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4차(10%)	2022.11.08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중도금 5차(10%)	2023.08.08	123,280,000	76,530,000	7,653,000	207,463,000	
잔금(40%)	2024.02.08	493,120,000	306,120,000	30,612,000	829,852,000	
합계	입주지정일	1,232,800,000	765,300,000	76,530,000	2,074,630,000	

▣ 공급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115-910047-11504	한국자산신탁㈜	*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시 : 5층 501호 홍길동의 경우 → 0501홍길동)
중도금 및 잔금		115-9316-344-5037		

2022 년 04 월 06 일

시행자 (매도인) "갑"	대표이사 최 창 [illegible]	
시공자 "병"	대표이사 김 창 [illegible]	
대리사무신탁사 "정"	대표이사 김 구 [illegible]	

계약자 (매수인) "을"	성명	한성숙
	생년월일	1967년 06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전화/휴대전화	
	E-MAIL	after[illegible]@naver.com

19. 후보자의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명세서 내 후보자의 언니(한혜숙)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추가 공제받은 구체적 사유 설명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언니(한혜숙)은 60세 이상이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공제받았습니다.

유영하 위원

1. 네이버 재직 중 대표적인 성과는?

□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시 매출의 25% 가량을 R&D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며 기술 혁신과 성장에 힘써왔습니다.

□ 특히, AI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한국어 기반 거대언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통해 네이버 AI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 꽃’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중소 판매자들의 스마트스토어 진출, AI 활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중 대표적인 성과는?

1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6.3만여명을 기록했습니다.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최대이며,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동행축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은 '25년 1,200억 달러, '26년 1분기 298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K-뷰티 수출은 21.8억 달러로 '26.1분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동행축제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50% 감축 등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여,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 건을 발송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네이버 재직 중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는 일은?

□ 대표 재직 시 ①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고, ②네이버웹툰 등 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보다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③AI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나갔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 다만,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중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운 일은?

□ 가장 보람된 일은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한 것입니다.

○ 신청서류를 50% 감축하는 등 연 566만 장의 서류 부담을 줄였습니다.

○ 64개로 흩어진 지원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였습니다.

○ '위기알림톡'·'기술탈취 신문고' 등 새로운 지원·신고 창구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AI 혁명, 공급망 대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의 미래 전환을 본격 뒷받침해야 했으나,

○ 취임 직후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외부 변수가 이어지면서 정책 혁신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당시 임기중에 꼭 하고자 했던 정책 및 사업 10가지와 이행사항, 이행률

□ 취임 당시 구상한 주요 과제들을 임기 중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25.10월)을 발표하고, '위기알림톡'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 지원하였습니다.

○ 전통 제조와 데이터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벤처투자를 확대하고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월)을 발표하였고,

- 그 결과,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 대비 3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신청서류를 50% 감축하고, 64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고자, 중소기업 830만 개사를 분야별로 구분해 정책 설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밖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미완 과제는 후임에 충실히 인계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중 본인이 대통령 및 총리에게 제안하거나 성과낸 일 중 정책화된 제도나 제안 내용은?

□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제안하였습니다.

○ K-뷰티,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新방산과 같은 新성장분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 新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각 소관부처*가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K-뷰티) 복지부, 식약처, (기후테크) 기후부, (제약·바이오) 복지부, 식약처, (신방산) 국방부, 방사청 등

○ 부처간 협력을 통해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모두의 챌린지 플랫폼을 통해 방산·기후테크 등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7. 후대에 어떠한 중기부장관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그 소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 기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현장 중심’, ‘실질적 성과’라는 키워드로 기억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정책 신청서류 감축,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일원화 등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힘썼으며,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인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 벤처투자 실적 증가와 같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 지난 10년간 헌혈 및 적십자비 납부 내역은?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지난 10년간 기부 내역 일체

□ 후보자는 2022년 7월 숙명여대에 발전기금 1억원 기탁했으며, 이와 별도로 은혜양로원과 여러 지역 사회복지관 등 1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에 정기 또는 비정기 후원* 중입니다.

* '21년 1,100만원, '22년 400만원, '24년 1,000만원, '25년 1,968만 8천원 등 총 4,468만 8천원

□ 아울러, 후보자는 '26. 6. 1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비영리 구호단체에 5억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10. 지난 5년간 연도별 개인 재산 증감 추이 및 각 사유

□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는 임명동의안(p.31~p.7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의 좌우명 및 평소 소신

□ 특별한 좌우명은 없습니다.

□ 제 소신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12.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영화(국내/외국 각각) 및 각 사유?

□ 최근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와 박소영 작가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다시 나아갈 위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 K-드라마를 좋아합니다.

○ 김원석 감독과 박해영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13. 존경하는 인물(국내/해외 각각) 및 사유?

□ 부모님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ㅇ 지방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도와 어머님이 젖소 목장 등을 하시며 대학 학비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ㅇ 당시, 대학을 많이 가지 못하던 시절이라 제게 더욱 특별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모교인 숙명여대에 기부시 장학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명명 하였습니다.

□ 그 외 특정한 인물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료, 선후배를 존경합니다.

14. 후보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체 수입의 미수금 발생 원인을 기간과 금액, 물건,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건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미수금 발생 원인이 가족간의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수금에 대한 후보자 의지를 밝히기 바람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수림’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기재된 미수금(34,802,842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으로 ’25년말 잔액은 없습니다.

15. 후보자는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남동생에 2억 4,500만원을 빌려준 것 으로 편법증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지적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동생과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약정된 이자를 지급 받고 있는지, 작성했다면 차용증 원본을 첨부하고 이자납부 증빙자료를 제출바라며,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사청문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기 바람

□ 2억 4,500만원 대여의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남동생이 납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했고 종이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다주택자나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자 및 과다부동산 보유자 임에도 국무총리에 지명됐는데, 다주택자 및 과다부동산 보유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인사원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와 같이 다주택 및 건물 3채를 보유한 부동산과다 보유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 피력이나 부처간 조정에 나서지 않고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 계획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 바람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 '06.10.25. 취득 후 약 20년 간 거주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6.5월 매도 완료 했으며

○ 네이버 퇴사 후 연구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해 '22.4월 분양받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은 '26.6.12. 매도 계약(잔금 6.23.)했고

○ '09년 경 가족별장 및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양평군 주택은 '26.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완료.)하였습니다.

17. 후보자는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연건동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한 김한규의원 물음에 “진행하면서 두 건물을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서면답변에서는 “임차인이 상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연결통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힘. 하지만 후보자는 두 건물을 연달아 매입하고 매입 직후 실내공사 및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에 관한 계약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시 업체와 건물 연결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음.

이는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이 공사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해당 연건동 268,269 건물 매입 이후 해당 건물에 적용 혹은 비치하기 위해 현재까지 후보자가 계약자로 진행된 모든 공사(간판,인테 리어,실내외공사등)나 가구,집기류,미술품,소품,커피머신 등 기계 장치 구매 내역 전부, 특히 길연 디자인, momomo, 메이킹위드 등과 맺은 모든 계약을 포함해서 각 내역에 대한 계약서 및 공사도면, 공사계획 및 공사견적서, 조감도 및 평면도 등 관련서류 일체와 공사 외 부분의 견적서 및 견적 관련서류 일체, 이에 따른 관공서 제출서류 일체, 비용 지불 내역(지불자명 포함하며 임차 예정자를

통해 우회 지급했을 경우 임차 예정자에게 돈을 전달한 자료) 증빙자료와 영수증(카드영수증 포함), 세금계산서나 기타 세금처리 관련 증빙을 제출하기 바라며, 해당 공사 및 집기류를 바탕으로 실익을 보고 있는 현재 카페 임차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대한 이체증빙 및 관련 세금처리 내역과 6월 18일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카페의 불법 건축물의 철거 계획일자를 명확히 밝히기 바람

□ 연건동 건물은 동생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2020년 11월 13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부터 공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 건물의 소유자가 후보자여서 공사 계약은 후보자가 업체와 했지만 카페 대수선 과정은 당연히 카페를 운영할 남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 메이킹위드와 체결한 계약서는 별첨1, 세금계산서는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6월 23일(화)에 완료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 계약서

발주자 : 한성숙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2 월 20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2월 24일부터 ~ 2020년 2월 26일 까지

2. 공사금액 : ₩ 16,000,000 (일천육백만원)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및잔금 : ₩ 16,000,000 (일천육백만원) 정산
잔금 : ₩ // (VAT 포함 ₩ 17,600,00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성숙 (인)
573-25-[redacted]

시공자(을) : 메[redacted] 김[redacted] (인)
[redacted]
실 업 실내인테리어
소매 가정용기구

2차철거 및 기초 계약서

발주자 : 한상숙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4 월 2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 2020년 4월 30일 까지

2. 공사금액 : ₩ 110,000,000 (일백십만원 VAT포함)
VAT포함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 : ₩ 110,000,000 (일시지급)
잔 금 : ₩ ( )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상숙 (인) 시공자(을) : 573-25-0[redacted]
메[redacted] 김[reda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redacted]
건 설 업
도매및소매
실내인테리어
가정용기구

855 - 18 - [redacted]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
(율곡로 13가길 8)

공 사 계 약 서

발주자 : 한성숙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69/8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번지&268번지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6 월 4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5 월 1 일부터 ~ 2020년 8 월 31 일 까지

2. 공사금액 : ₩ 185.000.000 (vat 포함 ₩ 863.500.000)

3. 공사 대금 지급 (소계약금 ₩110.000.000)

1차 계약금 : ₩	314.000.000	(vat포함.₩ 345.400.000)
중도금 : ₩	314.000.000	(vat포함.₩ 345.400.000)
잔 금 : ₩	157.000.000	(vat포함.₩ 172.700.00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9. 공사 공정별 내용 : 견적서 별도 제출.

573-25-[redacted]

발주자(갑) : 한성숙 (인) 시공자(을) : 대[redacted] 김[reda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redacted]

건 설 업
도매및소매

실내인테리어
가정용기구

계 약 서

발주자 : 한 성 숙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69 번지

시공사 : [redacted]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redacted]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를 (을)이라 칭하며, (주택) (상가) (사무실)공사를
다음의 조건으로 2020년 9 월 10 일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기간 : 2020년 9월 10일부터 ~ 2020년 10월 25일 까지

2. 공사금액 : ₩ 60,339,400 (vat포함 ₩66,373,340)

3. 공사 대금 지급 : 계약금 : ₩ 50,000,000 (vat포함 ₩55,000,000)
잔 금 : ₩ 10,339,400 (vat포함 ₩ 11,373,340)

4. 공사 사고 책임 : (을)은 공사 중 재해 및 인사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5. 공사 미지급 동의 지급 책임 : (갑)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을)이외의 제3자에게 공사 관련 미지급금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도 지급 의무가 없다.

6. 공사 지연 배상 책임 :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1일당 공사 총액의 3/1000씩 배상 책임을 진다.

7. 공사 후 하자 보수 : (을)은 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공사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 보수를 보증한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수사항은 책임지지 않는다.

8. 추가 공사관련 금액은 20% 내외로 발생가능할 수 있다.

발주자(갑) : 한 성 숙 (인) 시공자(을) : [redacted] (인)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220-10000000-45231526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2-20	16,000,000	1,6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2	20	인테리어 공사				16,000,000	1,6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7,6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623-10000000-43609433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ㅣ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메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ㅣ@daum.net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6-23	214,000,000	21,4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6	23	인테리어 공사				214,000,000	21,4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235,4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0331-10000000-84608401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메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daum.net				이메일	ㅣ@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03-31	100,000,000	10,0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3	31	인테리어 공사				100,000,000	10,0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110,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026-10000000-51515075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73-25-00699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메		성명	김.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sihankim@daum.net				이메일	i@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0-26	314,000,000	31,4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0	26	인테리어 공사				314,000,000	31,4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345,4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110-10000000-70867213

공급자	등록번호	573-25-00699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예	성명	김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이메일	)daum.net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855-18-(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1-10	60,339,400	6,033,94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10	인테리어공사				60,339,400	6,033,94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66,373,34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01104-10000000-70865611

공급자	등록번호	573-25-ㅣ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메(	성명	김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22-6(자곡동)		
	업태	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어,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이메일	n@daum.net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855-18-ㅣ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한성숙	성명	한성숙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8(연건동)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이메일	@naver.com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20-11-04	157,000,000	15,700,000	해당없음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04	인테리어 공사				157,000,000	15,7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172,7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홈택스로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후보자는 지난 해 서면 답변에서 남동생의 안정적인 카페 영업을 위해 해당 건물들을 매입했다고 밝혔음. 각 건물 매입 전 남동생과 어떤 건물을 매입할지 미리 상의해서 준비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 미리 상의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9.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의 최초 상담일은?

□ 상담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 연건동 카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핑계대며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하고 있음. 본인의 건물에 대해 공사 계약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 할 정도의 책임감이라면, 국가 운영 전반을 이끄는 총리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자영업자인 동생이 과거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해 잦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경영애로를 해결하고자 매입했습니다.

○ 처음부터 동생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20.11.13.) 체결 전부터 공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 이유 불문하고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합니다.

21. 2025년도 기타소득 약 51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

□ 네이버로부터 '19년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25. 7. 3.)하여 발생한 행사차익(51억 2천만원)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의 입주가 늦어져 지급받은 배상금(11,820,567원)입니다.

22. 후보자가 남동생에게 임대차 이전에 연건동 건물의 사용 및 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위임장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카페를 운영할 동생이 주도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 남동생이 지급한 연건동건물 현금 임대료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소득신 고가 이뤄졌는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기 바람.

□ 부동산임대사업자(수림)은 임대료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관련 소득은 전부 신고되고 있습니다.

24. 두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두 건물을 하나의 카페 공간으로 통합해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람.

□ 구체적인 계획은 동생이 수립하여 아는 바 없습니다.

25.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편법증여에 대해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청동 35-185번지 건물의 지하1층과 1층 도합 130제곱 미터에 달하는 주택을 여동생에게 보증금 1천만원에 130만원 수준으로 임대해주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헐값 임대를 하고 있음(15m 떨어진 인근 1/2 크기 면적의 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월세 450만원)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해 보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 보증금 1천만원 및 월세 130만원에 임대했으며, 세무 전문가에 문의한 바 적절한 가격으로서 세법상 증여세 등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6.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을 지적 받은 이후에도 6월 19일 현재 해당 농지 및 전원주택에 대해 매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은행에도 매도나 매매를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탐문 결과 후보자의 경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지 해명할 근거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 바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을 강조하며 농지 매각 명령방침을 천명하는 등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인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경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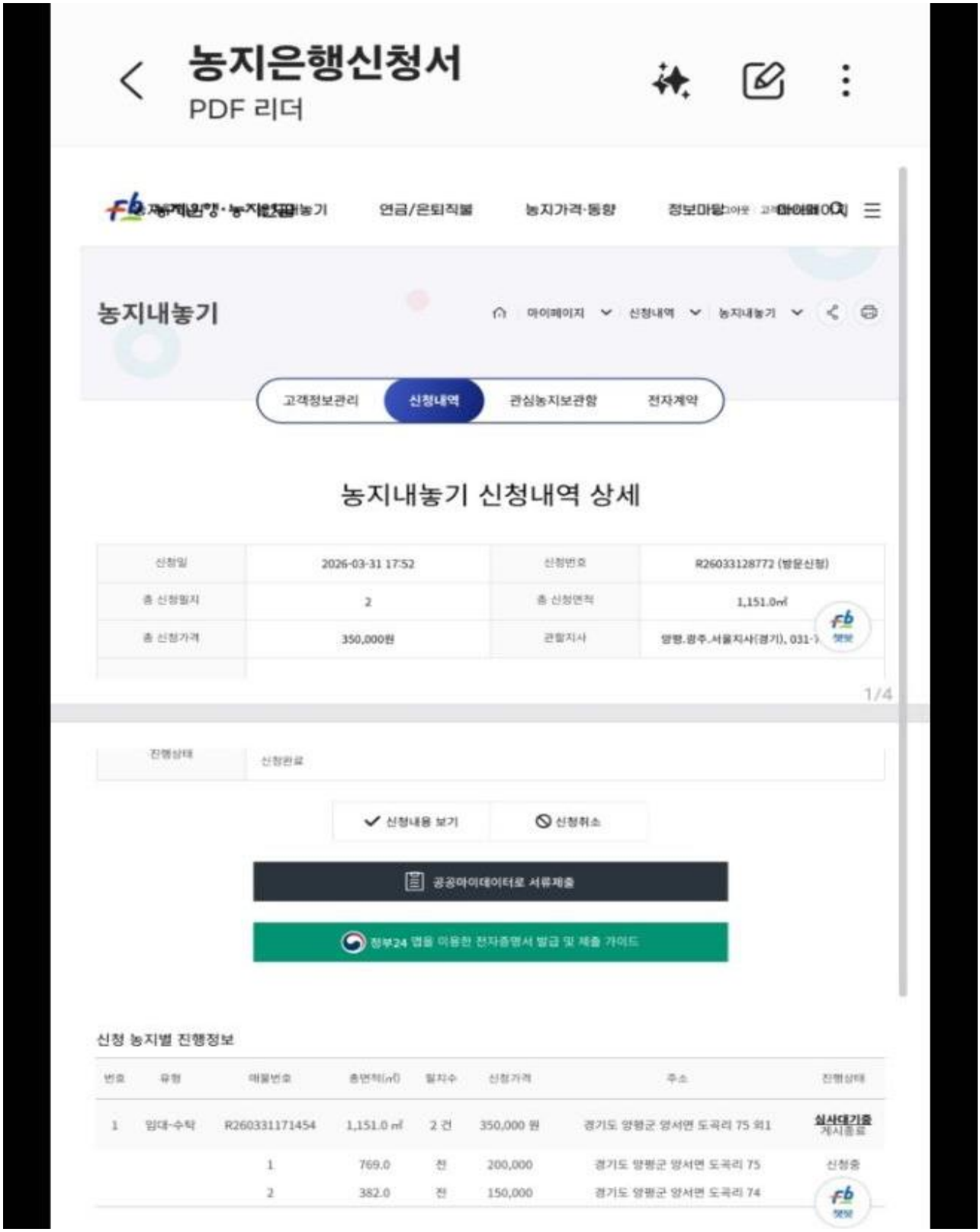
□ 지난 중기부장관 청문회 시 '09년~'10년에 걸쳐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양평군 도곡리 '75-2' 단독주택과 인근 필지 관련, 농지법 위반 지적이 있었으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은 없었으며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26.3.31.)한 바 있으며, 6.16. 매도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증빙서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농지은행 신청서**



27.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6월 19일 현재 해당농지 및 전원주택에 대해 매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은행에도 매도나 매매를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후보자의 경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인지 해명할 근거 증빙자료가 있다면 제시바라며 혹 이전에 매도나 임대 시도가 있었다면 시도 기간과 당시 매물에 대해 책정한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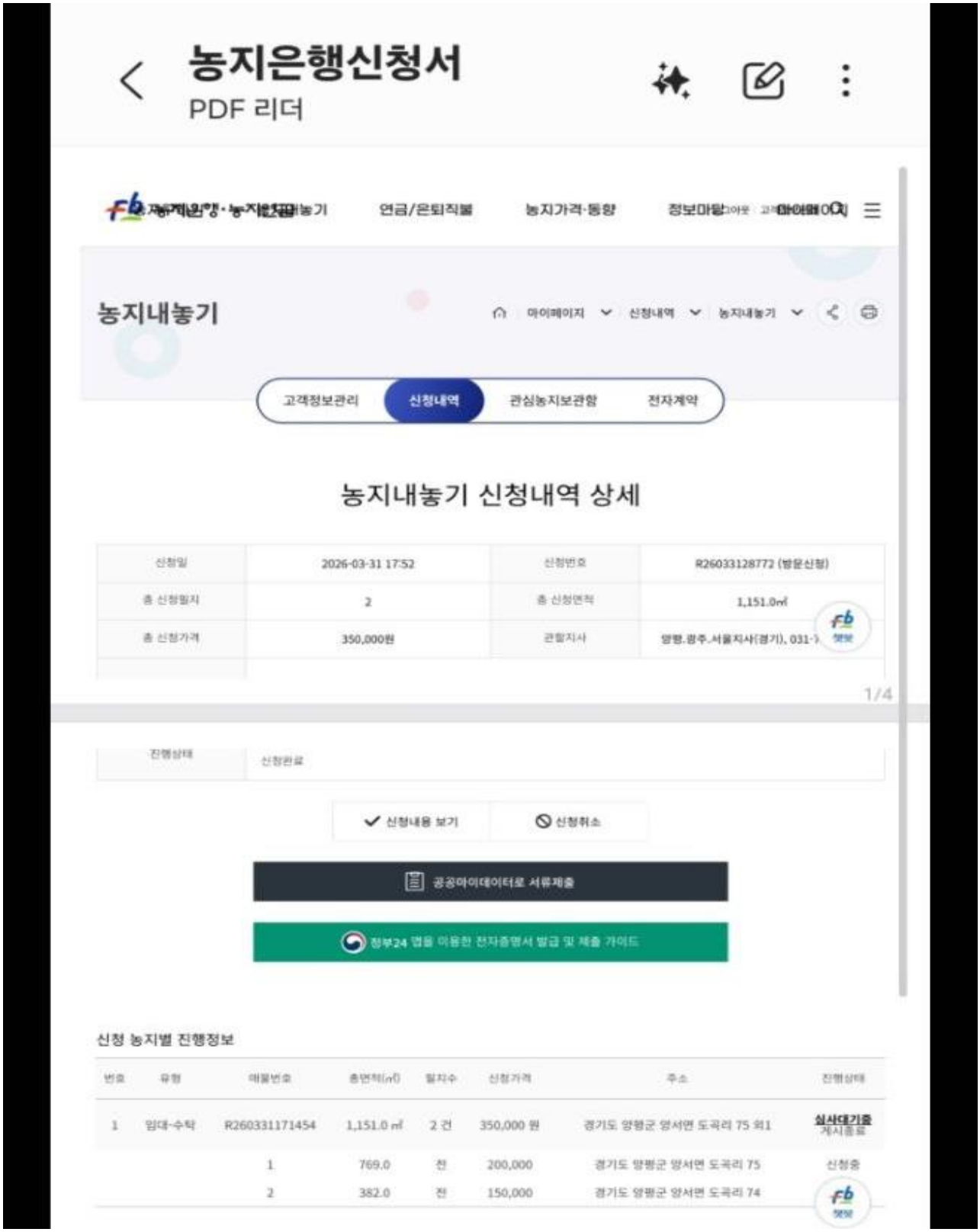
□ 지난 중기부장관 청문회 시 '09년~'10년에 걸쳐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양평군 도곡리 '75-2' 단독주택과 인근 필지 관련, 농지법 위반 지적이 있었으나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은 없었으며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26.3.31.)한 바 있으며, 6.16. 매도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을 체결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증빙서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농지은행 신청서**


농지은행신청서
PDF 리더
연금/은퇴직불
농지가격·동향
농지내놓기
마이페이지
신청내역
농지내놓기
고객정보관리
신청내역
관심농지보관함
전자계약
농지내놓기 신청내역 상세
신청일
2026-03-31 17:52
신청번호
R26033128772 (방문신청)
총 신청필지
2
총 신청면적
1,151.0㎡
총 신청가격
350,000원
1/4
진행상태
신청완료
신청내용 보기
신청취소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제출
정부24 앱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가이드
신청 농지별 진행정보
번호
유형
매물번호
총면적(㎡)
필지수
신청가격
주소
진행상태
1
임대-수탁
R260331171454
1,151.0 ㎡
2 건
350,000 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5 외1
심사대기중
1
769.0
전
200,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5
신청중
2
382.0
전
150,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74

28. 양평군 도곡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창고포함)의 관공서에 제출된 배치도 및 평면도를 제출하기 바라며, 후보자 매입 이후 별도 공사 진행한 내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공사내역 및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 해당 전원주택은 주말농장 목적으로 '09.12월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가 관공서에 제출한 배치도 및 평면도는 없습니다.

○ 매입 이후에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내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9. 후보자는 연건동 건물을 동생과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시기 각각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는 코로나를 사유로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했으나 다른 임차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후보는 연건동 헐값 임대에 대해 코로나19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두 임차인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생에게는 현금 지급을, 다른 임차인에게는 이체를 통해 임대료 지급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 연건동 269번지 지하1층 임차인과는 2020년 10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남동생과는 2020년 11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 동생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좌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30. 양주시 불법 건축물 해소를 위해 진행한 행정적, 법적 조치 내역에 대해 첫 조치 노력부터 현재까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드림

□ 해당 건물 소재 토지는 부친과 윤병준(1937년생)이 공동 소유하여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윤병준을 찾아야 해서 2024년 9월 경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 윤병준을 찾은 후 불법건축물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유)클라스 한결

31. 총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산시켜야 하는 정부 출범 2년차에 지명된 만큼, 국정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함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 총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업무와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3. 후보자가 중기부장관을 1년채 역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내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소임을 맡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4. 후보자 본인이 총리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 시대에 따라 국무총리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대기업 경영자 출신으로서 총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이점과 약점, 약점을 보완할 방안은?

□ 민간기업을 경영하면서 체득한 혁신성과 전문성을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국무총리 업무 수행에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공공과 민간은 언어와 생리 등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균형점을 잘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 총리로서 총체적 비전과 소신, 각오는?

□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인 전환적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년 차에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시대가 저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AI 대전환과 함께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성장,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7. 후대에 어떠한 총리로 평가받고 싶은지?

□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에 일조한 총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38. 후보자의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철학은?

□ 민간에서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면밀히 살피면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먼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행정각부 등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9. 부처·기관 간 이견이 있을 시 어떠한 방법으로 국무조정할 생각인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자의 시각차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40. 총리가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로 비롯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 내부 혁신 등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역대 총리 중 롤모델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 역대 총리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한 만큼, 특정 총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42. 김민석 총리가 추진해던 과제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 및 처리 방안은?

□ 총리로 임명된다면,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께서 다져 주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넓고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43. 현재 행정부 조직구조에 대한 평가와 조직구조를 조정하거나 강화해야 할 부처와 사유, 그 방안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행정부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총리로 임명된다면, 조직구조를 조정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을 비롯해 전문성과 자질보다는 이재명캠프·정부와의 관계에 따른 보은성·선심성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부의 인사기조는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 중기부 후임 장관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 및 이유는?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후임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6.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한 견해는?

□ 국정철학, 정책성과 등을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접소통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7. 최근 이재명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후보자의 향후 계획은?

□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 당정 협의시 의견 대립이 심화될 때 해결 방안 및 견해는?

□ 국무총리가 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49. 최근 발생한 삼성 노조 총파업 추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치 계획은?

□ 동 사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부실관리를 일삼는 선관위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현장 위기대응 실패 등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선거관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선관위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1.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과 권한을 기관 간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도,

○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적 범죄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재설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팎으로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하여,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한 일정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논의는 안보 상황과 사회 질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법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종교계·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는?

□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였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 중대범죄자 및 재범자들에 대한 교화와 처벌 강화 중 어디에 우선을 둘것 인지에 대한 견해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와 상습 재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동시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화와 함께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 민생지원금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26.5.7)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자심리지수',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강화, 다주택자 세수증대 등)에 대한 견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누적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 실거주 1주택 중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동의합니다.

○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적 수요 관리 양 측면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8. 정부·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추진·처리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특검법 발의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9. 부처간 예산 편성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견해는?

□ 예산 편성은,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60. 청년 정책에 있어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현금지원, 도전기회 창출' 중 우선으로 해야할 과제와 추진계획은?

□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분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인 만큼, 일자리·주거·자산형성·도전기회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 자산, 결혼 등 삶 전반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간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월),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 교육·직업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수도권-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는 기업투자, 인재 정착, 주민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는 산업·교통·교육·의료·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의 성장엔진이 실제 기업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인재양성,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실질적인 균형성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62.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은?

□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경제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쟁 심화와 생활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9.1% → ('20) 53.7% → ('24) 54.8%
  전연령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6.3% → ('20) 50.2% → ('24) 50.8%

□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2년간 480~720만원) 지급(수도권 기업은 인센티브 없음)

□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가거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및 민관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대구시 :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주거·생활 등을 복합 지원하는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추진 중

※ 지방은행-청년재단 업무협약('26.2.12)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초기 정착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연 2.6%, 1,000만원) 등 금융지원

63.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향후 방안 및 추진 계획은?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계획은?

□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등 독자적 억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 주요 법안 및 안건 처리에 있어 여야간 협치가 되지 않고 민주당·정부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 총리 후보자로서 국회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 코스피 9000시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일부는 반도체기업을 비롯해 기업과 국민들의 성과라고 하고, 일부는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코스피 9,000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이 오랜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 이 성과는 우리 기업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가 '원팀'이 되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켜낸 반도체 등 기업들의 기술력과,

- 우리 증시의 가능성을 믿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국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코스피 9,000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정부 역시 상법 개정, 주가조작 근절 노력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67.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빚탕감정책으로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와 고신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 저신용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 도덕적해이 우려를 감안하여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을 위해 이자감면, 분할상환, 저리자금 등 지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 가짜뉴스 제재 강화 방안은?

□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법에서'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생산하거나 유포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포되는 동기 중 하나는 경제적 이익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최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5.12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 포털기업의 준언론적 지위 및 책임 부여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 포털기업이 정보유통과 대중의 뉴스 소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맡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70. 총리로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현 대한민국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그에 대한 대책은?

□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간 치열한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에, 독자적인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산업으로 AI를 빠르게 확산함으로써 역동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1. 주 4일 혹은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입장 및 견해

□ 주 4.5일제 등 구체적인 법정근로시간 단축 방식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2. AI 이용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

□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AI 산출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AI 산출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73.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보위협을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견해 및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 관계부처에서 안보, 외교, 경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등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하며, 안보적 문제가 없도록 보안처리 등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장 및 예방·제재 강화 방안은?

□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함께 예방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5. 중대재해법의 사용자 범위에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입장 및 견해는?

□ 공공부문은 안전·보건 영역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 범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선정을 위한 향후 노력은?

□ 현재 문체부에서 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 총리로서 해외순방을 가게되면 가장 먼저 가고자 하는 나라와 사유 및 역할은?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든 방문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78.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원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평소 후보자의 국가안보관은 어떠한지?

□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과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 NSC 위원으로서 시급한 과제 및 과제해결을 위한 역할과 계획은?

□ 현재 안보 환경은 전통적 군사위협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사이버 위협, 경제 안보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공급망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 최근 트라이포럼이 주최한 한미전략산업·안보포럼에 참석한 미국무부 부차관보(데이비드와이레졸)에 따르면, "한미가 지난해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한 바 있음. 실제로 지난 해 팩트시트를 발표했지만 실무그룹 첫 회의는 2026년 6월에서야 첫 회의를 가진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차별' 우려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음.

80-1. 총리 후보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 미국 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 총리가 된다면,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2.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 규제의 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 불공정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소상공인·영세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감안한 여야의 다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80-3. 규제내용과 방식에 동의한다면 관련 법을 어느 법을 통해 추진할 것인가?

□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율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81.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견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해당 기업에 막대한 빚을 떠안겨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알짜 매장 매각 등)으로 연명하게 만드는 이른바 '약탈적LBO(차입매수)'방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기만적 인수합병 방식을 규제하고 기업의 건전성을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지?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될 경우 기업의 중장기 가치와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 정부는 인수기업 및 그 근로자 등에 대한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고 개선방안('25.12, 금융위)
  -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가 인수한 기업의 주요현황 등에 관한 금융위 정기보고 신설, PEF가 기업인수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

○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애의원안·유동수의원안('25.12.31 발의) 등 총 11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 국무총리 임명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2.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와 협력사, 소상공인들이 대금 정산 지연 및 매장 폐쇄로 극심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상황임. 범정부 차원에서 사모펀드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복안과 방안은 무엇인지?

□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통한 새주인 찾기와 경영정상화, MBK 측의 충분한 책임을 지는 자세 등이 중요합니다.

□ 이와 별개로, 정부도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3. 사모펀드가 단기차익(먹튀)을 극대화하기 위해 멀쩡한 대형 유통 매장을 폐점하고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하면서, 수천 명의 마트 노동자들과 외주·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가고 있는 상황임. 후보자는 이러한 사모펀드의 행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후보자가 될 경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될 경우 기업의 중장기 가치와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 정부는 인수기업 및 그 근로자 등에 대한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고 개선방안('25.12, 금융위)
  -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가 인수한 기업의 주요현황 등에 관한 금융위 정기보고 신설, PEF가 기업인수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

○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애의원안·유동수의원안('25.12.31 발의) 등 총 11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 국무총리 임명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4. MBK와 같은 거대 사모펀드가 국내 유통 공룡을 인수해 부실화시키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감독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사모펀드의 부도덕한 자산 유출, 편법배당, 독과점적 횡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 정부는 인수기업 등에 대한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 보고의무 신설, GP 등록취소 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고 개선방안('25.12, 금융위)

○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임명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5.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이 MBK파트너스와 같이 고용을 파괴하고 중소협력사에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상당함. 총리후보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이드라인'을 보다 엄격히 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약탈적 경영을 일삼는 사모펀드에 대한 공공기금 투자를 전면제한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련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 홈플러스가 부실화되어 법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음. 정작 구조조정의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MBK 최고 경영진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슈퍼카 수십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음. 후보자는 이처럼 피해자는 서민인데 책임자는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관리나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예:자구노력의무화, 배당 및 사적 유용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정 관리나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이 충분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방안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논의하여, 중소 ·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 MBK 등 거대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이, 정작 기업 경쟁력 제고나 고용안정이 아닌 경영진 개인공간의 고가 미술품 구입이나 불투명한 법인자금 집행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사모펀드 운용사 및 최고 경영진이 투자기업을 부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해 고가의 사치품·예술품을 구입하거나 편법적으로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특별 세무조사 및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정례화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의 의향은?

□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자산 은닉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8. 가상자산 2단계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여권내 이견으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에 대해서 각각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 [국정과제 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 국무총리의 역할과 존재 이유

□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무총리는 전체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정책성과를 창출하며 국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의 좌우명

□ 특별한 좌우명은 없습니다.

3.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 특정한 인물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료, 선후배를 존경합니다.

4. 존경하는 경영인 또는 공직자

□ 특정한 인물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료, 선후배를 존경합니다.

5.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

□ 국가의 주인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6. 국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 국가와 시장은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하며 경제의 활력과 안정을 동시 달성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며,

○ 국가는 이러한 시장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7.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대한 입장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 성장의 혜택을 서민·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8. 공정과 효율의 균형에 대한 입장

□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공정과 효율은 서로를 견인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로 인식해야 합니다.

○ 효율이 결여된 공정은 시장 활력을 떨어뜨려 나누어 가질 파이 자체를 작게 만들고,

○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효율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 민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게임 룰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9. 국민 통합에 대한 철학

□ 국민통합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 국민을 섬기는 자세, 책임감·사명감, 혁신성, 현안 조율·조정능력, 경청·소통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국무총리가 가장 잘해야 할 역할

□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보좌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1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바람직한 관계

□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법에 규정한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국무총리와 국회의 바람직한 관계

□ 국회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을 넘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정 운영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4. 국무총리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 국무총리와 지방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이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15. 국무총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정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국회 협치에 대한 입장

□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7. 여대야소 상황에서의 국정운영 방안

□ 총리로 임명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18. 사회적 갈등 조정 경험과 사례

□ 네이버 재직 당시,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업자·창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접점을 찾아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 공직에서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성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19. 노사갈등 해결에 대한 철학

□ 현재 세대갈등은 정년연장, 부양부담 증가, 연금 불균형, 자산 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인별로 관계부처·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 세대갈등 해소 방안

□ 현재 세대갈등은 정년연장, 부양부담 증가, 연금 불균형, 자산 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인별로 관계부처·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방안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성장기반을 높여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주도 국가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기업투자,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권역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균형성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2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될수록 비수도권의 산업·일자리·인재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여력도 낮출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지역이 국가성장의 중심 축이 되는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권역별 특화성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기업투자 촉진,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한 공공기관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챙기겠습니다.

24. 사회적 대타협 모델 필요성

□ AI 전환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타협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청과 소통을 통한 타협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25.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총리의 역할

□ 현재도 김민석 총리께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본부 본부장으로서 역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6.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 국무총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자질이 요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국민의 삶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AI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이끌수 있는 혁신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뛰어난 능력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정 동력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책임의식도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27.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위험요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잠재성장률은 '90년대초 8~10% 수준에서 '00년대초 5% 내외 → '10년대초 3%대 → '20년대 중반 2% 내외로 하락

28. 저성장 극복 방안

□ 주력 산업의 첨단화, AX·GX 대전환,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핵심 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반도체・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AI 3대 강국 도약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또한 국가인구전략을 수립하여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29.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

□ 신산업 혁신과 지역 균형성장,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 협·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도 접수·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0. 플랫폼 산업 규제에 대한 입장

□ 플랫폼 산업이 가져오는 편리함, 기술 혁신 등의 이점으로 인해 필수 불가피한 위치에 있지만,

○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편리해지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독과점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

□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 불공정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소상공인·영세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감안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3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 양극화 심화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확산토록 하고,

* 대·중소기업 대미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지원, 수출·수주금융 지원 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 등

○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33.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 소상공인은 790만 개사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등 안전망 확충과 함께,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성장지원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25, 834억원 → '26, 1,145억원)
상권 활성화('25, 40억원 → '26, 378억원) 등

34.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주주환원 제고 등을 통해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 정부에서는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독립성 및 감사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고,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

□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25.12 발표)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

□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결정 방식의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

□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간 상생 기반을 다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 창의와 활력은 적극 뒷받침하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의 결실이 사회 전반으로 균형 있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38.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

□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 산업 구조, 그리고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자산입니다.

□ 경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지원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 AI 3대 강국을 목표로 GPU 등 인프라 확충 및 피지컬 AI 육성, 공공 AX, 국민역량 강화 등에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9. AI 산업 육성 전략

□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AI 독자모델 개발, GPU 26만장 확보, AI기본법·데이터센터특별법 제정 등

□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과 국민 일상생활 등에 AI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적용·확산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외적으로는 ILO 등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글로벌 AI허브를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AI 규범과 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 AI 규제 방향

□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 AI 시대에는 AI·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혜택이 달라지는 등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AI·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공공부문 AI 도입 계획

□ 정부는 AI 도입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전 부처가 활용 가능한 AI 공통기반(AI모델, GPU 등)을 구축하는 등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협업도구(메일·메신저·화상회의 등 네이버웍스, 삼성 브리티웍스), AI Chat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를 4개 부처*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안부, 과기부, 식약처, 예산처

○ 또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AI 챔피언)를 양성하고 각종 경진대회(해커톤 등)를 개최하여 공직 내부의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직자가 직접 프로그램(AI Agent)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부AI 실험실)도 마련 중입니다.

□ 총리가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더욱 가속화 하면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 방안

□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AI 시대에도 필요할 좋은 일자리를 지역과 청년에게 제공하며,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AI가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와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AI 시대에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경험을 쌓도록 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고용활성화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도 세심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4.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은 국민 일상과 경제 전반에 자리 잡으며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 이제는 플랫폼 산업이 시장 독점이 아니라 상생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종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의 혁신 성과가 특정 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생태계 전반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45.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 데이터 역량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AI 대전환시대의 데이터는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 이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각 부처별 공공데이터, 산업·의료 등 민간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같은 규제 등 부처별 정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 다만, 고품질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국가안보 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흔들림 없는 기본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에 두 차례(8.25, 10.29)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양국은 한미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한미 정상이 여러 계기에 접촉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한미간 긴밀한 소통 하에 한미동맹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 한미일 협력에 대한 입장

□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반도 문제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계속해서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48.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

□ 중국은 경제·문화·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특히 한반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 최근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복원된 흐름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 현재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

□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한일 정상 간 빈번한 셔틀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 후보자의 통일관

□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계적·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동결-감축-폐기 순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3.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 동의합니다.

54.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입장

□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관계

□ 오늘날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 특히 공급망, 에너지,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는 경제문제이면서 동시에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 동북공정에 대한 입장

□ 역사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습니다.

57.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8.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한 일정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논의는 안보 상황과 사회 질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범부처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26.6.9. 공포, '26.9.10. 시행)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인구전략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출산·양육의 기본 조건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60. 고령화 대응 전략

□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소득보장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의 삶이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 ‘25.3월 여야 합의로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 재정 건전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연금특위를 비롯한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6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해결 방안

□ 최근의 청년 고용상황 악화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경기적 요인, 경력직 채용관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당장 청년이 겪는 구직과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일경험 등 지원 : ▲K-뉴딜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3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1만명) 등

□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층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계획(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또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많은 청년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2년간 매월 20만원 지급

** (현행) '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54만원으로 지나치게 협소
→ 기준 중위소득 80%(205만원), 100%(256만원) 등으로 완화 검토

64.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입장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5. 종로구 소재 건물의 무허가 연결통로 설치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2025년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 알게 되었습니다.

66. 종로구청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영업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인지

□ 2025년 12월에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계약 체결 후 현재 공사 중이며, 6. 23. 완료 예정입니다.

67. 연건동·삼청동 소재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임대·영업 현황

□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도	영업 현황	비고(참고)
삼청동 184번지	근린생활시설	남동생에게 임차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3-434쪽
삼청동 185번지 지하1층, 지상1층	주택	여동생에게 임차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9쪽
연건동 269번지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제3자에게 임차	임명동의안 부속서류 436-437쪽
연건동 268번지, 269번지	근린생활시설	남동생에게 임차	붙임

68. 2025년 인사청문회 당시 시정을 약속하고도 총리 후보자 지명직후 철거에 착수한 이유와 철거 결정 시점은 언제인지

□ 2025년 12월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6. 23. 완료 예정입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가 늦어진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69. 후보자가 신고한 '주택2채'외에 오피스텔·근린생활 시설 등이 사실상주거 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지

□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습니다.

70. 잠실 아파트 매각에 따른 실제 양도차익 규모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및 시점

□ '06.10.25. 22억5천만원에 취득 후 약 20년 간 거주 후 '26.5.27. 52억원에 매도했으며

○ 다주택 중과유예 시기와 무관하게 금년 2월부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5월경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도한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아직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납부 예정입니다.

71. 역삼동 오피스텔 및 양평·양주 토지의 취득 경위와 취득 자금 출처 및 매각 진행 여부

□ 역삼동 오피스텔은 ’22. 4. 6. 분양(20억 7,463만원) 받았으며

○ 중기부장관 취임 이후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자가 없어 ’26. 6. 12.에서야 15억원에 매도계약(잔금일 6. 23.)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아직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납부 예정입니다.

□ ’09년 경 가족별장 및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평군(도곡리 75-2 등) 주택과 농지를 함께 7.8억원에 매수했으며, ’26. 6. 16. 5억원에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 완료) 체결하였습니다.

□ 양주시(광사동 431-2 등) 농지는 부친께서 소유했던 농지 등을 ’23. 5. 형제들과 협의 분할하여 지분을 상속한 것입니다.

72. 보유부동산의 매각시점이 총리후보자 지명 또는 세제 변경시기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들어선 직후부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73.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이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은 아닌지

□ 거래 상대방이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74. 잠실 아파트에 모친·형제가 무상 거주한기간 동안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 ’07년 경부터 후보자가 형제자매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 후보자가 네이버 유럽 대표로 해외 체류(’22. 3.～)하게 되면서 부득이 후보자 없이 모친께서 거주하게 되셨는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가 ’26. 5월 매도하였습니다.

75. 잠실아파트 매각대금의 실제 귀속주체와 차익배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잠실 아파트 매각대금은 후보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76. 모친명의 재산(양주토지,예금약3.8억등)형성과정에서 후보자와의 자금거래 또는 지원은 없었는지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토지·주식·예금 등)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후보자와 별도 자금 거래·지원은 없었습니다.

77. 잠실아파트의 세대주를 모친으로 변경한 경위와 다주택규제 회피 목적은 없었는지

□ 후보자가 네이버 유럽 대표로 해외 체류('22. 3.~)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세대주를 변경한 것이며, 다주택 규제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78. 동생에게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현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남동생에게 삼청동 35-184번지 건물, 연건동 269 카페를 임대하였고, 임대료는 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 삼청동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2-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2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2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2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2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2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2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2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2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2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2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2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2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2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2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2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2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2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2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2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2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2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2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2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2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2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2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2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2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2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200,000

* 연건동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원)
2021-03-05	보증금	35,000,000
2021-03-05	임대료	2,000,000 *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5백만원과 2백만원 합계인 7백만원이 '21년 1-2월 임대료임
2021-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1-04-30	4월 임대료	3,500,000
2021-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1-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1-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1-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1-09-30	9월 임대료	3,500,000
2021-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1-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2-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2-03-02	2월 임대료	3,500,000
2022-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2-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2-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2-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2-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2-08-31	8월 임대료	3,500,000
2022-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2-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2-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2-12-31	12월 임대료	3,500,000
2023-01-31	1월 임대료	3,500,000
2023-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3-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3-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3-06-01	5월 임대료	3,500,000
2023-06-30	6월 임대료	3,500,000
2023-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3-09-01	8월 임대료	3,500,000
2023-10-02	9월 임대료	3,500,000
2023-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3-11-30	11월 임대료	3,500,000
2024-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4-02-01	1월 임대료	3,500,000
2024-02-29	2월 임대료	3,500,000
2024-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4-05-31	5월 임대료	3,500,000
2024-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4-07-31	7월 임대료	3,500,000
2024-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4-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4-11-01	10월 임대료	3,500,000
2024-12-02	11월 임대료	3,500,000
2025-01-01	12월 임대료	3,500,000
2025-02-04	1월 임대료	3,500,000
2025-03-03	2월 임대료	3,500,000
2025-04-01	3월 임대료	3,500,000
2025-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5-06-02	5월 임대료	3,500,000
2025-07-01	6월 임대료	3,500,000
2025-08-01	7월 임대료	3,500,000
2025-09-02	8월 임대료	3,500,000
2025-10-01	9월 임대료	3,500,000
2025-10-31	10월 임대료	3,500,000
2025-12-01	11월 임대료	3,500,000
2026-01-02	12월 임대료	3,500,000
2026-02-02	1월 임대료	3,500,000
2026-03-01	2월 임대료	3,500,000
2026-03-31	3월 임대료	3,500,000
2026-05-01	4월 임대료	3,500,000
2026-06-01	5월 임대료	3,500,000

79. 동생에 대한 현금지원규모와 시점은 어떠하며, 관련 증여세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16.11.30. 2억 4,500만원, ’26.2.24. 1억원을 남동생에게 차용해줬으며, 대여이다 보니 별도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80. 벤츠차량 공동명의외에도 가족간 차량·부동산등에 소수지분 공동소유 방식이 활용된 사례는 없는지

□ 부친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경기 양주시 토지(임명동의안 34~35P 참조)의 경우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81. 벤츠 차량 공동명의 및 세금 대납의 경위는 무엇이며, 취득세·자동차세 부담 회피 목적은 없었는지

□ 세금 회피 목적은 아니었으며, 중기부 청문회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인지하였습니다.

○ 이에, 남동생과 공동 소유(후보자 99%, 남동생 1%)하던 벤츠 차량은 남동생에게 지분을 전부 증여하였고, 남동생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 예금 약 103억 원의 형성 경위는 무엇이며, 스톡옵션 행사·부동산 매각대금· 근로소득 등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 엠파스 지분매각 소득 약 60억원과 네이버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최근 5년 약 104억원), 기타소득(스톡옵션) 51억 2천만원, 퇴직금 약 40억 6천만원 등 소득이 출처입니다.

□ 또한, 지난 5월 잠실아시아선수촌아파트 매각 대금(52억)으로 인해 예금 보유액이 늘어났습니다.

83.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의 행사 및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실제차익규모와 행사일 및 매도일 등 관련 날짜 그리고 관련 세금신고·납부내역은 어떠한지

□ ’25. 7. 3. 6만주를 행사하였고, 행사 차익은 51억 2천만원이고 세금(원천징수) 11억 2,640만원을 제외하고 39억 9,36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또한, 25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84. 2021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4만 주의 행사 포기 경위와 의사결정 사유는 무엇인지

□ 네이버 퇴직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85. 전년 대비 재산이 약27억원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항목별 증감 내역은 무엇인지

□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매각 대금과 ETF 상승분 등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시지가 기준 27.4억** → 실거래가보다 약 4억 낮은 **52억에 매각(24.6억 증가)**

86. 미국기술주보유·매매시점이 장관재임중 AI·반도체·플랫폼 관련 정책결정 시기와 중첩된 사실은 없는지

□ 미국 주식 8종(임명동의안 37p)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으로 장관 재직 시절 별도 매매한 바 없으며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87.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또는 매각계획은 실제 완료여부 및 시점은 언제인지

□ 국내주식은 중기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전량 매각하였으며, 해외주식·가상자산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88.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 ’21. 1월 비트코인* 0.107171개, 이더리움** 1.50127437개를 구매하였고, ’26. 6. 10.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 ’21.1월 0.107171개 936만원 매입 ⇨ ’26. 6. 10. 991.7만원에 매도

** ’21.1월 1.50127437개 533만원 매입 ⇨ ’26. 6. 10. 368.5만원에 매도

□ 재산신고에 누락된 내역은 없습니다.

89. 장관재임중 본인이 관여한 AI·반도체·플랫폼 관련 정책이 보유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었는지

□ 국내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90. 네이버 CEO 재임당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사건 발생 전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유족과 네이버 임직원들에게 이미 수 차례 사과하였고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91. 네이버 CEO 재임 당시 가해 임원에 대한 처분 과정과 관련 인사의 복귀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는지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92. 네이버 CEO 재임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과·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은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 당시 대표로서 유가족과 네이버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 실제 국회 출석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 차례 사과드린 바 있으며,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93. 유럽사업개발대표 및 고문 재직당시 수행한 구체적 업무와 성과는 무엇인지

□ 유럽사업개발 대표 재직 시에는 프랑스 ‘스테이션F’에 위치한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스페이스 그린’에 입주한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진출 프로그램 ‘D2유럽캠프’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하였습니다.

□ 유럽 현지 시장 커머스 사업에 기술력 전파 및 제휴를 통한 커머스 서비스 관련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였고,

○ AI·로봇 등 기술 분야의 해외 시장 판로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유럽 내 웹툰 서비스 저변 확대 및 유럽 시장 안착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였습니다.

94. 2022년 이후 수령한 상여금 약 18억 원의 산정 근거와 지급 사유는 무엇인지

□ 네이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로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95. 2023년 해외법인 소득을 포함한 네이버 계열사 총 수령액은 얼마인지 네이버CEO 재임 당시 "책임지고 사퇴했다"는 입장과 사퇴이후 네이버로부터 고액 보수를 계속 수령한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지

□ 네이버·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최근 5년('21~'25년, 임명동의안 참조) 소득은 △근로소득 약 104억원 △고문료 약 1억 5,600만원 △기타소득(스톡옵션) 51억 2천만원 △퇴직금 약 40억 6천만원, 총 약 197억원입니다.

□ CEO 사퇴 후 한국 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네이버 유럽사업개발대표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96. 네이버 제2사옥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나 행정상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97. 네이버 제2사옥 신축사업의 추진·설계·시공·자금 집행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사결정 및 결재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동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98. 네이버 제2사옥 인허가와 관련하여 성남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접촉한 경 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동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99. 양평·양주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자경 여부는 어떠하며, 농지법상 자경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 양평군 농지는 '09.12월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 다만, 네이버 대표 재직 기간('17.3~'22.3) 및 유럽 체류 기간('22.3~'25.3)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작했는데 본인 경작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농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신청('26.3.31.)했으며, 현재 매도 계약(6.16.)을 체결(잔금 6.22. 입금 완료)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양주시는 2023년 5월 상속 분할 취득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했지만, 상속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00. 모친 소유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상속 후 인지했다"는 해명의 사 실관계와 최초 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 양주시 토지는 선친의 소유였다가, 그 중 일부를 모친께서 상속받으셨으며 다른 일부는 후보자와 형제자매가 지분 공동소유 방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해당 토지의 이용상태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는 선친이 아셨던 내용으로, 후보자는 상속 후에야 무허가 건축물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01. 모친 소유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하여 부친의 진정서 제출, 변호사 선임 및 법적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해당 건물 소재 토지는 선친과 윤병준(1937년생)이 공동 소유하여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윤병준을 찾아야 해서 2024년 9월 경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 윤병준을 찾은 후 불법건축물 소유자(피고인)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유)클라스 한결

○ 선친의 진정서 제출 등에 대한 내역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모친소유 농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현재 조치 현황은 어떠한지

□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3. 2005년 음란물 유통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지

□ 출국 때마다 재판부로부터 해외출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104. 2005년 음란물유통 사건 당시 검색서비스 본부장으로서 음란물 유통실태를 어느 범위까지 인지·관리하였는지

□ 당시 검색사업본부장으로 엠파스 서비스 총 책임자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 '05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초창기로, 엠파스도 타 사이트와 같이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던 파일 중 노출이 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YWCA가 신고했던 사안입니다.

○ 이에,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 등 다른 인터넷 포털 영화 서비스 리더들도 검찰해 고발당해 같은 사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105. 2005년 음란물 유통사건 관련하여 인사청문준비단이 밝힌 "직접게시가 아닌 전체 책임자로서 처벌받았다"는 해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 근거자료인 약식명령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통망법 위반 약식명령서**

위 등본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05고약22597 (2005형제62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 고 인 1. 한성숙 (670620-2). 회사원
주거 서울 강남구 논현동 34-16 피플하우스 302호
본적 양주시 광사동 542

2. 주식회사엠파스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18 벤처캐슬빌딩
대표이사

2005 지제 388
2006. 10. 31

2005 지제 389
2006. 10. 31

주 형 과 부수처분 피고인 한성숙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엠파스를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한성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한성숙, 주식회사엠파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선택),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

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5. 6. 17.

판 사 김 도 현

266

267

공 소 사 실

피고인 한성숙은 (주)엠파스 소속 검색사업본부의 본부장이고, 같은 (주)엠파스는 인터넷포털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한성숙은

2003. 11. 3.경부터 2005. 3.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의 18 소재 벤처캐슬에 있는 (주)엠파스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www.empas.com의 VOD 성인페이지에 '성인기획관', '일본AV관', '아시아에로관', '최신한국에로관', '성인에니메이션' 등의 제목으로 메뉴를 만든 다음, 주 콘텐츠제공업체(일명 MCP)인 씨디네트웍스(대표이사)를 통해 콘텐츠제공업체(일명 CP)인 씨네로닷컴(대표이사) 등 총 13개의 CP업체로부터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받아 위 포털사이트의 각 메뉴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되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씨디네트웍스와 콘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각 CP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 ', ' ', ' ', ' ', ' ', ' ', ' ' 등 10편 포함하여 ' ', ' ', ' ', ' ', ' ',

267

268

등 음란한 동영상 약 960개를 위에 서술한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눈에 짐작케 하는 작은 영상과 함께 각 게시하고 동 제목이나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여 감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210만원 내지 24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고,

2. 같은 (주)엠파스는

그 사용인인 위 한성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한 것이다.

268

269

106. 2005년 음란물 유통 사건 당시 후보자의 직무·권한과 성인콘텐츠 관리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 당시 검색사업본부장으로 서비스 총책임자였습니다.

107. 2005년 음란물 유통사건 관련하여 동일·유사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포털·인터넷업체 관계자들과 비교해 처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 당시 포털에 음란물을 게시했던 행위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네이버 회사 및 책임자도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 성남FC 후원금 지원결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직위와 관여 범위는 어디까지 였는지

□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동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109. 후보자가 밝힌 "성남FC후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동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110. 당시 네이버의 후원·기부결정 구조와 후보자의 결재·보고 권한은 어떠했는지

□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동 사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111. 성남FC 후원과 제2사옥 인허가간 대가성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당시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관련 사항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12. 네이버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 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의사결정·보고·관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 해당 사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3. 네이버 자사서비스 우대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해당 사안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4. 후보자가 네이버 재임중 네이버가 받은 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 및 행정처분 현황은 어떠한지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네이버의 입점업체수수료·검색노출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제재이력 및 개선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 불공정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소상공인·영세업체 등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감안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117. 총리 취임 시 플랫폼·AI정책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방안은 무엇인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 청문준비 과정에 중기부·국무총리실 인력·예산·시설 동원 여부 및 범위는 어떠한지?

□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통상 총괄팀(국정운영실), 정무팀(정무실), 신상팀(민정실), 공보팀(공보실), 행정지원팀(총무기획관실) 등으로 구성·운영해 왔고, 이번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역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주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 창성동 별관 사무실을 활용해 왔으며, 이번 준비단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비단은 사무실 및 물품 임차, 사무실 공사비, 자료 인쇄 등 인사청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행정 지원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현직 장관 신분으로 본인 인사청문 자료 작성·제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인지

□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지명 후에도 장관 직위를 유지해 온 것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0.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해외 입출국 기록·비자 발급 이력이 어 떻게 되는지

□ 해외 입출국 기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비자 발급 이력은 외교부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 이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약칭: 출입국사실증명, 약호: C322A)

발급번호 (Serial No.) SB-BN-26-067632 |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6.06.18 | 쪽수 (Page Count) 1/2

대상자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Full Name) 한성숙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670620 – 2 / 1967.06.20		성별 (Sex) 여 (F)	
	국가/지역 (Country/Region)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 of Entry / Departure)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2017.03.01	2017.03.04	2017.03.29	2017.03.31
	2017.06.26	2017.07.02	2017.09.26	2017.09.28
	2018.04.11	2018.04.12	2018.05.13	2018.05.18
	2018.06.24	2018.06.25	2019.01.06	2019.01.11
	2019.02.01	2019.02.05	2019.02.28	2019.03.03
	2019.05.31	2019.06.10	2019.08.01	2019.08.03
	2019.11.14	2019.11.15	2019.11.21	2019.11.22
	2019.12.22	2019.12.24	2020.01.18	2020.01.20
	2020.02.21	2020.02.25	2021.11.18	2021.11.25
	2022.05.02	2022.06.14	2022.07.19	2022.10.29
	2022.12.12	2023.03.07	2023.04.12	2023.05.06
	2023.06.09	2023.07.05	2023.08.02	2023.08.05
	2023.08.15	2023.10.18	2023.11.04	2023.11.06
	2023.12.04	2024.01.30	2024.02.15	2024.04.16

다음 페이지 계속(Continued Next Page)...

조회 기간 (Reference Period)	2017.03.01	부터 (from)	
	2026.06.08	까지 (to)	
용도 (Purpose)	공공기관 제출 (To be submitted to a public agenc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한성숙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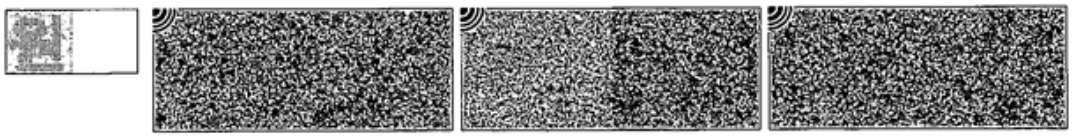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6 년 (Year) 06 월 (Month) 18 일 (Day)

발급 담당자(Officer in Charge) 이선영 (LEE SEONYEONG) 전화번호(Phone No.) 02-731-179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Chief Of Sejongno Branch Office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의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 이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약칭: 출입국사실증명, 약호: C322A)

발급번호 (Serial No.)	SB-BN-26-067632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6.06.18	쪽수 (Page Count)	2/2

대상자 (Person to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Full Name) 한성숙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670620 - / 1967.06.20		성별 (Sex) 여 (F)	
	국가/지역 (Country/Region)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 Departure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출국 (Departure)	입국 (Entry)
	2024.05.30	2024.08.26	2024.09.20	2024.12.13
	2025.01.02	2025.03.31	2026.01.04	2026.01.08
	2026.02.28	2026.03.03	이하빈칸(The End)	

조회 기간 (Reference Period)	2017.03.01	부터 (from)	
	2026.06.08	까지 (to)	

용도 (Purpose)	공공기관 제출 (To be submitted to a public agenc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한성숙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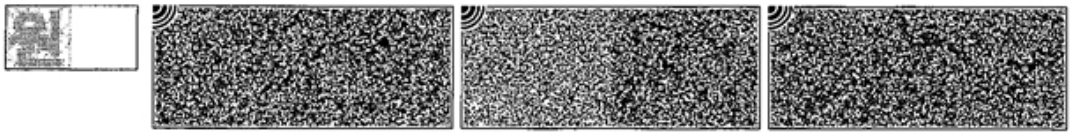
발급일 (Date of Issuance) 2026 년 (Year) 06 월 (Month) 18 일 (Day)

발급 담당자(Officer in Charge) 이선영 (LEE SEONYEONG) 전화번호(Phone No.) 02-731-179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Chief Of Sejongno Branch Office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인



121. 후보자가 해외 체류기간중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보유 및 신고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 후보자는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힌바 있음. 사퇴이후 해외사업대표·고문으로서 4년간 네이버로부터 받은 총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진 것"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네이버로부터 해당 기간 지급받은 ▵국외 근로소득은 32억 7,400만원, ▵고문료는 약 1억 5,600만원입니다.

□ 당시 새로운 경영진이 새롭게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123.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유럽사업 대표로 간 것이 책임이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찰하겠다"고 답변하셨음. 지난 1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성찰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 가지 이상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

□ 중기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항상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24. 네이버 대표 재직시절 "소통을 잘하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본인의 리더십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 네이버 대표 재직시에는 직급과 나이를 불문하고 직접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시에도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저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 2021년 직속 상사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망한 직원이 발생했음. 해당 직원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126.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3년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 이미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음.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인지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 특별근로감독 이후 체불임금 지급 등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127.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12명에 대한 위법한 시간외근로, 산후 1년 미경과 근로자에 대한 무허가 야간·휴일근로가 적발됐음. 이에 대한 대표이사로서의 인지 여부와 책임 범위를 밝혀달라.

□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조직을 보다 세심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8.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이유와 총리의 핵심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본적으로 총리의 역할은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를 지속 성장시키고 모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29. 총리로 취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는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로 비롯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 내부 혁신 등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 네이버 재직 당시 이해진 의장 또는 김상헌 대표의 결정·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총리 후보자로서 과거 근무했던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네이버에서도 혁신과 상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31. 총리 재임중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를 표명할 것인지.

□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정확한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본인의 입장.

□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ㅇ 다만, 법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종교계·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3.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 출범 1주년 개혁 과제집에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도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해외 사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그 판단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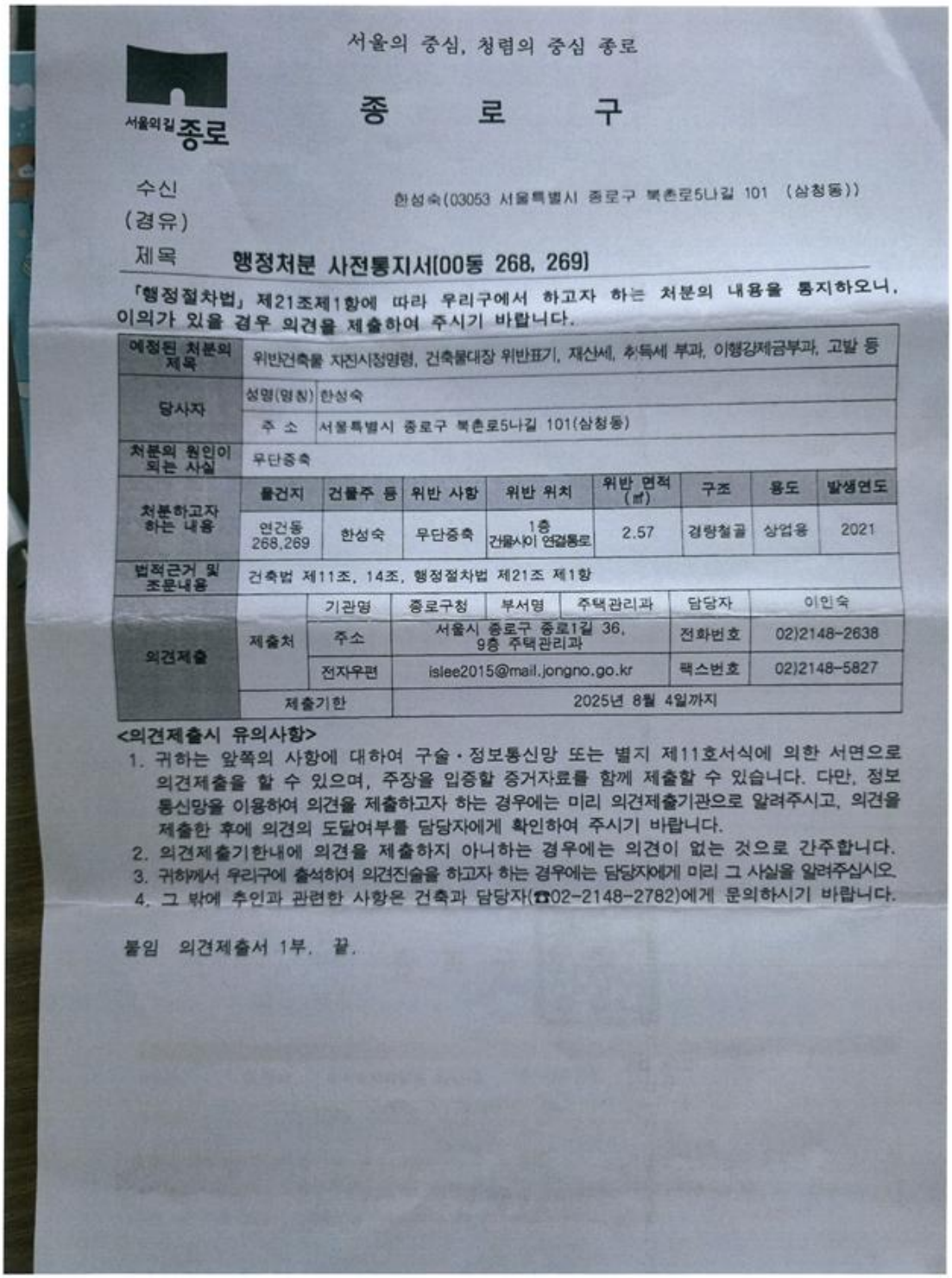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 종로구 연건동 소재 건물의 불법증축(통로 설치) 관련 종로구청의 시정명령 발령일·내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연도별금액·납부일)을 모두 밝힐것. 후보자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종로구청의 시정명령 발령일·내용 관련은 별첨1,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은 별첨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명령 등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00동 268, 269)**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00동 268,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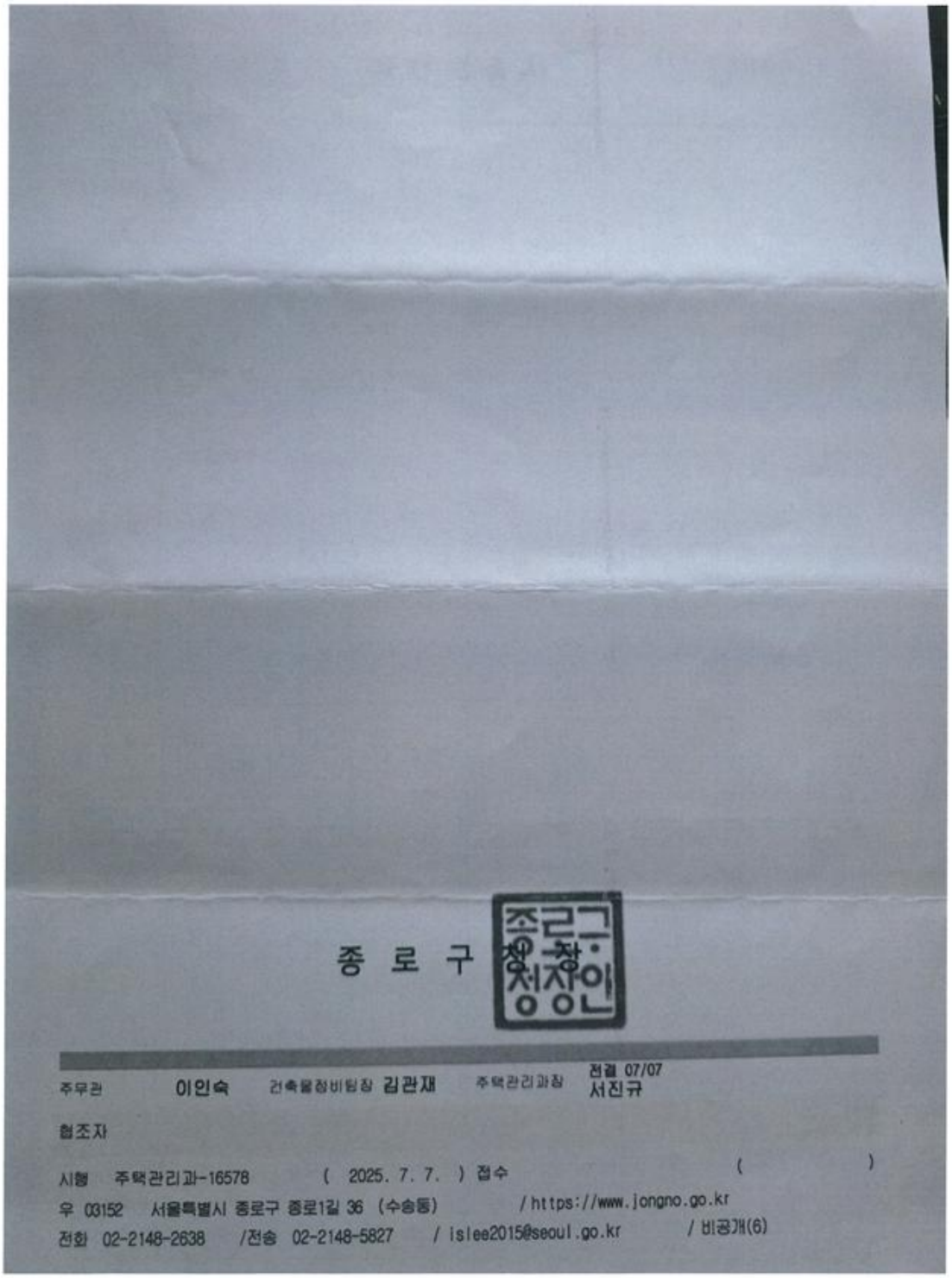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재산세, 취득세 부과,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당사자	성명(명칭)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증축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물건지	건물주 등	위반 사항	위반 위치	위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연건동 268,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건물사이 연결통로	2.57	경량철골	상업용	202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11조, 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구청	부서명	주택관리과	담당자	이인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2148-2638	
		전자우편	islee2015@mail.jongno.go.kr			팩스번호	02)2148-5827	
	제출기한		2025년 8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추인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 담당자(☎02-2148-27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종 로 구
종로구청장인
주무관 이인숙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전결 07/07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16578 (2025. 7. 7.)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8 /전송 02-2148-5827 / islee2015@seoul.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동 268, 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의 자진시정(철거, 추인 등)을 명하니, 2025. 10. 10.까지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우리구 주택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법건축물 내역

물건지	건축주 등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도	발생년도	비고
연건동 268,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건물사이 연결통로	2.57	경량철골	상업용	2021	건축법 위반

3.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고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시 위반면적이 포함되며 시정기간 내 철거하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위 기한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필요시 공익을 위하여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나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을 철거하게 한 후 귀하로부터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기고 공사 계속시 건축법 제108조, 제111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정기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진술하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종 로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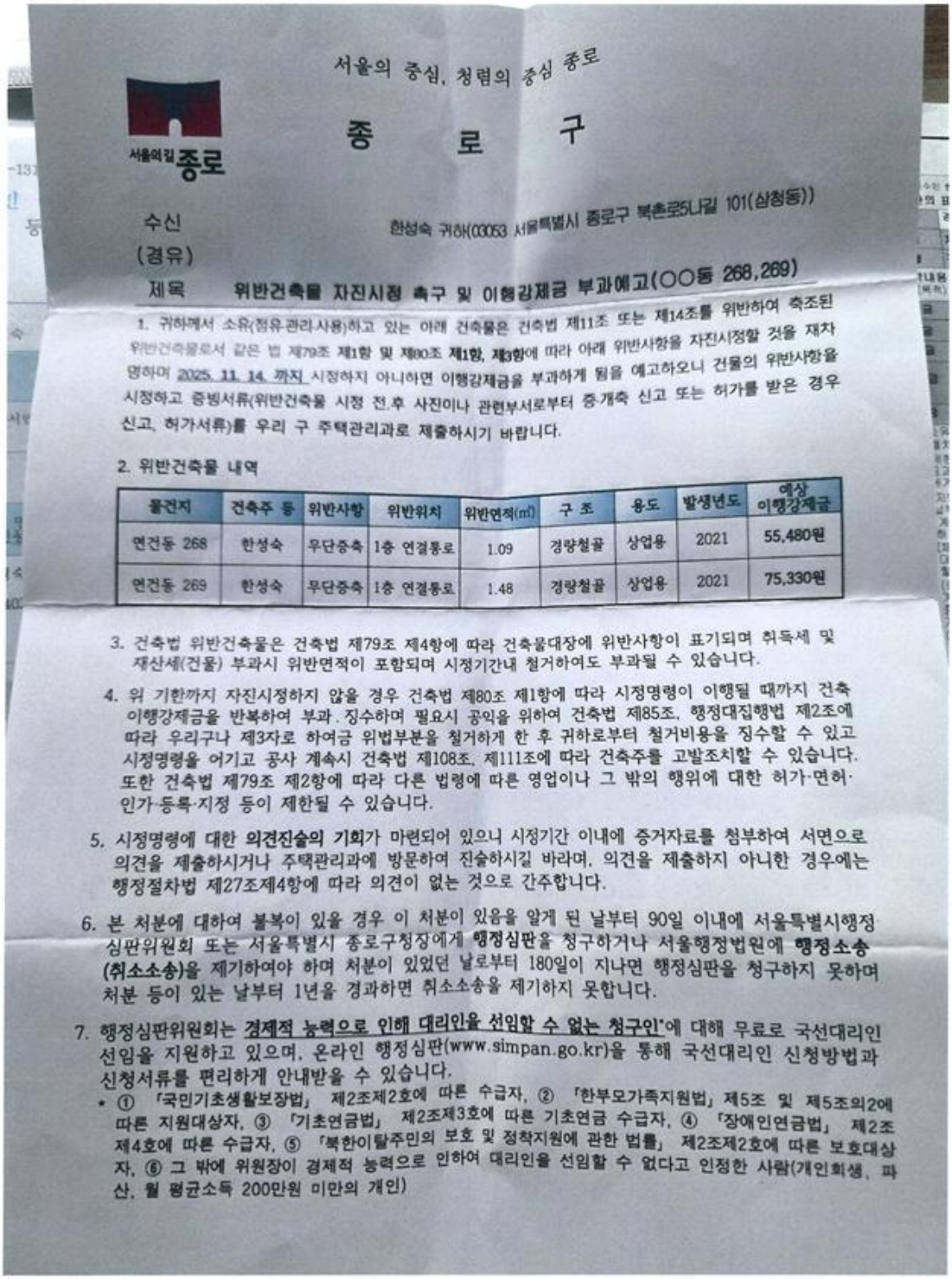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09/09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23255 (2025. 9. 9.)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 귀하(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동 268,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며 2025. 11. 14. 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예고하오니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위반건축물 시정 전·후 사진이나 관련부서로부터 증·개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허가서류)를 우리 구 주택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 내역

물건지	건축주 등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도	발생년도	예상 이행강제금
연건동 268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09	경량철골	상업용	2021	55,480원
연건동 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48	경량철골	상업용	2021	75,330원

3.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시 위반면적이 포함되며 시정기간내 철거하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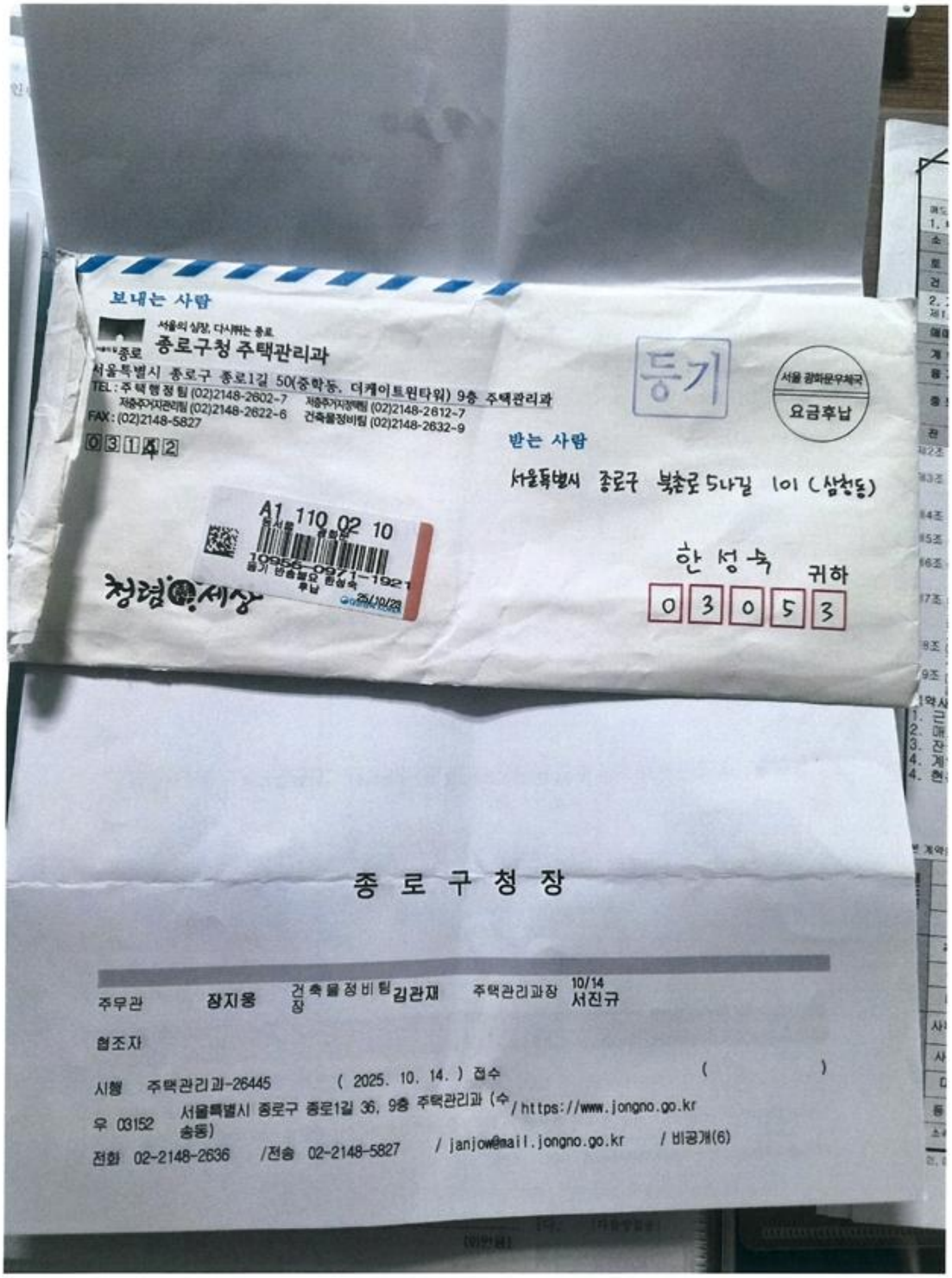
4. 위 기한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필요시 공익을 위하여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나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을 철거하게 한 후 귀하로부터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기고 공사 계속시 건축법 제108조, 제111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정기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택관리과에 방문하여 진술하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보내는 사람
서울의 심장, 다시뛰는 종로
종로구청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주학동, 더케이트윈타워) 9층 주택관리과
TEL : 주택행정팀 (02)2148-2602~7
재중주거지관리팀 (02)2148-2622~6
재중주거지정책팀 (02)2148-2612~7
건축물정비팀 (02)2148-2632~9
FAX : (02)2148-5827
03142
등기
서울 광화문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청렴세상
종로구청장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김관재
주택관리과장 10/14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26445 (2025. 10. 14.) 접수 (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9층 주택관리과 (수송동) / https://www.jongno.go.kr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서울의 중심, 청렴의 중심 종로

서울의길 종로

종 로 구

수신 한성숙 귀하(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삼청동))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동 268,269)**

1. 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에 따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이행강제금은 아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내용

물건지	건물주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	구 조	용 도	발 생 연 도	예상 이행강제금(원)
연건동268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09	경량철골	상업용	2021	55,480원
연건동269	한성숙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1.48	경량철골	상업용	2021	75,330원

나. 납부기한 : 2025. 12. 31.까지

다. 납부방법 : 은행납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전용계좌납부(고지서 상단 좌측)
전자납부(etax.seoul.go.kr), ARS납부(1599-3900)

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

□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연건동268)

① 1㎡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② 시가표준액 가산률/감산률	×	③ 위반 면적(㎡)	×	④ 법정 요율	×	⑤ 소규모 주택감경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⑦ 가중/감경 사유	=	⑧ 이행강제금
509,000		1		1.09		0.5		해당없음		0.8		0.25 (0.75 감경)		55,480원

① 2025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②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가산/감산사유

③ 위반건축물 위반면적

④ 건축법 제80조제1항

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1항

⑥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⑦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가중사유), 제115조의4(감경사유)

※ 감경기간 3년 도과 후(2028.9.9.) 감경 제외

⑧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연건동269)

① 1㎡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	② 시가표준액 가산률/감산률	×	③ 위반 면적(㎡)	×	④ 법정 요율	×	⑤ 소규모 주택감경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⑦ 가중/감경 사유	=	⑧ 이행 강제금
509,000		1		1.48		0.5		해당없음		0.8		0.25 (0.75 감경)		75,330원

① 2025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②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가산/감산사유

③ 위반건축물 위반면적

④ 건축법 제80조제1항

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제1항

⑥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⑦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가중사유), 제115조의4(감경사유)

※ 감경기간 3년 도과 후(2028.9.9.) 감경 제외

⑧ 이행강제금

붙임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 각 1부. 끝.

종 로 구 청 장

주무관	장지웅	건축물정비팀장	代이동석	주택관리과장	12/16 서진규
협조자					

시행 주택관리과-33741 (2025. 12. 16.) 접수 ( )

우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1층 주택관리과 / https://www.jongno.go.kr
(중학동)
전화 02-2148-2636 /전송 02-2148-5827 / janjow@mail.jongno.go.kr / 비공개(6)

붙임 2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바르게 걷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종로구 JONGNO-GU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세외수입 고지서

※ 고지금액을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 적발내용 :무단증축/ 1층 연결통로 / 1.09 / 경량철골 / 상업용 / 2021
- 위반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비고 :2025년 신규
- 부과면적 :1.09

발급일자 : 2025.12.18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수납부서 : 주택관리과
담 당 자 : 장지웅 02-2148-2636

종로구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110-2-20-25-614771143

납부번호 기관번호 1100192 세목 50288301 납부년월기 2025122 부과번호 0029300

납 부 자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03053]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8 (이화동)

물 건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6-1 (연건동)

[부과일자: 2025년 12월 16일]

납부금액	
금 액	55,480
구 세	0
합 계 액	55,480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2 월8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5.12. 30
광 역 징 수 팀

납부기한 2025.12.31 까지 55,480 원
까지 원 (상시수납가능)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바르게 걷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종로구 JONGNO-GU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한성숙 귀하

03053

세외수입 고지서

※ 고지금액을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 적발내용 :무단증축 / 1층 연결통로 / 1.48 / 경량철골 / 상업용 / 2021
- 위반내용 :건축법 제11조, 제14조
- 비고 :2025년 신규
- 부과면적 :1.48

발급일자 : 2025.12.18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수납부서 : 주택관리과
담 당 자 : 장지웅 02-2148-2636

종로구 건축이행강제금[부과고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관용

전자납부번호 11110-2-20-25-614772035

납부번호 기관번호 1100192 세목 50288301 납부년월기 2025122 부과번호 0029317

납 부 자 한성숙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나길 101 (삼청동) [03053]

부과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69 (이화동)

물 건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6-1 (연건동)

[부과일자: 2025년 12월 16일]

납부금액	
금 액	75,330
구 세	0
합 계 액	75,330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12 월18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5.12. 30
광 역 징 수 팀

납부기한 2025.12.31 까지 75,330 원
까지 원 (상시수납가능)

※ 납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담당자 장지웅 02-2148-2636 (발급부서 : 주택관리과)

136. 위 시정명령이후 현재까지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철거 완료 예정일을 밝힐 것. 총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를 이행할 것인지.

□ 2025년 12월 철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6월 23일(화)에 완료 예정입니다.

137. 동생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준 2억4500만원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원금·이자 상환 내역, 관련 세금 신고·납부 내역을 모두 설명해달라.

□ 남동생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8. 동생에게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가 지금까지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 후보자 계좌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139. 보유중인 종로구소재 건물(현재 동생이 카페로 운영중인 건물포함)을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가족이 아닌 임차인에게 동일한 기준의 임대료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 과거 코로나 시기 경제 상황, 자영업자 여건 등 고려해 당시 시세에 맞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책정했으며, 동생에게도 적정 임대료(350만원)를 받고 있으며, 제3자에게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 중입니다.

140.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또는 매각 의무를 이행했는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보유중이던 국내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외 주식도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141. 해외주식(네이버관련포함) 보유현황과 그에 대한 이해충돌 검토여부를 밝힐 것.

□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외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142. 장관 재임 중 AI·반도체·플랫폼 관련 정책·예산·인허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지.

□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부처로서 정책과 예산사업은 있으나, 인허가 의사결정과 같은 규제 정책은 해당 법령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책과 예산을 통한 AI 진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및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장관 재임 이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AI 위주로 강화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26년 8천억).

구 분	과 제	'26.예산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2,113억원
창업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투·융자 자금 지원 및 인력 양성	3,938억원
지역	지역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원스톱 지원	1,809억원
정책전달	중기통합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OpenData x AI 챌린지 기업 지원·재무 정보 기반 사업 추천 및 신청서 작성 보조	225억원

143.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 약 5천명의 개인정보(창업아이디어·심사평 포함)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정부를 믿고 도전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44.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은.

□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 현 정부출범이후 네이버출신 인사들의 정부요직 진출 현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6. 본인의 총리지명이 이러한 인사 편중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 총리 취임시 온라인 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 네이버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정책을 부처 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 2015~2016년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우회 후원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비스총괄 부사장으로서 해당 후원결정 또는 성남제2사옥 건축허가 관련 사안을 보고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있는지.

□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149. 위 사안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김상헌 전 대표(후보자를 직접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와 관련해, 후보자가 차기 대표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인수인계나 설명을 받았는지.

□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관련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150. 위 재판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출신인 본인이 총리로서 네이버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이해충돌 우려를 낳지 않는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

□ 정부의 플랫폼 정책은 네이버 등 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 입시, 취업, 자산형성, 내집마련, 출산/육아로 대표되는 생애 전주기에서 청년세대들이 겪는 좌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근 채용시장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 AI를 비롯한 산업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청년들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그동안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주거 등 389개 과제, 30조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년들이 실체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25.12.26)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26.4.28)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구직 청년, 재직 청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또한,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52.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근 청년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청년(15~29세) 고용률 : ('26.5) 43.8% (2년째 하락중)
20·30대 '쉬었음' 청년 : ('26.5) 64.9만명 (20대 36.8만명, 30대 28.1만명)

□ 최근의 청년 고용상황 악화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경기적 요인, 경력직 채용관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당장 청년이 겪는 구직과 취업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을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일경험 등 지원 : ▲K-뉴딜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3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1만명) 등

153.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단순히 법정 정년만 연장되는 경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한은, '25) 청년 고용률 6.9% 감소, 고령자 1명 증가시 청년 1명 감소
(노동연, '24) 300인 이상 청년 고용 감소(1,000인 이상 11.6% 감소)

□ 노동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 해나가는 한편,

○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청년 고용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54.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정년 연장은 숙련 고령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잠재성장 회복, 고령자 소득공백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나,

○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5.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논의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 일률적인 정년연장 대신 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논의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현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논의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세대의 좌절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단순히 법정 정년만 연장되는 경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한은, '25) 청년 고용률 6.9% 감소, 고령자 1명 증가시 청년 1명 감소
(노동연, '24) 300인 이상 청년 고용 감소(1,000인 이상 11.6% 감소)

□ 노동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 해나가는 한편,

○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청년 고용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59.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실거주 1주택 중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동의합니다.

○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투기적 수요 관리 양 측면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1. 로또 청약으로 변질된 청약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초 분양가에 비해 과다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2.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층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계획(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26년) 공공분양주택 2.4만호, 공공임대주택 4.3만호 등

□ 또한, 현재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154만원) 이하 청년에게 지원되는 월세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205만원), 100%(256만원) 등으로 완화 검토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 주거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3. 공공주택 위주의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는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를 모두 아우르는 공급 물량·속도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민간의 분양주택 공급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164.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보유세 혜택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5. 장특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 및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기본적으로 실거주한 1주택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166. 보유세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비용을 높이고, 정부의 세입만 높인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거주하지 않는 단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혜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향후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67. 1,500원이 넘는 고환율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의 환율상승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 코스피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로 인한 달러 환전 수요가 가중되면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68. 확장 재정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지금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 현안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 저출생·양극화 등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국가 재정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재원을 집중하여, '재정 - 경제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9.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향후 반도체 업계 호황 등으로 발생되는 국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의 논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적으로 환수하거나 배분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시범사업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6.5월말: 인구 31.9만명→33.4, 4.7%↑ / 가맹점 1.4만개소→1.6, 13.7%↑

○ 최근,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에도 많은 지방정부가 신청*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 추가공모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74.6%) 신청, 7개 군 최종 선정

○ 시범사업('26~'27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1.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26.5.7)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자심리지수',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2.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한도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군별 비중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부의 대물림 심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소득과 자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주거, 고용 등의 분야에서 격차를 축소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고,

○ 서민·소상공인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안정과 포용적 금융 지원 체계를 촘촘히 보강하여 자산 형성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74. 12%가 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저임금 미만율은 인용하는 기초통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만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 국무총리가 된다면 해당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경제·사회 여건, 고용·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6.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7.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호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갖추어 나가게끔 지원하겠습니다.

178. 장관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한 중소기업의 민원사항 중 실제 해결에 이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선착순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접수 개시 후 단기 마감되는 문제의 개선요청이 있었고,

○ 정해진 기간 신청을 받은 후 정책 우선도 평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26.4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 신용도·정책자금 수혜이력·소재지·업력 등을 종합 평가 후 선정

- 그 결과, 기존 대비 저신용자 지원이 약 67%p 높아졌고,

- 정책자금 미수혜자 선정 비중이 93.1%에 이르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자격도 개선하였습니다.

○ 신규 창업자에 더하여 기 창업자·재외국민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 이를 반영하여 창업 3년 이내인 자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이종 창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자메일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79.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으며, 특히 희토류,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해 전구체의 국내자급률 확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제임. 핵심광물 공급망을 담당하는 초우량기술기업(고려아연, 포스코등)이 단기차익 실현이 목적인 사모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인수 표적이 되어, 미래를 위한 장기적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가 축소될 위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후보자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급망 핵심 기업의 경영권이 사모 펀드에 의해 흔들리는 현 상황을 안보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며, 범정부차원의 공급망 보호 대책은?

□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는 특정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가 국가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국가 핵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 총리가 된다면, 국가 핵심품목 지정·관리, 전략 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강화,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0.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MBK)의 주요 투자 기금 (LP)에 중국 국부펀드(CIC)를 비롯한 해외자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안보 위협이 우려되는 외국자본의 자국핵심 기업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임. 후보자는 국내 사모펀드를 우회통로로 삼아 대한민국의 비철금속 및 핵심광물 제련기술을 장악하려는 외국계 자본의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외자 출처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핵심광물 및 비철금속 제련 기술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분야이므로,

○ 관련 기업의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국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와 투자활성화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1. MBK의 홈플러스 인수 합병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잡은 후 우량재산(기술)매각, 지분쪼개기 매각, 또는 해외로비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여 자산가치를 빼내갈 가능성이 농후함. 후보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꼼수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사후 감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향후 해외 매각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 심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등 현행 산업기술보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 유출을 예방하면서도 건전한 투자와 기업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2. MBK는 과거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미래 가치 제고보다는 알짜 매장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등 약탈적 경영 행태로 큰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이러한 단기현금 쥐어짜기 방식이 수조원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국가기간·제조산업(제련 및 신소재분야)에 그대로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 후보자는 홈플러스에서 나타난 사모펀드의 폐해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 및 산업부 등과 협의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진입 가이드라인 및 제한 조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 국가 전략산업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 핵심기술 보호,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유지, 공급망 안정, 지속적인 투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 금융위·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책임있는 투자 원칙과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83.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금이며,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사모펀드는 그에 걸맞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응당 져야 함. 그러나 국민연금의 돈을 받은 사모펀드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핵심전략산업을 공격하고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적대적 M&A에 나서는 것은 자금의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임. 후보자는 국민연금 등 국가 공공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개정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적 공익을 해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금 출자를 즉각 철회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련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

1.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중 ‘경제·산업도약을 위한 신산업규제 재설계’를 제시하였고, 2026년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출범시키고 국무조정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부처간 책임미루기와 ‘덩어리규제’ 잔존으로 현장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음. 국무조정실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관장하는 만큼, 후보자는 부처가 규제 정비를 미루지 못하도록 어떤 이행점검·책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특히 AI·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덩어리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각 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 규제정비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 '덩어리 규제'는

○ 기업 현장 간담회, 쟁점 분야 관계부처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신산업 분야는 속도와 선제적 대응이 생명인 만큼, 샌드박스 고도화를 통한 우선 허용, 핵심 신산업 로드맵을 통한 쟁점규제 사전 검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현행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 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출산·돌봄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는 고용노동부·중기부·보건복지부에 걸친 구조적 과제로, 부처간 조율 없이는 해소가 어려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출산·돌봄·재해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조율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산·돌봄 등 지원은 국가적 책무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업과 조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해외인재 유치와 더불어 해외인재들과 국내유수 대학 청년들이 함께 기술 창업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함.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는 국내유수 대학이 밀집한 청년 인재밀집 지역임에도 대학 인재들의 창업전환율이 낮고, 관내 창업보육 인프라 수준은 열악하다는 평가임. 공항철도 등 교통편의성,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가 인재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서대문구는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인재 유치에 매우 유리하므로 적극적인 창업 인프라 투자 필요하다고 봄. 연세대·이화여대·명지대 등을 연계해 서대문구를 청년 기술창업 중심 시범특구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의견은? 서대문의 입지조건을 반영해서 기술창업중심 시범특구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람.

□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방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지역특화발전 특구」 등 특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서대문구가 대학 기술창업 특화 모델을 구체화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 서대문구의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술창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우리 벤처생태계는 정부가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정작 민간자금은 유입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1차 펀드 공급 이후 자금조달의 연속성이 끊길까 우려하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2차 운용계획'의 신속하고 정교한 집행이 필수적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자금을 시장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의 높은 정부정책자금 의존도를 고려할때, 이번 2차 운용계획의 자금들이 중간운용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내야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구상하신 구체적인 집행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을 마중물로 금융권·연기금 자금(75조원) 등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프로그램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5. 헌정사상 두번째 여성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은 민간에 강제하기에 앞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기관과 공직사회부터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들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관 경영평가의 '효율성 지표' 하락을 우려하거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기존 직원들의 보수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이 경영평가나 총인건비에 감점 요인이 되지 않도록하는 법안(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임. 공공부문이 일·가정양립 모델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이같은 '공공기관육아휴직사용률 제고 및 경영평가·인건비 불이익 근절대책'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위원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25년도 중기부 국감 당시, 김동아 의원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채용 조치 지적

○ 아울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26.3)하신 ‘공공기관 육아휴직 눈치 방지법*’에 대해서도 입법 상황을 잘 챙기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 지출이 인건비 산정 및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6.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이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 조합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의 합병, 구주인수, 벤처 펀드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의 중간 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 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재경부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재설계 또는 예산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의한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투자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재경부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재설계 또는 예산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집중 및 지방소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수도권 지역 외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지원 체계가 기관별로 분산·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청년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등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현재 정부에서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연구·집행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재단을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취임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사 사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16년) 시, 기존에 민간은행이 출연한 비영리재단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업무·권리(재산 포함)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10.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해 주고 있음. 정부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납입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ISA를 도입할 계획이며, 마찬가지로 신규 도입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의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를 함께 활용하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청년형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ISA 신설을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중복가입 허용 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 후보자로서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책무에 임할 것인지?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저를 지명하신 이유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2. 6월19일 유럽·G7 순방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양극화를 부른다"며 주식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음. 또한 반도체 대장주 중심 쏠림현상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는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양극화, 반도체 쏠림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 구상·계획은?

□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증시에 AI·반도체 중심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I·반도체 산업의 수출·이익 성장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므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속 추진하되,

○ 바이오 · 방산 ·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동시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 국회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각에서 과도한 재산권 통제라는 지적도 있음.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관한 법체계·권한·기대효과 등에 관한 후보자 구상과 의견은?

□ 부동산감독원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불법행위에 한해 조사·수사를 수행하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재산권 통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농림부 등 각 부처가 소관 법률에 따라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전 부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 부동산감독원이 전세사기 등과 같이 어느 하나의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요·복합 사건을 소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국토부 등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관련 활동 경과 및 성과는?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향후 계획은?

□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12.3 불법계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협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25.11.21일 출범하여,

○ 징계요구 89명, 주의·경고 82명, 수사의뢰 110명 등 조사 결과를 발표('26.2.12)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헌법질서 회복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현 국무총리께서 감사·감찰 차원의 대대적 점검은 지난 TF 활동으로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임명된다면 그간의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15.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발생경위 및 개선방안은?

□ 6월 15일 합격자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6.15. 15시)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합격자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하고, 보안기능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 추가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전자 실명, 전화번호, 상세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례를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전면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1. 중기부 장관 재임 중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표적 업적과 성과 3가지씩

1 국가창업시대 창업 열풍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신청자는 6.3만여명을 기록했습니다.

○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최대이며,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동행축제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했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은 '25년 1,200억 달러, '26년 1분기 298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K-뷰티 수출은 21.8억 달러로 '26.1분기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동행축제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견인을 지원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50% 감축 등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제출 서류 연 566만장이 감소하여, 정책 고객 57만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시행 두 달 만에 총 10.7만 건을 발송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2. 국무총리 역할에 본인이 적임이라 생각하는 이유

□ 시대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국무총리 취임시 가장 먼저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3가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로 비롯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 내부 혁신 등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합리화 의지를 바탕으로 신산업 혁신과 지역 균형성장,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무총리→대통령 격상('26.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또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 경제 협·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규제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도 접수·해결해 나가겠습니다.

5. 직능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 발생시 해소 방안

□ 신산업 분야 혁신 서비스 출현 등으로 발생하는 기존 직능단체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 부처 간 이견,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적극 이끌어 나가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합리화 추진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며,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출범

6. 국무총리 취임시 가장 먼저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관련 현안 3가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주거비 부담, 취약청년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일자리 분야에서 경력직 채용 트렌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일경험 등 청년들의 첫경력을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하고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청년센터 등을 통해 취약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7.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 3가지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주거, 취약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경력직 채용 강화와 AI 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등 첫경력 지원, AI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둘째, 청년 주거문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늘리며,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 취약청년 문제입니다. 지역청년센터 등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국무총리 지명에 응한 이유와 총리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 지명에 응한 것은 AI 대전환 등 시대적 사명을 잘 완수하라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 것입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기업의 CEO와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직에 임할 계획입니다.

○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 우선, 행정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과감한 AI 혁신을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 또한,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총리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시절 혹은 총리 후보자 시절 AI를 활용하여 이루어 낸 성과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①제조 현장의 AI도입, ②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 특히 도입률이 낮은 ③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④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 발표 및 신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기부 AI 대책: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방안('25.11), 공공 AX 전환계획('26.4)

□ 장관 재임 이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AI 위주로 강화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26년 8천억).

구 분	과 제	'26.예산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2,113억원
창업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투·융자 자금 지원 및 인력 양성	3,938억원
지역	지역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원스톱 지원	1,809억원
정책전달	중기통합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활용 OpenData x AI 챌린지 기업 지원·재무 정보 기반 사업 추천 및 신청서 작성 보조	225억원

○ 또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제정안의 심의 및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대형 항공사간 합병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포-제주노선의 슬롯이 LCC로 이관되어 김포-제주노선의 실공급 좌석수가 감소하여 도민들의 이동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김포-제주노선의 실공급 좌석수를 전년대비 상향 혹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총리실의 대안

□ 제주도 항공 공급 부족 현상은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방지를 위한 LCC로의 슬롯 이전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한 일부 항공편 비운항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항공 공급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주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제주 항공 공급 안정화 조치 중인 내용
  - (국토부) 대한항공 등과 김포-제주 등 4개 노선 추가 증편 협의 및 비운항 최소화 요청 등 항공 공급 확보
  - (제주도) 도민 전용 좌석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방안 마련을 진행 중
  - (공정위) 대체 항공사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급 좌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분기별 이행점검 실시

11. 청년층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소득기준 상향 등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가 추세, 정부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5.6월)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6.4월)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30%→20%)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층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계획(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현행)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4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20만원, 24개월 지원

→ (개선) 기준 중위소득 80%(205만원), 100%(256만원) 등으로 완화 검토

12. 청년층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한도 상향 등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가 추세, 정부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5.6월)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6.4월)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30%→20%)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층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계획(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현행)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4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20만원, 24개월 지원

→ (개선) 기준 중위소득 80%(205만원), 100%(256만원) 등으로 완화 검토

13. 공공 분야 AI 활용을 위한 후보자의 복안

□ 정부는 AI 도입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전 부처가 활용 가능한 AI 공통기반(AI모델, GPU 등)을 구축하는 등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협업도구(메일·메신저·화상회의 등 네이버웍스, 삼성 브리티웍스), AI Chat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를 4개 부처*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안부, 과기부, 식약처, 예산처

○ 공공부문 AI 활용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현재 정책을 더욱 가속화 하면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은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리가 된다면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AI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이번 사태는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부는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신속하고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6. 공동중개 배제와 매물정보 독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는 시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아울러 이 문제가 정부의 '부동산카르텔 근절'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는지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

□ 일부 중개사의 '카르텔 담합'은 시세교란, 매물 독·과점, 신규 중개사의 진입장벽 형성 등 공정한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난 5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과제로 선정·근절되도록 노력 중으로 알고 있으며,

○ 앞으로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려 '카르텔 담합'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비공식 관계망을 통한 배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

□ 현장에서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사실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현재 국회에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 이 법안이 소비자보호와 시장정상화의 관점에서 충실히 논의될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뒷받침하실 의향이 있는지?

□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중개사 개인도 부당하게 특정 의뢰인 또는 중개사 배척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년 2월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 공동중개 배제 문제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 총리실이 관계부처간 협업을 조정하여 실태파악, 신고·조사절차 정비,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동중개 배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업 조정, 종합적 개선방안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 부동산중개 시장에서도 기존업계와 혁신서비스가 소비자편익과 거래 안전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정책 추진의지 여부.

□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기존 중개업계의 축적된 고유 영역과 신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1.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무총리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아울러 후보자가 구상하는 책임 총리의 의미와 총리로 취임한다면 최우선 확립할 국정운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는가?

□ 국무총리는 대통령께 여러 부처 등의 의견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고

○ 정부 전체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국가의 주인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 헌법과 법률이 국무총리 직위에 부여한 지위와 권한에 따라 맡은바 소임을 책임감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 후보자는 민간 IT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본인의 민간·공공 경험이 국무총리직 수행에어떤 강점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보는가?

□ 민간 기업에서 쌓은 전문성과 혁신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활용하여 국정 전반을 조정·통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 재임중 추진한 정책 가운데, 이어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총리로 임명된다면,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께서 다져 주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넓고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4. 후보자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조치였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5.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5.18 민주화운동은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저항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 후보자는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소신 또는 의견이 있는가?

□ 총리 후보자로서 개헌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 123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이며,

○ 해당 과제의 내용에는 대통령의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여야 논의 등을 통해 국회 중심으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총리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서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민생, 산업전환, 지역균형발전, 재난안전 등 주요 국정현안은 여러 부처와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한다면 대통령실·관계 부처·지자체·국회간 이견이 발생할 때 어떤 원칙과 절차를 통해 이를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총리실 차원에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자의 시각차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8.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과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함.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처별 이행점검, 성과평가, 책임부여, 공직윤리 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 각 기관이 경제, 민생,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 업무에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기관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여건을 지속 보강하면서,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여 부정부패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확인된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민생정책은 발표보다 성과가 중요함. 후보자가 총리실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민생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

□ 물가, 가계부채, 주거 등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민생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예시 : △물가(소비자물가상승률) △가계부채(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주거(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량) 등

○ 성과지표는 투입·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특히 민생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셔야만 비로소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며 각 부처가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 후보자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총리로 취임한다면, 취임 후 6개월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세 가지는 무엇인가?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중동전쟁 이후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정부의 디지털 혁신은 국민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수 있어야 함. 후보자가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 세 가지를 제시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이를 위한 규제개선, 부처간 협업, 성과점검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로 ▲제출서류 간소화 ▲선제적 맞춤형서비스 ▲국민·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공개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맞춤형서비스는 복지 수요가 있는 대상자분들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알리고 제공합니다.

○ 국민·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공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원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 26년도 全 금융권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 보다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

○ 투기적 대출수요는 억제하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후보자가 생각하는 주요 세제개편 방향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의미하는 바와 과세 표준 구간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부의 세제 개편은 성장 지원,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의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물가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ㅇ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조세 형평성 및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4.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채무 감축,미래 산업 투자, 복지지출 확대 중 어떤 방향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가?

□ 향후 불확실한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를 단기에 소진하기보다는, 미래산업과 미래세대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초과세수 활용방안은 추후 초과세수 확정규모,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5.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특히 재계의 경영권 방어논리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국무총리로서 어떤 타협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 상법 개정에 따라 확립된 기업 지배구조 개혁 정신을 자본시장에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주주 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경영권 방어와 주주보호가 반드시 대립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 창업가 정신의 유지 등 기업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16. 사법기관이나 조세당국 등 국가기관에서 적법 또는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무리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남용방지가 화두인 가운데, 금융관련 사법·행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개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현재 제재, 인허가 등 금융행정과 감독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알고 있으며, 국무총리 취임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17. 중기부장관 재직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무엇이며, 총리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관심을 이어갈 예정인가?

□ 중기부 장관 재직 당시, 중소·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 ▲(K-뷰티) 복지부, 식약처 ▲(기후테크) 기후부 ▲(제약·바이오) 복지부, 식약처 ▲(방산) 국방부, 방사청 등

○ 이를 통해 K뷰티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챌린지 방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가?

□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모태펀드 등 정책 펀드를 통하여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투자 자금 유입·회수 등의 제도적 걸림돌 개선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19.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총리로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착수할 범정부 AI 과제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에 있어서 AI 대전환은 인구 구조 변화 등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산업 전반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 지난 1년여간 국가 AI 정책적 기반이 잘 정비된 만큼,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 산업 부문 등 전방위 AI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 AI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 전력, 데이터, 인재양성, 규제혁신, 공공부문활용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는 무엇이며, 총리실 차원에서 어떻게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보는 가?

□ 작년 한해, AI 고속도로 구축, AI 독자모델 개발 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를 전분야에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① 먼저,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스마트 제조까지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② 국민 일상 생활에서는 행정·공공 부문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③ 또한, AI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I 정책과 관련하여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21. AI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모두 중요한 요소임. 후보자는 데이터활용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데이터 역량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AI 대전환시대의 데이터는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고품질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국가안보 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 AI기술 발전으로 산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 충격과빈부격차 확대 우려도 큰 상황인데, AI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가?

□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AI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해 AI가 일자리와 빈부 격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근로자들의 AI 활용 역량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AI 시대에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경험을 쌓으며 일터에 진입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강화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 국민연금 실제 납부 기간(평균19.3년)이 짧아 노후 빈곤 우려가 큰 가운데,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로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이분법 구조는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음. IT 플랫폼 대표를 지낸 전문가로서, 전통적 고용 관계를 벗어난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춰 노사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미래형 국민연금 징수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국민연금의 보험료 분담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국회 연금특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비롯하여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 후보자는 국내 최고수준의 IT 플랫폼 대표를 지낸 혁신 전문성과 중기부 장관을 지내며 겪은 소상공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플랫폼의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 등을 덜어줄 수 있는 후보자만의 플랫폼-소상공인 상생원칙과 복안이 있는가?

□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은 성장 파트너로써,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상생협력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사를 대상으로 입점 사업자와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고,

○ 수수료 및 정산기한 등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온라인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5. 후보자는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기업과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망사용료, 각종 규제 미준수, 고용과 투자, 광고시장 교란 등에 대하여 국내기업이 받는 역차별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내 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조세, 망사용료 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해당 이슈가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6. IT 기술발전, AI기술 발전의 명암중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AI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하여 IT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우리사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플랫폼 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 특히,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려서 국민혼란을 부추기는 행위가 심화하고 있는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공적 기능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각 소관 부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 저출생 문제는 출산장려를 넘어 주거, 일자리, 돌봄, 교육부담을 함께 줄이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를 어떤 범정부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총리실이 직접 점검할 핵심과제 세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가?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범부처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26.6.9. 공포, '26.9.10. 시행)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인구전략위원회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 특히, ①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②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③지자체 협력 등을 통한 돌봄·양육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 청년세대는 취업, 주거, 자산형성, 결혼과 출산 등 생애 전반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우선 추진할 정책과제 세가지는 무엇이고, 각 과제가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하여 첫째, AI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둘째,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들 과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무주택 가구의 연령별 가구수 및 비중을 알고 있는가?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중심 특별공급등 주거정책으로 인해 중·장년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세대별 주거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정할 것인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현 제도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국가데이터처의 '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무주택 가구는 961만 가구,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30대 199.7만(20.8%), 50대 170.9만(17.8%), 30세 미만 161.5만(16.8%)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청약제도는 한정된 주택 자원을 다양한 세대·계층, 정책적 고려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약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감소되도록 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과 간병부담이 커지고있음. 후보자는 고령자 돌봄, 가족간병부담 완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가장우선해 점검할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지자체별 역량과 여건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피고, 예산·인력·인프라 기반을 갖춰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32. 성별·세대간 갈등이 심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총리로서 정부가 취해야할 대응 기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산업계 구인난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단순 노동인력을 넘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임기 내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아울러 이를 위한 범정부 전담기구(가칭 이민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 현재 법무부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리에 취임한다면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응급·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우려가 큼.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의료체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점검하고 조정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울러 국민불안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27)와 공공의전원 도입('30),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5. 서이초 사건 이후 보완 입법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총리로 취임한다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실을 복원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아울러 당장 보완해야 할 범정부적 법·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6. 사교육비 폭증과 의대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울러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사교육비 증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안에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대 쏠림은 우수 인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과학기술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7. 유보통합은 여전히 통합기관 모델, 재정, 교원 양성 체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육·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정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울러 총리 취임시 다부처 갈등과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여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로 취임한다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누구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38. 후보자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이를 위해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할 범정부 추진체계와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을 추진 중이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 체계를 통해 관계부처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총리실은 핵심과제 추진 총괄, 관계부처·지방정부 간 연계와 조정 등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기업투자 촉진,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실질적인 균형성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39. 지방소멸 핵심 원인중 하나로 지역 청년 유출과 지방대 위축이 지적됨. 후보자는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산업, 정주여건 등에 관한 정책을 총리실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역 청년 유출과 지방대 위축은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과 기업투자 위축, 정주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실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브랜드 단과대 유치·지원 등 지역대학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0.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음.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핵심과제인 광역행정통합의 첫 사례입니다.

○ 이의 성공여부는 우리 정부의 지역혁신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우선, 정부는 7.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한치의 혼선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 중앙과 지방이 공동 참여하여 중요 사항을 논의하게 될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 향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 행정 및 재정지원, 권한 이양 등 중요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때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1. 광주 서부권 미래산업 육성과 새롭게 출범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생활권 형성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임. 특히 광주 신산업선은 AI모빌리티산업·교통·관광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에 핵심 인프라가 될 사업인데, 후보자는 광주 신산업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주 신산업선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토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42.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십년간 광주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왔고, 최근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후보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이행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간 협력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 이재명정부 공약 중 하나가 광주광역시를 AI 산업 선도 도시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임.그러나 지난 정부에서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미온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현장에서는 불신도 상존하는 상황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5극 3특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해남), AX실증밸리조성(6,000억원) 등 관련 AI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44. 후보자는 전력그룹사(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의 사명에 포함된 방위(方位)와 실제 본사 또는 주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울러 발전부문에서 경쟁효과 자체가 없다는 점은 물론 규모의 경제마저 잃었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각각 수소, 해상풍력, 해외사업 등 막대한 중복투자, 행정력낭비,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나아가 발전공기업 통합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현재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최종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5. 글로벌 RE100 압박을 우리 기업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업현장의 요구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우선, 기업들의 전력직접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글로벌 RE100 요구 기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확대하는 Green 공간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마트그린산단, RE100산단 등

□ 셋째, 재생에너지 집적지에 새로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세제·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특히 특정 기업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형태와 주요 기능으로는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상습적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산재예방의 핵심조직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부서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7.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행 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국지성 호우와 극심한 폭염 등 그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기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 극한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재난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재난정보 전파 수단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께 빠르게 재난 상황을 알리는 한편, 대피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 또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후보자가 찬성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피의자가 과잉수사를 하소연하거나, 피해자가 부실수사를 하소연 하는 경우 최소한의 확인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께서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과잉 또는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고려한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9. 후보자는 해방후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 헌정질서파괴 범죄자가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해야한다고 보는가? 아울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 헌법적 가치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 재산 등은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총리에 취임한다면 친일재산 등이 은닉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적·조사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미·중 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의 심화, 글로벌 관세 장벽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후보자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어떤 '대한민국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한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미·중 패권 경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합니다.

□ 정부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서 주요국과의 통상·외교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하면서 정부내 협의체 운영 등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1. 국군 인력 부족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비전투분야 임무에 대한 민간 아웃소싱 확대, 첨단·무인화전력강화, 복무여건 개선,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 예비전력 개편방향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무인화 전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언급하신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1.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를 지명하신 이유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인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국무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로 비롯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취임 시 우선 해결할 과제에 대해 예를 들어본다면,

○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행정 내부 혁신 등에 힘쓰고,

○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회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요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장관 및 부처가 국회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총리로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국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인 만큼,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교권보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권보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의 모습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학교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후보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안전망이 잘 정착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7. 서이초 사건 이후 다수의 교권 보호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교권보호대책에 있어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국무총리가 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겠습니까?

8. 국가가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가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교사·학부모·교육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현행 대책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10. 정서적 아동학대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 점을 악용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 정서적 아동학대의 적용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아동을 학대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논의하겠습니다.

1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악의적 허위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12.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법무·경찰·지자체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무총리로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과제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부 뿐 아니라 복지·법무·경찰·지자체 등 여러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원들이 사법·행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13.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은 교원의 정당가입 또는 정치 활동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 교원 역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후보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상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가지는 ‘교원 개인의 기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교원이 시민으로서 사회 현안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경험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해당 과제를 어떤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하겠습니까?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상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가지는 ‘교원 개인의 기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18. 교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19. 교원의 정당 및 정치인 후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0. 교원의 출마 휴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 허용 범위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의 긴밀히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22.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육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중앙선관위·각 시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관련 부처 간 조정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 △학생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 반도체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반도체·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반도체·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과 함께,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초·중등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기본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을 통해 AI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AI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융합·실무형 인재 등 다층적 인재가 조기에 양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직업교육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반도체·AI 실무 인재를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직자·성인 학습자 등 국민 누구나 본인이 필요한 수준의 AI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 AI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육성뿐 아니라 인문학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AI 대전환 시대일수록 질문하는 힘, 창의력, 상상력,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기본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초·중등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 분야 연구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 이공계와 인문계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공계와 인문계 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AI·첨단기술 등 미래산업 수요와 국가 발전 전략을 고려한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함께,

○ 초·중등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 분야 연구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26. 후보자는 공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 학교 내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7.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과 소득격차가 교육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미래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교육격차가 장기적으로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28. 후보자가 생각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공교육이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역량과 열정이 있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에 발맞춰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9. 사회부총리직 폐지에 따라 사회정책 총괄과 관련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 보건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사회분야 주요정책 방향 논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와 국정회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점검 및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30.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진행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응급의료체계 혁신, 마약류 대응, 생명지킴 등 범부처 복합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부처협의체를 통해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예방, 수사단속, 재활치료 등 전분야에 걸친 정책을 논의·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하여 자살시도자·유족 지원, 전담인력·인프라 확대 등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주요한 사회정책에 대해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31.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관련 현재까지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은?

□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관련 현재까지 성과

○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단순 논의기구를 넘어 시민사회·정당·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 ▲방송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개헌·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 등을 공론화하고 정책의제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 구제와 공공중심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 주요 성과 내용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 대안 제시

* 강원 양구 브로커 파동 등 중간착취·인신매매성 인권침해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제안

○ 대형산불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기여

* 산림청 정책협의 및 숙의토론 2회 개최, 숲가꾸기 정책 전환, 임도신설 중단 합의

* 산림사업과 산불 확산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제3기관 참여 민관합동 조사 합의

○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과 3개월 간 논의 후 구성 합의, 오는 6월 말 실무TF 구성 예정

□ 향후 운영계획

○ 긴급실행과제, 중점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처·시민사회·전문가와 지속 협의하여,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보고대회 정기개최를 통해 활동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32.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국무총리 차원에서 향후 돌봄재정 확대와 시스템 개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통합돌봄이 국민 생활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재정 기반과 운영 시스템 모두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 복지부 중심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대상 확대와 제공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어디에 살든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개선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33. 최근 청소년의 SNS 과이용·과의존이 중독, 우울, 불안,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등 정신건강문제와 연관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청소년 SNS 과이용·과의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청소년 SNS 이용에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과이용·과의존과 같은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SNS 과이용 ·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3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플랫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알고리즘, 알림, 추천서비스 등 플랫폼설계가 어떠한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제시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가?

□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과의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이 스스로 사회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원칙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가입연령 제한 또는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 사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보호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 후보자는 이 두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당사자인 청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부터 접근한다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균형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7. 청소년들에게 유해콘텐츠와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순 규제 외에 필요한 정책 수단이 있다면?

□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를 분별하는 역량을 높이고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단순 규제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다양항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 SNS 알고리즘이 혐오표현, 극단주의 콘텐츠, 자해·자살 관련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알고리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SNS 중독성을 일으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후,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39. 최근 일부국가에서는 SNS의 중독성 설계(addictivedesign)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알고리즘·알림·추천서비스 등 플랫폼 설계 방향은?

□ 플랫폼 기업 스스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AI전환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일자리감소, 직무재편, 사회적 격차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 후보자께서는 AI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큰 기회와 위험을 각각 무엇이라고 보는지?

□ AI 전환은 생산성 향상과 AI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 AI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AI 활용능력 격차 등 부정적 전망도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적시에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후보자께서는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직무 재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정부는 모든 국민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AI 시대에도 필요할 좋은 일자리를 지역과 청년에게 제공하며,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AI가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직무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등을 지원하고,

○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AI 시대에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뉴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일경험을 쌓도록 하고, 창업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I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구축과 신산업 고용활성화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도 세심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2. AI 활용 역량은 청년 취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것임. 그러나 교육·소득·지역에 따라 AI 교육 접근성이 달라질 경우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 후보자께서는 AI 역량 격차가 새로운 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AI 활용 역량이 청년 취업의 중요 경쟁력인 만큼,

○ 교육과 소득 수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충분한 AI 교육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년간 청년 200만명에게 AI 교육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K-뉴딜아카데미 : 대기업이 직접 AI 등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26년 신규, 1만명)

□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 청년이 AI를 통해 역량을 쌓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43. AI는 단순·반복 업무뿐 아니라 사무직, 콘텐츠, 개발, 상담, 행정지원 등 청년층이 주로 첫 일자리로 진입하던 직무에서 빠른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후보자께서는 AI 전환이 청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 AI 전환이 노동시장 입직단계에 있는 신입·저숙련의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 우려와 함께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가 병존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뉴딜아카데미 등 AI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5년간 청년 200만명에게 AI 교육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K-뉴딜아카데미 : 대기업이 직접 AI 등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26년 신규, 1만명)

○ AI 대전환이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신산업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고용노동부) 6월말 발표 추진

44. 청년 실업 문제는 경기 요인 뿐 아니라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AI 자동화·외주화를 선호하는 구조변화와도 관련이 있음. 후보자께서는 AI시대에 청년의 '첫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최근의 청년 고용상황 악화는 경기적 요인, 경력직 채용 관행 등과 AI·자동화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함께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월), 「청년뉴딜 추진방안*」('26.4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뉴딜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쉬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3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1만명) 등

□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0만명 청년에게 일경험, 역량개발 기회 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 신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혁신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들의 첫 경력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 AI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높일수는 있지만, 그 이익이 청년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될 수 있음. 후보자께서는 AI 생산성 향상과 청년 고용 창출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중소·중견, 스타트업 등의 AI 생산성 향상, 디지털전환과 청년 고용 창출을 연결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전문인력 확보,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AI 전문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육성된 전문인력을 디지털전환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중기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 등 AI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 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여전히 단기 일경험, 인턴, 보조금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후보자께서는 AI시대에 맞는 청년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보는가?

□ AI 전환 등 산업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청년 고용정책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우선, 원하는 청년 누구나 충분히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AI 활용 역량이 취업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AI 훈련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품질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직업훈련에만 머물지 않고, 일경험·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일자리 간 격차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7. AI규제가 과도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안전규들도 있음. 후보자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는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되,

○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이 꼭 필요한 규제는 관련 협·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 고도화된 AI모델은 국가안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AI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미국정부의 앤트로픽社 미토스 최신모델 수출통제 사례에서 보듯이, 고도화된 AI 모델은 실질적으로 이미 국가안보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과기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9-1. 독감은 매년 큰 사회적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 검사, 치료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독감대응을 단순한 계절성 질환 관리가 아니라, 예방접종 지원확대와 고위험군 보호를 함께 포함하는 국가보장체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독감은 고령층·영유아 등 고위험군에게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 독감을 포함한 감염병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위험군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2 독감백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포함한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49-3 고위험군에 대해서 독감 검사와 치료의 공적 보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49-4 예방접종과 검사·치료를 포괄하는 독감 대응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독감은 계절성을 띄는 감염병으로, 국민의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예방접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 총리가 된다면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부처와 논의해 가장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50-1.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명칭, 분류, 설명 방식이 달라 환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음. 비급여 문제를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진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측 가능한 비용 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50-2. 환자가 비급여 진료 여부와 비용,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사전 설명 의무를 법률상 보다 명확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50-3.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과 분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50-4.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와 비급여 관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51-1. 발달지연 아동은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늦어질 수록 이후 치료·교육·돌봄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음. 후보자께서는 발달지연 문제를 개별 가정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조기개입을 통해 장애 이행과 장기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 정책 과제로 보십니까?

51-2. 발달지연 아동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51-3. 선별검사·정밀평가·초기 집중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51-4. 취학 전 조기개입을 강화해 치료 종료를 앞당기고 이후에는 교육·적응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51-5. 발달지연 치료가 현재 비급여·사회서비스·민간보험에 분절되어 있는 구조를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51-6. 이를 위한 급여 확대 및 공적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확대 및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무총리가 된다면 검사, 재활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52-1. 국내 유치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이거나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제기구는 총 몇 개이고 어디인지?

□ 지난 5월 21일, 9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허브 설립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성명에 참여한 9개 기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입니다.

52-2. 2027년 필요 예산액과 예산 반영을 위한 추가 절차는 어떤 것인지?

□ 글로벌 AI 허브 설립·운영을 위해 간사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필요한 예산을 논의 중이며,

○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3. 후보자는 취임 이후 '글로벌 AI 허브' 관련 예산 반영과 최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글로벌 AI허브가 차질없이 구축·운영되도록 관련 예산 뿐만아니라,

○ 국제기구와의 협력과제 발굴 등 글로벌 AI허브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위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임중 중소기업 수출을 역대 최대실적으로 이끈 핵심정책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미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화장품·온라인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미국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25.9.3)」을 마련하여 자금·컨설팅 등 관세 피해·애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25.11.13)」,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25.11.27)」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K-뷰티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미국의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 악화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어떻게 방어하고 확대할 것인지, 총리로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는 기초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경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미 관세정책 변화, 지정학적 충돌 등 글로벌 현안을 적기에 대응함에 더하여,

○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K-뷰티, 푸드 등 중소기업 소비재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3.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이후 실제 피해구제 실적은 어떠한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28. 2월부터 시행예정*으로, 현재까지 적용된 피해구제 사례는 없습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2.19) → 시행(‘28.2.20)

○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풀 구성 등을 준비 중이며,

○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관련 소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부처 단위를 넘어 국정 전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폐업지원, 채무조정, 재취업·재창업 지원 간 긴밀한 연결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대기업·플랫폼과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도 집중함으로써 AI·디지털 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1기 선정자의 실제 창업전환률과 후속투자 유치등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현재 1차 심사만을 마친 단계로, 추가적인 오디션을 거쳐 창업과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후속 투자유치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국정차원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중기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청년이 도전과 실패, 재도전을 통해 '혁신 인재'로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 청년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을 진행 중이며,

* (모두의 창업 1기) 접수6.3만명 중 청년층 68%, 1라운드 선발5천명 중 청년층 68.4%

○ 실패한 청년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하였고('25.12월), 재도전 지원사업 청년 전용 트랙 또한 운영 중입니다.

* (재도전 응원본부) 재도전 정책 발굴·지원, 인식개선 등 총괄하는 민관 협력체
** (재도전 전용트랙)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40%를 청년 재창업자로 선정

□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인프라 등의 창업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실패 콘서트, 재도전의 날, 예비 재창업자 대상 전용 사업 신설,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30년)

7. AI 시대의 성장 동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총리로서 어떤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AI 시대의 성장동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균형발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첫째, 거점대학 중심 AI 인재양성과 지역 내 창업·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 둘째,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인프라 확충, 지역 주력 산업의 AX 확산, 제조 AX 연계 등을 통해 지역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과기부·교육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AI 성장동력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챙기겠습니다.

8.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해 주 십시오.

□ AI 시대에는 AI·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혜택이 달라지는 등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AI·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인재 양성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들이 우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AI 중심대학으로 전환 등 관련정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9.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를 국정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달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국정 최우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주의 개선 등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삶의 현장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및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 경제성장의 성과가 취약계층에게도 돌아가게 하는 포용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과감한 규제 혁신과 반도체·AI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 성장의 혜택이 서민·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세·재정·금융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11. 단일부처(중기부) 운영경험을 넘어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통합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공공과 민간은 언어와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고 균형점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가 된다면, 민간 기업에서 쌓은 전문성과 혁신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활용하여 국정 전반을 조정·통합해 나가겠습니다.

12. 부처간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이를 조정하는 후보자의 원칙과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각자의 시각차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3.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리가 된다면, 이를 위해 여야 및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모든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14.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현안에 대해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보자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일수록 이해관계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생안을 모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운 만큼,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기본적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 몰라서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이미 일부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처분과정,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부장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다주택 해소에 노력해 왔는데

○ '06.10.25. 취득 후 약 20년 간 거주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6.5월 매도 완료 했으며

○ '22.4월 분양받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은 6.12. 매도 계약(잔금일 6.23.)을 체결했고

○ '09년 경 가족별장 및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양평군 주택은 '26.6.16. 매도 계약(잔금 6.22. 입금완료)하였습니다.

□ 이번에 부동산들을 정리하면서 20년 간 거주했던 잠실 아파트 시세차익이 약 30억원 이었지만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11억5천만원 가량 나온데다, 역삼 오피스텔(15억원에 매도, 6억원 손해)과 양평 주택(5억원에 매도, 3억원 손해)을 저렴하게 매각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은 10억원 가량인데

○ 이득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절반인 5억원을 6.16. 국제 NGO 단체(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기부하였습니다.

17. 후보자는 최근 보유자산 정리과정에서 상당한 손실까지 감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한 현황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부동산들을 정리하면서 20년 간 거주했던 잠실 아파트 시세차익이 약 30억원 이었지만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11억5천만원 가량 나온데다, 역삼 오피스텔(15억원에 매도, 6억원 손해)과 양평 주택(5억원에 매도, 3억원 손해)을 저렴하게 매각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은 10억원 가량인데

○ 공직자로서 이득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절반인 5억원을 6.16. 국제 NGO 단체(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기부하였습니다.

18.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 관계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와 임대료 지급현황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계와 임대료 지급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	계약 관계 및 임대료 지급 현황
1	삼청동	35-185 주택 지하1~3층	▶여동생 한명숙에게 지하1층~1층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30만원)
		35-184 근린생활시설 1~2층	▶남동생 한진수에게 임대(보증금 無, 월세 20만원)
2	연건동	268 근린생활시설 1~2층	▶남동생 한진수에게 268 1~2층 및 269 1~3층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0만원)
		269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3층	▶제3자에게 지하1층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

19. 후보자는 대기업 경영자로서 조직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이를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재직 당시,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업자·창작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접점을 찾아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청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20.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이 정부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남은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다면,

○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21. 국무위원으로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장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며, 그러한 점이 후보자의 국무위원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은 저에게 책임 있게 결단하고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게 했고,

ㅇ 김민석 총리의 소통과 조정 능력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교훈은 제 국무위원 활동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22.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국무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후보자 본인은 어떤 면에서 그 자질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과 함께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성장,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야하는바,

○ 민간 기업에서 쌓은 전문성과 혁신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활용하여 국정 전반을 조정·통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중동발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유가와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미-이란간 종전 후속 협상이 진행 중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고유가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에 만전으로 기하는 한편,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지원을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 또한 반도체·AI 등 신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항의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과 지역선관위원장은 판사 등 법조인이 맡아온 관행이 있어 왔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조적인 선관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번 사태는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 재발방지를 위해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대 일부는 시설 출입자를 상대로 소지품을 강제 수색하고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사적검문과 불법행위를 이어가며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점거를 일삼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나,

○ 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현재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없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등 끝까지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습니까? 또한 내란 동조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조치였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며,

○ '계몽령'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7.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은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의 체포를 가로 막았습니다.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의 계엄동조 행위등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헌법상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향후 사법부의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해 괴롭혔다'고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밝히며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각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감안해,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총리실에 자살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살 문제 해결에 부단히 힘써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하고 부처별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서, 월별 자살자 수가 6개월 연속 소폭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작년 하반기 이후 전체 자살사망자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 자살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으며,

○ 앞으로도 청소년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소년 자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 이재명정부는 국가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득, 돌봄, 교육, 보건·의료, 복지, AI등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기본요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시장의 이윤보다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본사회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본생애소득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 복지,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총리가 된다면 적극 챙겨보겠습니다.